

#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재정 및 조세 전략과 충남의 과제

정성훈 · 김수현 · 강선아



## < 요약 본 >

### I. 한국의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 1. 한국경제의 현 상황

- ① 국가주도 경제개발을 뒷받침해온 조세·재정
  - o 불공평한 조세부담 - 재벌 대기업은 각종 세제상 특혜
  - o 재정지출의 불균형 - 경제 사업에 과잉투자, 사회분야에 과소투자
  - o 낮은 조세부담률
- ② 저성장 시대의 도래
  - o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진행
  - o 개방화, 소득분배구조 악화로 인한 양극화 심화
- ③ 국가부채 확대
  - o IMF 이후 공적자금을 통한 금융위기 극복
  - o 경기부양을 위해 감행한 토목공사로 인한 국가부채의 확대와 재정건전성 악화
- ④ 지방분권화
  - o 중앙과 지방 세입구조는 8:2, 지출구조는 4:6
  - o 지역 불균형 심화 및 지자체별 낮은 재정자립도
  - o 취득·등록세의 큰 세수 비중

## 2. 한국의 조세·재정 시스템의 문제

### ① 한국은 저복지 저부담 국가

- o 과거 25년간 실질 GDP 증가율 세계 4위(중국, 아일랜드, 인도 순서) 최빈곤 국가에서 중고소득 국가로 도약하였음
- o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높아져 끊임없이 선진국형 복지를 요구하고 있음
- o 하지만 재정지출규모에 비해 복지 및 조세부담률은 저복지 저부담에 속하고 있음
- o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다양한 복지제도 공약 및 시행으로 복지재원의 부족 문제가 발생
- o 현 상황에서는 작은 복지예산으로 인해 증세 없는 복지는 힘들 것으로 예상됨

[조세부담]

초고부담 (40%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고부담 (평균이상 30%대) OECD평균 (34.2%)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델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체코 영국	아이슬란드
중부담 (평균이하 30%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저부담 (20%대)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한국 터키, 칠레 멕시코	일본 미국		아일랜드
<div> <div>매우작은정부 (30%대)</div> <div>작은정부 (평균이하 40%대)</div> <div>OECD 평균 (43.6%)</div> <div>큰정부 (평균이상 40%대)</div> <div>매우큰정부 (50%대)</div> </div> <div>[재정규모]</div>				

〈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 간 관계〉

[공공사회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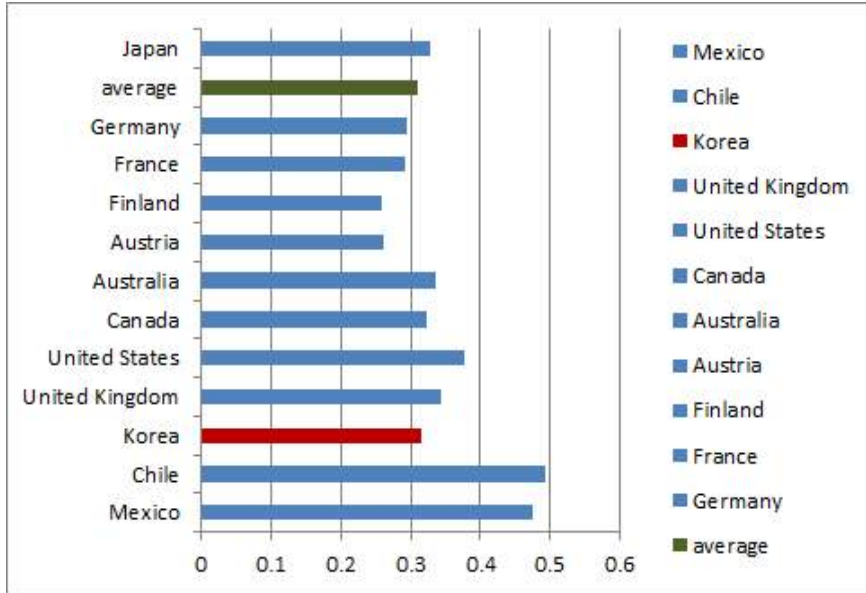
초고복지 (25-30%)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고복지 (20-24%)		룩셈부르크	헝가리, 포르투갈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폴란드, 영국 네덜란드, 스페인	그리스
OECD 평균 (19.5%)				
중복지 (15-20%)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	체코 이스라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저복지 (15% 미만)	터키 한국 멕시코	에스토니아		
<div> <div>매우작은정부 (30%대)</div> <div>작은정부 (평균이하 40%대)</div> <div>OECD 평균 (43.6%)</div> <div>큰정부 (평균이상 40%대)</div> <div>매우큰정부 (50%대)</div> <div>[재정규모]</div> </div>				

〈재정지출규모와 복지지출 간 관계〉<sup>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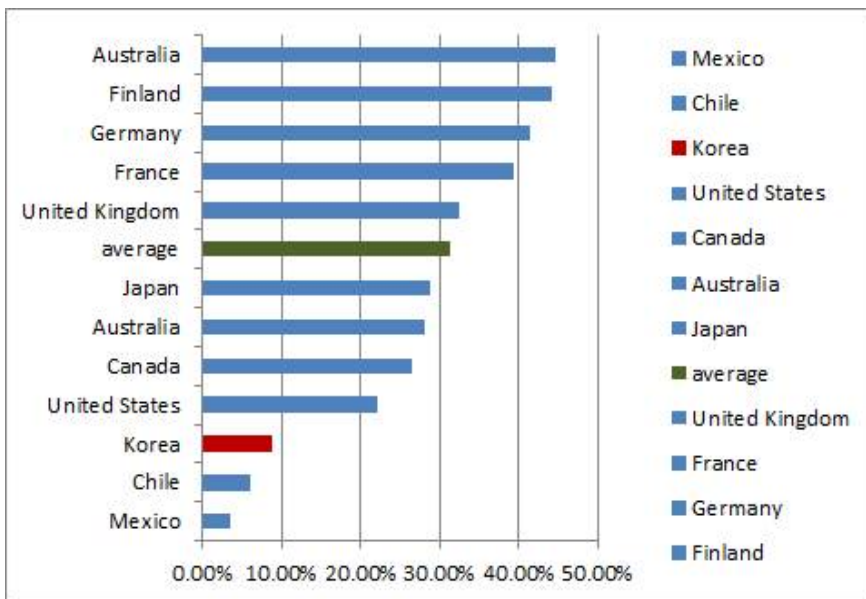
② 조세·재정의 낮은 역할수행도

- 정부의 세전 지니계수의 경우 OECD 평균과 거의 흡사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음
-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세전대비 세후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에 크게 밀리는 수준
- 국민들은 양극화 현상의 심화수준을 느끼고 있음
- 지니계수를 참고 했을 때 한국의 조세는 조세의 주요 역할인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잘 하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짐

1) 윤영진(2013) pp.12. 인용



〈OECD주요국의 지니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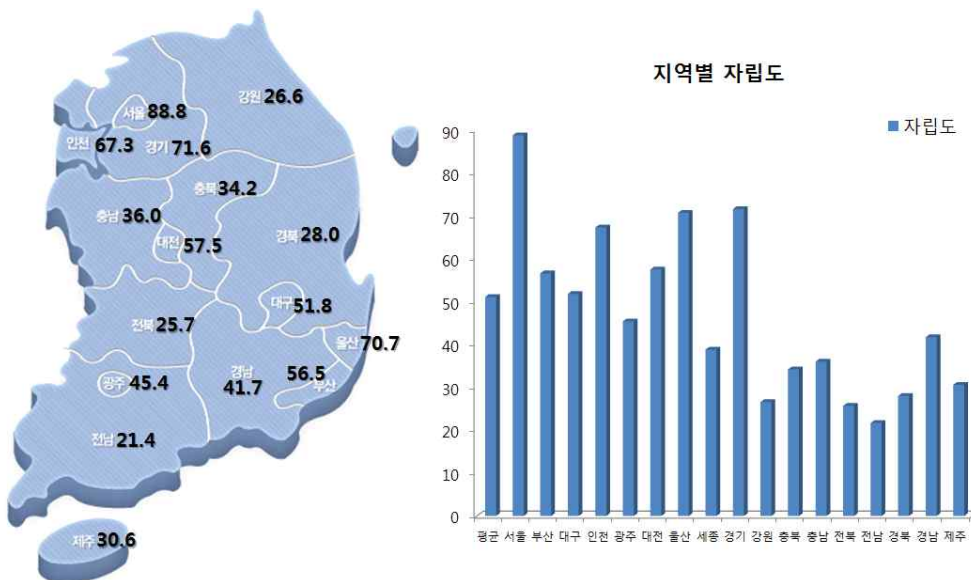


〈OECD주요국의 세후 지니계수 변화율><sup>2)</sup>

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 참고, 2010 OECD Statistics 참고

### ③ 지방분권화의 문제

- o 노무현 정부 이후 지속적으로 분권화를 하고 있으나 지방 재정의 자립도가 낮은 곳이 존재
- o 성장 위주의 전략에서 균형발전의 정책이 필요하나 지자체들의 빈익빈 부익부의 추세는 아래 그림에 잘 나타나고 있음
- o 지방정부들이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지하다 보니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21.8%를 차지하고 의존재원이 41.8%로 의존도가 높은 모습을 보임



〈지역별 자립도〉

### ④ 부동산 관련 조세와 전·월세 대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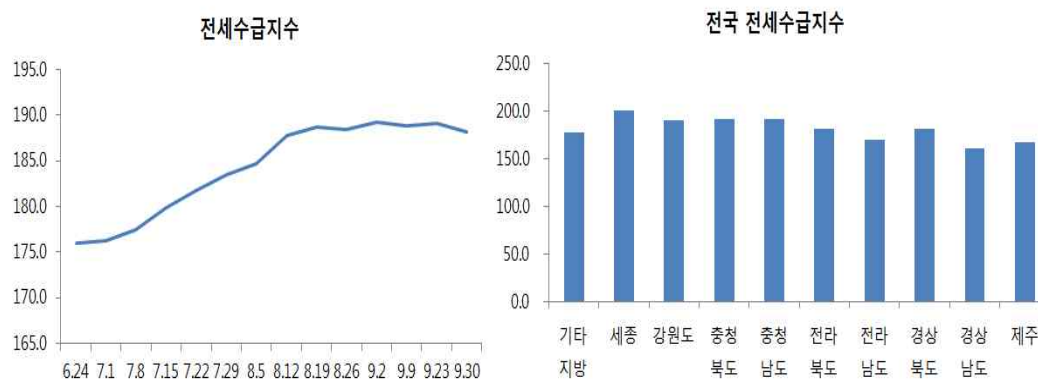
- o 현재 정부의 취득세 감면 정책은 부동산의 거래 활성화를 꾀했으나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가 잘 되지 않음<sup>3)</sup>

3) 임상수(2013)에서는 취득세의 감면이 지방재정을 악화시키고 거래의 활성화에도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밝히고

-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경우 세입자의 입장만 고려한 현실과 동떨어진 법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가 되고 있음
- 전세 값이 13개월 연속 상승세에 정부의 법안 효력이 제대로 발휘가 되지 않아 정부 법안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 됨

구분	〈진보〉……………스펙트럼……………〈보수〉	비고
부동산 관련 법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시장원리) 분양가상한제 완화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30% 추가폐지	
	전월세 인상폭 5%제한 뉴타운 매물비용위해 건설사 법인세 감면 (정부의 개입)	

〈부동산 관련 법안 스펙트럼〉



〈전세 수급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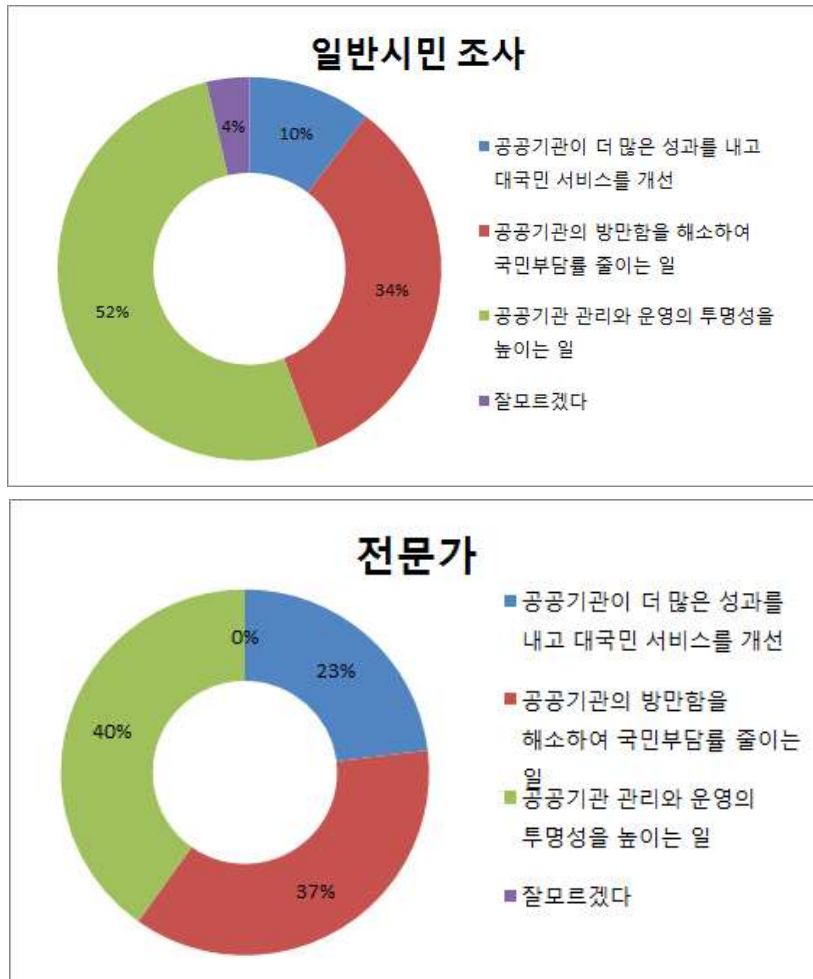
## ⑤ 늘어나는 국가 부채

- 일반 시민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52%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에 대해 대답하고, 34%가 방만함에 대해 지적을 하였음

있다.



- 국가부채는 2012년 902조 원으로 GDP대비 70.9%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부채는 국가채무의 약 2배가량을 차지하고 있음
- 국가부채 및 공기업부채에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가 되었으며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문제는 국가의 신용도와 국민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사료됨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에 대한 시민 조사〉<sup>4)</sup>

➡ 현 조세·재정 제도는 문제를 안고 있다. 조세와 재정을 만족시키는 방법은?

4) 한국조세연구원(2013)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참고

## 〈역대정부의 조세, 재정전략〉

### ① 박정희~노태우: 경제사회개발 뒷받침

#### 1) 산업화 초기 세제개혁

- 1961 조세와 세무행정 개혁: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탄력성 있는 세제, 국민경제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저축과 투자촉진 세제
- 1966 국세청 신설

#### 2) 한국형 저소득세-저조세부담 체제 형성

- 1971 세제개편: 고도성장기 일본이 취한 자본축적지원세제로 전환, 감세 공식화
- 1976 부가가치세제 도입: 필요자원을 직접세가 아닌 소비세를 통해 조달
- 내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 지속 상승, 1977년 61%. 낮은 소득세에 의한 “낮은 조세부담과 낮은 공공지출”을 특징으로 하는 조세체제 완성

#### 3) 재정

- 오일쇼크 이후 1974년 긴급조치 3호에 의해 국민복지연금 시행 유보, 간접노동비용 상승을 유발하는 사회보험 도입은 산업화 시기 최대한 늦춰짐
- 국가의 재정투입이 요구되는 불경기에도 수출확대를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 서구 복지국가들의 재정투입을 통한 수요측면 개입 방식이 아닌 공급측면에서 직접세의 감세를 통해 기업과 근로자들의 투자와 근로동기를 높임

#### 4) 전두환, 노태우

- 경제개발을 세제로 지원하기 위한 각종 조세감면제도 적용시한과 범위 확대
- 제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세제 지원 등

### ② 문민정부: 규제완화와 신자유주의를 강조한 세계화

- 우루과이라운드, WTO 등 국제적 협상결과에 따른 세제개편 추진 기본 관세율개편, 농촌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어촌 특별세 신설 등
- 금융실명제 등 금융시장 안정화와 연계, 금융소득에 대한 세제 개혁
- 부동산실명제 따른 양도소득세, 증여세 부과

### ③ 국민의 정부: 외환위기 극복과 경제활성화

#### 1) 외환·금융위기 극복과 구조조정 촉진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WTO가 금지하는 보조금인 수출손실준비금 및 해외시장 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폐지하고 투자세액 공제에서 국산 기자재와 외국 기자재

차별을 폐지

- 부실금융기관이 보유한 부동산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5년 내에 양도하는 경우
- 특별부가세 50% 감면, 유동화 전문회사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면제 및 특별부가세 50% 감면

2) 가계부담(근로자)의 조세부담 경감 및 사회안전망 확충

- 1999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 경감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4대보험 전 국민 확대

3) 주택시장 활성화 및 안정화를 위한 세제지원

- 2001 주택수요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발표: 신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 확대, 신축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확대, 수도권 소재 18~25.7평 규모의 신축주택 및 부동산투자회사(REITs)에 대한 각종 세제지원

④ 참여정부 : 새로운 성장을 위한 사회투자과 정부역할 확대

1) 성장잠재력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복지 및 공공서비스 확대

- 여성보육, 고용 인프라 구축 관련 서비스
- SOC는 민간 역할 강화, R&D 지원예산 대폭 확대

2) 종합부동산세 도입

3) 재정

-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용,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제도 도입, 성과관리의 강화, 디지털예산회계 시스템 도입 등의 4대 재정개혁 추진.
- 특별회계와 기금 정비

⑤ 이명박 정부 : 낙수경제에 기초한 신자유주의 작은 정부론

1) 747공약(7%성장, 4만달러 국민소득, 세계7위 경제대국)

- 수출대기업 지원을 위한 고환율
- 고소득자, 대기업 소득을 위한 부자감세(전체감세규모 약 86조원)
- 대규모 토목공사로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4대강사업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부담 완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한시적 유류세 인하, 법인세율 인하 등)

2) 재정의 소득재분배 기능, 재정건전성 악화

-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 SOC위주의 대형 국책사업 강행으로 5년 만에 국가채무 48.1% 증가(2007년 299.2조, 2012년 143.9조원)
- 수자원공사 부채비율 '07년 말 16%→'12년 말 123% 급증

⑥ 박근혜 정부 : 증세 없는 복지확대

- '세율 인상이나 세목 신설' 없는 자원 조달 방안 추진
- 세입 확충 방안은 비과세감면 축소 18조원, 지하경제 양성화 27.2조원, 금융소득과세 강화 2.9조원, 세외수입 확대 2.7조원 등

OECD평균(33.8%)

(GDP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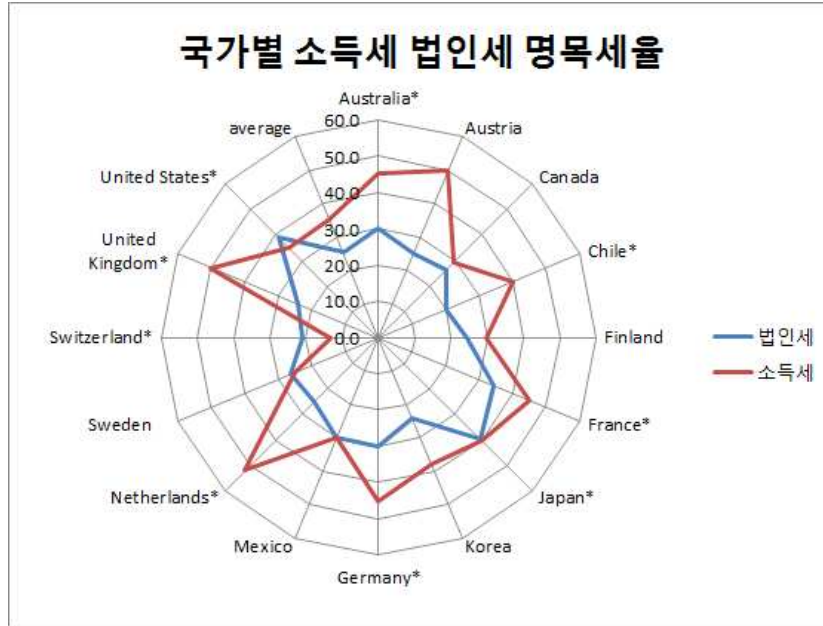
조세부담률	24%이상			
	20~24%	문민정부		참여정부
	15~20%	국민의 기타 역대정부	정부 이명박정부	
	15%이하			
통합재정규모		(~20%)	(20~24%)	(24%이상)

〈역대정부 재정지출규모와 조세부담 간 관계〉

## II. 어떤 조세가 필요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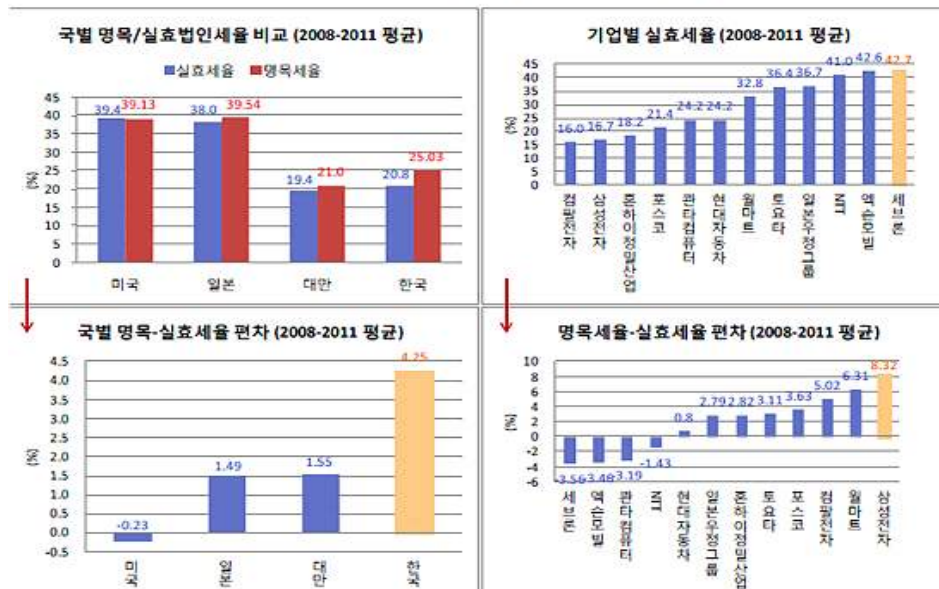
### 1. (증세론) 증세 없는 복지란 없다!, 증세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

- o 현재의 한국은 저부담 저복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충분히 증세와 복지를 통한 새로운 성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 o 해외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소득세는 다소 낮은 상황, 더 높일 수 있다고 믿으며 소득세의 상승에 따른 소득의 재분배 제시
- o 다른 안으로 부자세 증세론을 펼치면서 법인세에 관한 감면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며, 실효법인세율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



〈국가별 소득세 법인세의 명목세율〉<sup>5)</sup>

#### 4 개국 상위 3 대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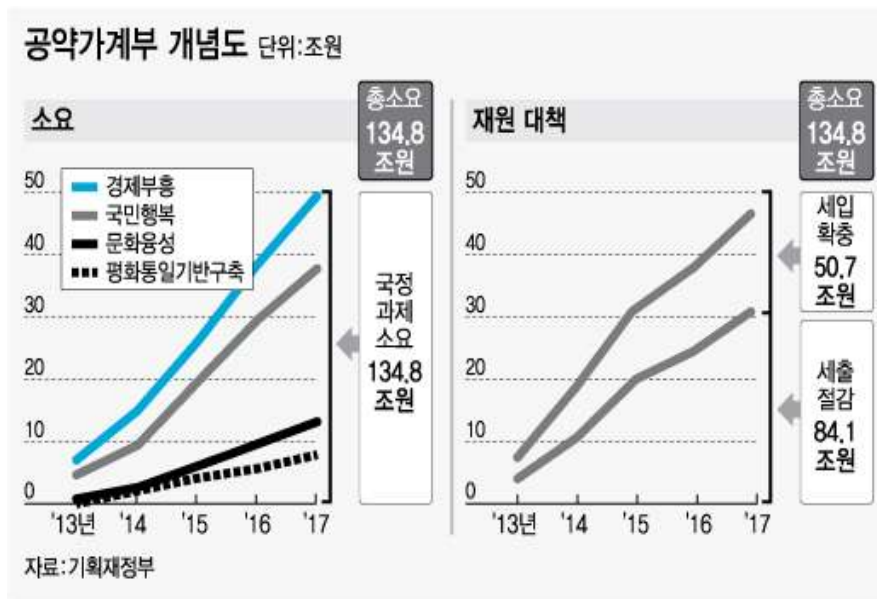


〈4개국 상위 3대 기업의 실효법인세율현황〉<sup>6)</sup>

5) OECD Tax database 참고

## 2. (2단계 증세론) 증세 없는 복지 가능하다, 세수의 구조개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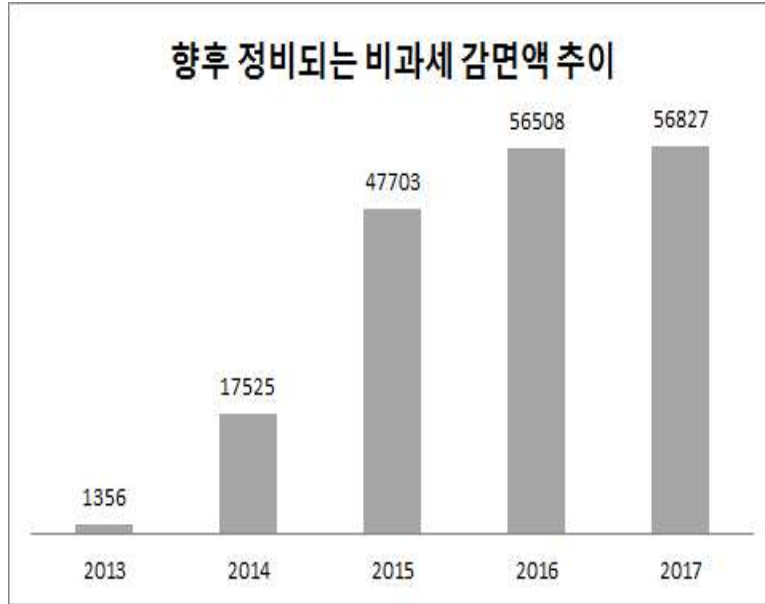
- 박근혜정부의 공약은 최초에 증세 없는 복지라 밝혔으나, 2단계 증세론으로 봐야한다는 견해가 있음
- 2단계 증세론이란 간접증세를 의미하며 비과세 감면 축소, 탈세 척결, 지하경제 양성화, 금융자본소득 과세강화 등을 먼저 시행한 이후 그래도 부족하면 국민적 타협을 통한 세율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임
- 공약가계부의 개념도는 다음과 같으며 세입확충이 필요하나 비과세 감면액으로는 부족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결론적으로는 증세가 필요



〈공약가계부 개념도〉<sup>7)</sup>

6) 오마이뉴스 2012.10.16. 『삼성전자 법인세율 역순모빌 반도 안돼』 인용

7) 중앙일보 경제 2013.5.31. 『박근혜 5년 공약가계부 134.8조원 확정…사상 첫 시도』 인용



〈비과세·감면액 추이〉 8)

### 3. (복지 축소론) 증세 없이 복지를 줄이자, 복지제도의 재정비

- 증세가 없는 조세감면을 지속해서 하게 되면 사회간접자본(SOC)이 줄게 되어서 전체적으로 민심이 좋지 않을 것으로 판단
-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 세수가 생각보다 적은 상태이며 복지정책 수위조절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재원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에 복지공약의 구조를 개편할 필요성이 제시됨

➡ **현 조세에 대한 공통된 의견은 복지를 시행하기엔 부족하다는 것! 그러므로 조세를 좀 더 거두어야한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거두어야 하는가?**

8) 세계일보 2013.6.27. 『복지공약 재원 짜내기 부유층 비과세 대폭 축소』 재구성

### Ⅲ. 새로운 조세와 재정제도의 모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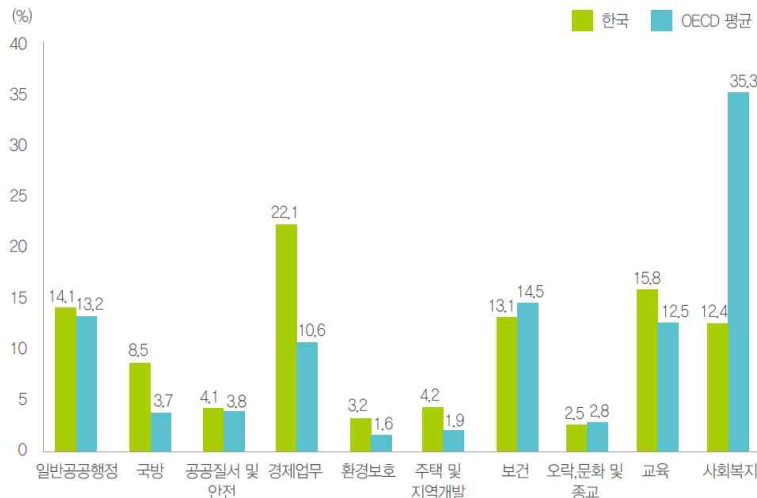
#### 1.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

- 우리나라 공공사회복지지출 추이를 보면 1990년 GDP 대비 비중이 2.8%였던 것이 참여 정부 때 7.6%로 증가했음
- OECD 주요국가의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을 보면 우리나라는 9.4%(2013기준)로 평균 22.1%에도 한참 못 미치며 34개국 중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
- 우리 복지지출 규모는 시장경제를 건강하게 유지 발전하기 위해 요구되는 최소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며, 복지지출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르다고 하지만 우리 복지수준과 OECD 평균과 차이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음

#### 2. 한국의 기능별 지출 추이

- OECD 회원국의 재정규모는 ‘일반정부 총지출’이라는 기준으로 작성(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 일부도 포함한 재정규모)
-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지출은 2013년 GDP의 31.1% 정도로 전망되고 있으며, OECD 회원국의 평균이 42.0%로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덴마크 등과 비교하면 그 차이가 상당함
- 우리나라 재정규모가 이렇듯 작은 것은 여전히 복지 분야의 지출이 적기 때문임





〈OECD 정부기능별 지출〉

### 3. ‘좋은 성장’에 도움이 되는 조세·재정제도의 요구

- 청년실업 문제, 인구의 노령화 등에 맞는 고용이 늘어나는 ‘좋은 성장’ 이 필요한 시점, 조세와 재정제도도 성장에 맞는 제도의 요구가 늘어남
- 든든한 사회안전망과 친환경적 성장구조가 갖춰진 성장을 위한 조세제도가 필요함
- 좋은 성장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지출이 높아져야 하며, 조세제도의 개혁도 필요함

➡ 포용·창조·생태·협력적 성장에 맞는 맞춤형 조세·재정제도가 필요

### 4. 조세 및 재정정책의 스펙트럼

#### (1) 조세제도

- 先 부자세 後 보편적 증세 : 부자 감세 철회 → 최고소득세율 구간 확대 → 부족한 세수

분에 대한 보편적 증세

- 2단계 증세론 → 지하경제 양성화 → 증세 없이 세수확보 → 부족분에 대한 국민적 타협을 통한 증세

## (2) 재정 정책

- 직접세 증세 : 법인세, 소비세의 증세 → 복지재원의 마련 → 보편적 복지 → 복지를 통한 성장
- 환경세 : 에너지세의 형태로 세제 도입 → 세수의 확충과 복지재원 마련 → 생태성장의 기틀 마련 → 환경 관련 기업의 성장촉진
- 비과세감면 개편 : 연말정산 공제 방식 등의 개편 → 금융소득종합과세개편 → 지하경제 양성화 등 증세 없는 세수확보

## (3) 복지 정책 자원 조달

- 지방세수 확충 : 지방의 자체재원을 확충하는 방식,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통한 지방세수의 확충으로 지방재정의 안정화와 복지재원확보
- 복지공약 개편 : 복지공약 자체를 개편, 지금 세수에서는 복지가 힘들며 공약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

## (4) 복지 지출의 규모

- 프랑스와 스웨덴 : 약 31%대의 GDP 대비 높은 복지지출을 보이고 있으며 북유럽국가들은 고부담 고복지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
- 일본과 미국 그리고 한국 : GDP 대비 복지지출이 낮다고 볼 수 있으며 지속해서 복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고 볼 수 있음



〈OECD 주요국 사회복지 지출규모 비교〉<sup>9)</sup>

구분	〈진보〉.....스펙트럼.....〈보수〉	비고
(1) 조세 및 규제완화	(재벌해체)···증세론·····2단계 증세론···(시장원리주의)	
(2) 재정 정책	···직접세증세·····환경세·····비과세감면 개편··	
(3) 복지정책의 자원 조달	·지방세수 확충···증세법안···비과세 개편···복지공약 개편	
(4) 복지지출 규모	·프랑스·스웨덴···네덜란드·OECD평균··일본·미국··한국··	GDP대비 2009년자료 <sup>10)</sup>

〈조세와 재정정책 그리고 복지규모에 따른 스펙트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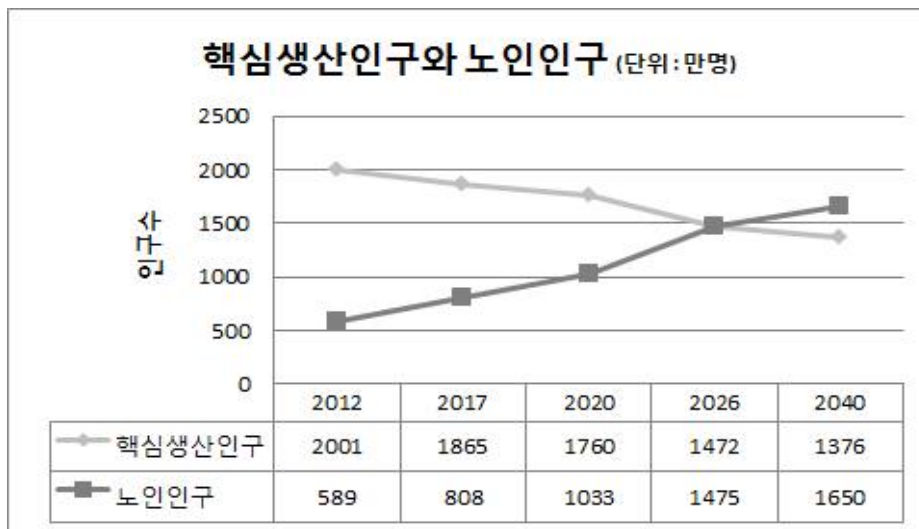
➡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맞는 조세·재정제도가 필요

9) 출처:OECD(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ep 2013)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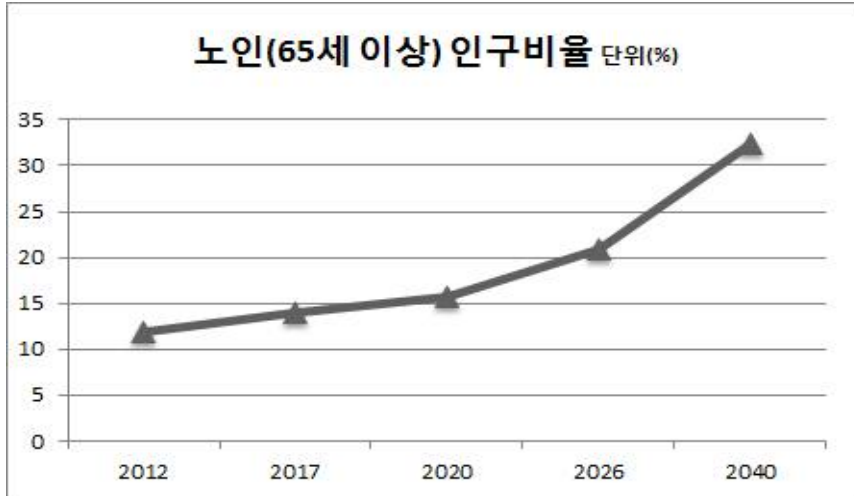
10) 통계청 e-나라지표 2009년 OECD국가들의 GDP대비 사회복지 지출규모

## 5. 한국형 조세 및 재정제도의 고려사항

- (1) 사회의 양극화 현상 : 사회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이슈가 팽배해지고 있으며 조세제도 기능의 개편이 요구되고 있음 ➡ 소득세의 개편으로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으며 비과세와 감세를 축소하여 소득의 재분배 기능 확대
- (2) 인구의 고령화와 실업문제 : 산업구조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 실업이 증가 계다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 사회의 안전망(연금 등)이 약화되고 있음 ➡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아이 낳고 싶은 국가로 변모하여 더욱 살기 좋은 대한민국의 모습을 위한 장기적 시각이 필요



〈핵심생산인구와 노인인구〉



〈노인인구비율〉 11)

(3) 성장과의 조화 :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성장이 필요하며 일반적 성장이 아닌 4대 키워드 (포용·창조·생태·협력적 성장)에 맞는 성장이 필요 ➡ 복지와 노동조건 개선을 통한 성장, 환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 구현

➡ 한국형 조세·재정제도는 장기적 시각으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앞으로의 성장과의 조화로운 개편이 필요

## 6. 새로운 조세·재정제도의 제안

(1) 소득세의 세수 조정 방안 :

- 현 한국의 소득세는 GDP 대비 세수가 적고 소득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GDP 대비 세수비중과 OECD 평균을 통한 세율상승이 필요

11) 자료 : 통계청, 핵심생산인구(25~49세)

- 세수입 및 재분배를 위해서는 슈퍼부자들의 소득세를 늘려야 함
- 세율구간을 3개 신설(1억 2천만 원 초과~2억 이하 35%, 2억 초과~3억 이하 38%, 5억 초과 43%)

➡ 소득세의 개편으로 6조 6436.3억의 추가 세수 발생 가능(2013년 기준)<sup>12)</sup>

현행		개편방안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1억2천만 원 이하	33%
3억 원 초과	38%	1억2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3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5억 원초과	43%

〈소득세 개편방안〉<sup>13)</sup>

(2) 법인세의 세수 조정 방안 :

- 현행 한국의 법인세는 전 정부의 감세정책 시행에서 기인하는 세수부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한국의 실효법인세율이 OECD 평균 대비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음
-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였으나 실제 기업들은 이익유보가 많아져 대기업을 제외한 나머지의 기업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과세구간을 추가 설정 및 최고세율을 중간 규모 국가수준으로 올려야 함
- 200억 초과를 100억 초과까지 설정한 후 100억에서 1,000억 사이 구간을 설정하고 1,000억 초과 구간을 설정해야 함

➡ 법인세의 개편으로 10조 9292억 원의 추가 세수 발생 가능(2013년 기준)<sup>14)</sup>

12) 위의 산출방법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율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음

13) 자료 : 윤영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pp.27 인용 및 수정

14) 위의 산출방법은 2013년을 기준으로 하여 법인세율을 비교하여 산출하였음

규모	2011	2012	국가
큰 규모	32.8	32.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간 규모	27.8	27.6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작은 규모	22.8	23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등
OECD 단순 평균	25.5	25.5	

현행		개편방안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22%
200억 원 초과	22%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25%
		1,000억 원 초과	27%

〈법인세 개편방안〉<sup>15)</sup>

### (3) 부가가치세의 인상

- 최근 OECD 국가들의 조세정책은 소비세(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으며 주요국의 부가가치세 세율변화를 보면 2010년 이후 확실히 인상추세에 있다고 보임
- 이러한 추세 속에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낮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상승압력이 존재해 왔음
- 하지만 아래의 표에서 소비세의 ITC가 100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하지만 ITC 지수가 절대적인 지수는 아니며 현재의 복지재정 상황을 봤을 때 부가가치세의 인상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금의 세율에서 2% 상승시킨 12%가 적절하다고 생각됨

15) 자료 : 현진권(2013) 한국경제연구원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추출 및 재구성  
 자료 : 윤영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pp.28 인용

연도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2003		68.2	90.5	103.0	126.1	83.8
2004		75.7	76.5	93.7	119.6	86.0
2005		76.2	85.9	102.3	119.7	88.6
2006		93.3	77.2	117.5	121.0	91.6
2007		115.3	82.5	118.9	124.8	94.5
2008		108.4	79.3	112.1	119.0	101.3
2009		90.7	72.1	107.5	117.3	99.3
2010	실제	3.59	3.49	2.86	8.50	5.72
	예측	3.79	5.48	2.81	6.81	5.89
	ITC	94.8	63.7	101.6	124.8	97.1
1900년대		73.7	71.8	97.4	109.3	48.0
2000년대		85.1	77.9	105.8	122.1	87.4
전체		79.6	75.0	101.8	116.0	68.7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현황〉<sup>16)</sup>

(4) 환경세(에너지세)의 설립방안 :

- 현재 한국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존재하고 있으나 2년 후 일몰될 예정이며 최근 대두되어진 탄소세와 비교해보자면 세원의 범위가 넓고 발열량에 세수를 두고 있다는 점이 한국의 실정에 맞는 세제라고 판단됨.
- 성장의 4대 키워드 중 생태성장과 가장 어울리는 세제일 것이며 독일의 예로 봤을 때 신에너지 산업의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가 될 것으로 예상 됨
- 2013년 기준 교통환경에너지세를 에너지세로 변경하여 단순 산술해본 결과 기존 세제와 비교하여 1조 1200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16) 자료: 김성욱(2013) 적정조세부담률의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중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 20집 제 3호 pp.105 발췌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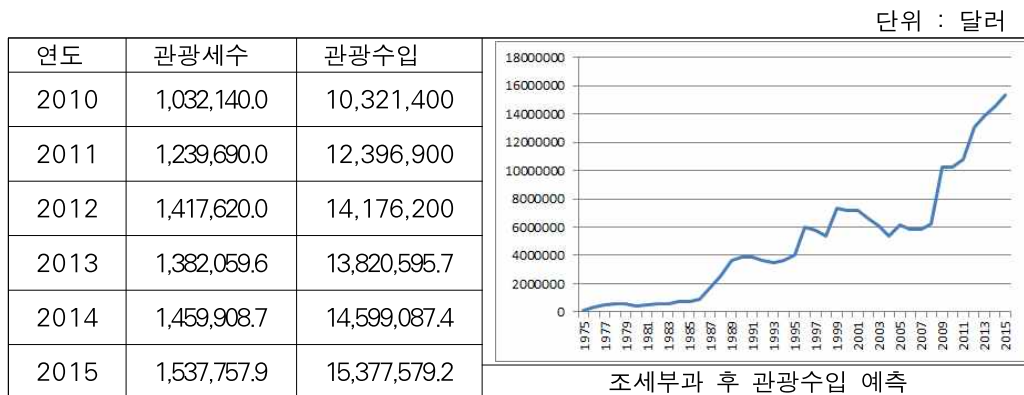


구분	금액		구분	금액(단위: 억원)
- 관세	109888		- 관세	109888
- 방위세	364		- 방위세	364
- 교통에너지환경세	130005	➡	- 에너지세	141200
- 교육세	47772		- 교육세	47772
- 종합부동산	10950		- 종합부동산	10950

〈에너지세의 설립방안〉<sup>17)</sup>

(5) 관광세의 설립방안 :

- 한국의 관광국가로의 변모는 또 다른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보이며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함
- 미국과 일본의 경우 호텔숙박세 및 입탕세, 골프장 이용세 등의 수입으로 지방재정의 확충과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투자에 이용되고 있음
- 골프장 이용세 및 호텔숙박세 등은 내국인들에게도 소득에 맞게 이용되어 소득 불평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소득 재분배의 역할에 충실한 세제가 될 것으로 예측됨



〈관광수입 및 관광세수 예측〉<sup>18)</sup>

17) 자료 :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을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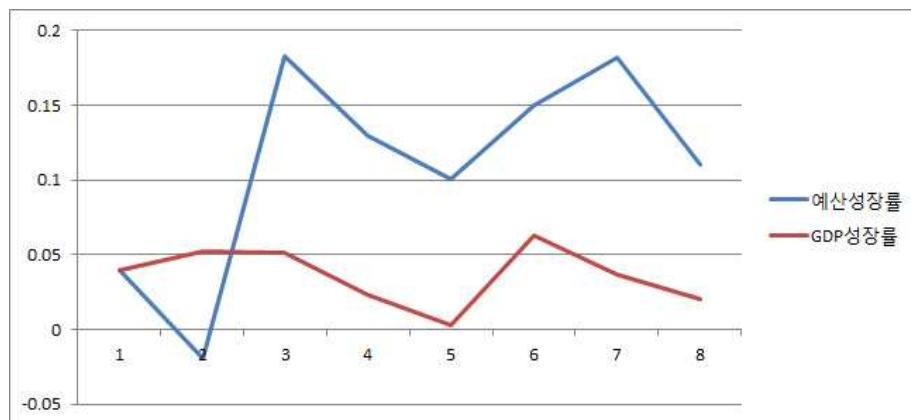
18) 지수평활법을 이용하여 단순산출한 결과  $y_{t+k} = 1(t) + 0.13(t)k$ 과 같은 식이 산출되었으며 지방세수확충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됨

(6) 재정의 효율화 방안 :

- 국가 예산 중 공공기관에 지출되는 예산은 2013년 기준 41.1조 원
-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직접지원 현황은 공공기관 지출예산의 56.2%인 23.1조
- 정부는 지금까지 경제성장률에 맞춰 예산배분을 하였으나 과다 지출한 것이 보임
- 경제성장률에 맞춰 예산안 조절을 시행하면 약 9.5조의 추가예산 발생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연금	3.6	4.4	4.3	4.2	4.7	5.9	6.9	7.7	5.4	12.0
출자금	0.04	0.03	0.08	0.06	0.02	0.005	0.01	0.04	0.05	3.4
보조금	4.6	4.7	5.1	5.1	5.9	7.2	7.7	9.3	9.9	0.1
부담금 및 이전수입	0.8	0.9	1.1	1.0	1.7	0.8	0.6	0.6	1.2	7.6
합 계	9.1	10.2	10.6	10.4	12.3	13.9	15.3	17.6	20.8	23.1
증가율(%)		12	4	-2	18	13	10	15	18	11
경제성장률*(%)	4.60	4.00	5.20	5.10	2.30	0.30	6.30	3.70	2.00	
GDP	832.30	865.20	910.00	956.50	978.50	981.60	1,043.7	1,082.1	1,104.2	
누적성장률	예산성장률			126%		경제성장률			33%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직접지원 현황〉<sup>19)</sup>



〈예산 증가율과 GDP 성장률〉<sup>20)</sup>

자료 : 한국관광공사

19) \* ECOS경제성장률 인용

자료 : ECOS, NABO 2004~2013년 자료 사용

(7) 복지재정의 조정방안 :

- 위의 조세제도를 시행하면 약 41조 원의 추가재원의 확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다양한 재원의 지출처 중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복지재원과 관련하여 지출의 비중에 따른 고용의 현황과 복지지출비중에 대해 알아봐야 함
- 지출의 비중은 아래의 표와 같으며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비교해봤을 때 복지지출 비중을 늘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음

		2008	2009	2010	2011	2012
감소국	스웨덴	27.5	29.8	28.3	27.6	28.2
	핀란드	25.3	29.4	29.4	28.6	29
	네덜란드	20.9	23.2	23.5	23.7	24.3
	노르웨이	19.8	23.3	23	22.6	22.1
유지국	독일	25.2	27.8	27.1	26.2	26.3
	스페인	22.9	26	26.5	26	26.3
	영국	21.8	24.1	23.7	23.9	23.9
	미국	17	19.2	19.9	19.7	19.4
증가국	대한민국	8.4	9.6	9.2	9.2	9.3
	프랑스	29.8	32.1	32.2	32.1	32.1
	이탈리아	25.8	27.8	27.8	27.6	28.1
	그리스	22.2	23.9	23.3	23.5	23.1
	일본	19.9	22.4	..	..	..
	포르투갈	23.1	25.6	25.6	25.2	25
OECD - Total		19.9	22.1	22	21.7	21.7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sup>21)</sup>

- 추가예산 약 41조 모두를 정부가 고용승수에 가중치를 두어 사회복지 관련 사업으로

20) 본 자료는 예산 성장률의 T-1기와 GDP성장률을 비교하였음

21) 자료 : OECD Stat 참고, 최재성의원실 OECD 주요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변화 인용

지출했을 때(100%) 2014년도에 총 정부재정지출로 창출할 수 있는 고용은 808,068명으로 산출되었음

- 또한 정부의 지출만으로 창출할 수 있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의 추가 고용수준은 65,828명(2014년 기준)으로 산출되었음
- 추가예산 41조 전체를 복지 분야에 지출하게 되면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의 비중이 12.1%까지 오르는 것을 볼 수가 있음
- 또한 이를 통해서 공공행정 및 국방에 관련된 지출비중이 40%에서 34.15%로 줄어드는 모습과 토목 및 특수건설이 14.3%에서 13.1%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음
- 더욱 고무적인 것은 약 41조의 추가 예산이 한해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GDP의 상승에 따라 같이 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박근혜 정부의 공약가계부보다 더욱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			
	100%	70%	50%	20%
2014년 고용정도	808,068명	824,999명	836,286명	853,217명
사회복지관련 추가고용	65,828명	41,498명	25,278명	948명
사회복지/GDP	12.1%	11.2%	10.5%	9.6%

〈복지지출 비중과 고용의 유발〉<sup>22)</sup>

22)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비중은 공공행정 및 국방으로 지출했을 때의 상황임

2013년 기준

단위 : %, 원

지출 분야	재정지출	변경 사항	변화방안
선철 및 조강	-0.1		-0.09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0.1		0.09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0.1		0.09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0.2		0.18
컴퓨터 및 사무기기	0.3		0.27
가정용전기기기	0		0.00
정밀기기	0.1		0.09
자동차	0.2		0.18
선박	0.1		0.09
기타 수송 장비	0.2		0.18
건축건설	7.2		6.60
토목 및 특수건설	14.3		13.10
도소매	0.1		0.09
부동산	0.4		0.37
연구기관	1.7		1.56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1		0.09
공공행정 및 국방	40	9.5조	34.15
교육서비스	15.7	+ 24조	20.68
의료 및 보건	16.5	+ 14조	18.79
사회복지사업	1	+ 3조	1.83
위생서비스	0.9		0.82
출판 및 문화서비스	0.9		0.82
합 계	100		100

〈재정지출의 변화방안〉

(8) 복지재정 이외의 대안 재정지출 :

- 고용 및 성장을 위해서 복지재정 이외의 다른 재정지출 방안으로 지적된 것은 통일세 또는 국방세가 있음
- 위의 세제 중 통일세의 경우 통일을 준비하여 통일 이후의 성장을 생각하는 세제이고, 국방세 또는 공공행정 그리고 SOC 관련 사업(토목사업)의 경우 현재의 고용만 생각하는 것이라고 판단됨
- 복지가 창출하는 고용인원이 국방 또는 공공행정보다 작지만, 중산층의 회복 및 재건

에 가장 알맞은 지출이라고 판단이 됨

구분	〈진보〉……………스펙트럼……………〈보수〉	비고
조세제도 제안	소득세, 법인세…관광세…환경세…부가가치세…………	
재정지출 제안	…복지100%…………70%…………50%…………20%…………0%	
대안지출 관련	·통일세(연방세)……………SOC사업…공공행정…국방	

〈제안에 관한 이념적 스펙트럼〉

## IV. 신성장동력을 위한 한국형 조세·재정제도

### 1. 갈림길 앞에 선 한국

- o 세계 각국의 재정운영 형태를 보면 많이 걷어서 많이 쓰는 국가(큰 국가형, 고부담 고복지 국가), 적게 걷어서 적게 쓰는 국가(작은 국가형, 저부담 저복지국가), 적게 걷어서 많이 쓰는 국가(적자재정 국가형, 저부담 고복지국가) 등의 유형으로 구분
- o 또한 스웨덴·덴마크 등은 사회서비스 복지가 발달한 북구형 모델, 독일·프랑스같이 사회 보험제도가 발전된 유럽대륙형 모델, 공공부조<sup>23)</sup>와 민간복지가 발달된 미국형 모델 등으로 구분
- o 현재 한국은 새로운 성장을 위해 미국형인지 북유럽형인지에 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고 볼 수 있음

2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하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복지제도

## 2. 신성장동력을 위해 한국이 선택할 방향은?

- 위에서 ‘좋은 성장’의 기반 속에서 신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기에 맞춤형조세제도와 재정 제도를 통해 복지에 지출하는 방안을 제시했음
- 현대 국가 역할은 국가안보 외에 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 고용증진, 복지 등의 해결이 중시되면서 ‘작은 국가형 모델’은 그 유용성이 쇠퇴했으며, ‘적자재정 모델’은 재정위기를 초래하므로 가장 배제해야 할 국가 모형
- 따라서 국민의 부담이 크고 복지에 지출이 큰 유럽형 모델을 선택하여야 하지만 스웨덴 같은 사회민주주의의 기반으로 따져봤을 때, 당장 고부담 고복지의 유럽형 복지모델로 수행하기 힘들
- 그러므로 미국형 복지모델보다는 유럽형 복지모델 쪽으로 이행하되 1차적으로는 적정수준의 재정규모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는 ‘중간국가형 모델’로, 즉 ‘적정 부담, 적정 복지국가’로 나아가야 함. 이 모델이 ‘한국형 보편복지 모델’이라 할 것임

복지 유형 (퍼니스 & 틸튼) <sup>24)</sup>	미국형 (적극적국가)	중간형 (사회보장국가)	북유럽형 (사회복지국가)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등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국의 평균 고용률	71.9%	73.3	73.9%
복지의 유형	잔여주의 <sup>25)</sup>		보편주의 <sup>26)</sup>
공공부문 정부크기	소	중	대
사회복지와 경제, 산업 <sup>27)</sup>	복지와 산업 분리		복지와 산업 밀접관계

〈복지의 유형과 한국의 나아갈 길〉

24) **퍼니스와 틸튼**은 사회복지에 따른 국가의 유형을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하였음

\***적극국가**의 경우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을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짐

\***사회보장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안정을 중요시하며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생활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

\***사회복지국가**는 스웨덴처럼 평등과 국민화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를 보장하고 각종 공익사업과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

25) 잔여주의란 자산·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별

26) 보편주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따른 선별원칙

27) 미쉬라는 복지국가를 복지와 산업의 관계에서 바라보았음

국민부담률<sup>28)</sup>

초고부담 (40%이상)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고부담 (평균이상 30%대)		아이슬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OECD평균 (33.8%)						
중부담 (평균이하 30%대)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캐나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저부담 (20%대)	멕시코, 터키, 칠레, 한국(2007)	스위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아일랜드, 일본			
	저복지 (15%미만)	중복지 (15-22.1%)	OECD 평균 (22.1%)	고복지 (22.1-25%미 만)	초고복지 (25-30%)	GDP대비 복지지출

〈미래 대한민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 위치〉

### 3. 어떻게 한국형 조세·재정제도로 나아가는가?

- 균형성장, 동반성장, 고용창출성장 등을 위해서는 발전주의 국가에서 인권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적정부담 적정복지(네덜란드 또는 영국 수준)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성장 동력의 힘이 되어야 함
- 산업과 복지가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조세와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
- 이 시점에 알맞게, 조세제도에서는 환경 부문을 강조하는 에너지세, 그리고 새로운 관광 발전을 위한 관광세, 소득의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부가가치세의 변경이 필요함
- 재정제도에서는 공공기관에 지출되는 예산의 감축을 통한 추가 예산확보와 복지에 관련

28)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국민소득, 사회보장부담률 = 사회보장부담(의료보험 등등)/국민소득



된 지출을 중간국가까지 천천히 올리는 노력이 필요하며 추가로 줄일 곳은 SOC 산업(토목산업)쪽을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신성장동력을 위한 한국의 조세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목표 수준	네덜란드, 영국 (중간국가형 모델)		신성장동력과 연관부문
	적정 부담, 적정 복지		
조세 제도	소득세	소득구간 2개 증설 최대소득세율 43%	소득불평등완화, 동반성장
	법인세	법인세구간 1개 증설 최대법인세율 27%	
	부가가치세	10% → 12%	
	관광세	골프장이용세 및 호텔숙박세 관광수입의 10%	관광산업 성장
	에너지세	발열량에 따른 과세	친환경성장
재정 제도	재정효율화	공공기관지출 9.5조 감축 및 복지 지출	재정의 효율화
	복지비율	현행 9% → 12% 이후 점차적으로 22% 까지	포용성장의 기반
	SOC지출감소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야함	

신성장동력을 위한 장기 로드맵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5
<b>조세 전략</b>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에너지세 및 관광세 및 재정 효율화 도입	-	Finance Act 시행	-	공동세와 연대세의 도입 (통일세)	조세제도의 선진국화	소득세 비율 법인세 비율 재조정	통일세의 안정화
<b>재정 전략</b>	복지사업에 추가세입+재정 효율화 방안 41.467조 추가 (2013년 기준)	토목사업 축소 검토	비과세와 감세 이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토목사업의 축소 및 복지 사업 추가배정	연대세를 통한 통일재원확보	재정지출의 구조개편	복지예산의 증대 토목사업 및 경제업무 비중 감소	안정적인 통일재원확보
<b>창출 효과</b>	고용창출 808,068명 예상GDP ₩1321조	고용창출 824,655명 예상GDP ₩1348조	고용창출 841,582명 예상GDP ₩1376조	고용창출 858,857명 예상GDP ₩1404조	고용창출 876,486명 예상GDP ₩1433조	고용창출 894,477명 예상GDP ₩1463조	고용창출 912,837명 예상GDP ₩1493조	예상GDP ₩1652조 (일정한 비율로 재정지출 했을 시)
<b>특이 사항</b>	GDP대비 복지 (12.1%) 복지국가화 시발점	-	투명한 조세 재정 정책	(토목사업 10조 조정 하면 0.8%상승)	통일준비	-	GDP대비 복지 15%까지 올려야함	보편적 복지 국가

# 목 차

<b>제1장 서론</b>	<b>1</b>
1. 연구의 배경	3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3
1) 시간적 범위	3
2) 내용적 범위	4
<b>제2장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b>	<b>6</b>
1.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현황	8
1)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8
2) 우리나라의 재정 체계	10
2.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문제점	16
3. 소결	27
<b>제3장 해외사례 연구</b>	<b>29</b>
1. 국외 조세제도 및 재정 현황	31
1) 독일	31
2) 일본	33
3) 영국	35
4) 미국	37
5) 북유럽	40
2.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비교	43
1) 우리나라 조세와 외국 조세의 세목별 비교	43
2) 주요국가간 세입 세출 비교	50
3) 주요 국가별 재정제도 비교	53
4) ITC 지수를 이용한 주요 국가별 재정제도 비교	54
3. 소결	55
<b>제4장 조세정책의 기본전략</b>	<b>57</b>

1. 기본전략 .....	59
1) 조세정책의 역할과 한계점 .....	59
2)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	64
3) 조세정책의 전략 .....	66
2. 신성장동력을 위한 조세제도 .....	69
1) 소득세의 세수 조정 방안 .....	69
2) 법인세의 세수 조정 방안 .....	70
3) 부가가치세의 세수 조정 방안 .....	75
4) 새로운 세수의 확보 .....	76
3. 소결 .....	81

## 제5장 재정정책의 기본 전략 ..... 84

1. 기본전략 .....	86
1)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	86
2.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효과성 극대화 방안 .....	88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	88
2) 재정효율화 방안 .....	92
3) 재정정책의 고려사항 .....	93
4) 재정정책의 시뮬레이션 .....	95
3. 재정정책 중장기 로드맵 .....	97
4. 결론 .....	99

## 제6장 맺음말 : 충청남도를 위한 제언 ..... 102

## <참 고 문 헌> ..... 105

## 표 목 차

<표 II-1> 중앙정부의 기능별 세입과 세출현황 .....	9
<표 II-2> 지방세의 세입 및 세출 .....	10
<표 II-3> 2013년 중앙정부재정 규모 .....	12
<표 II-4> 2013년 중앙정부재정 규모 .....	13
<표 II-5> 2013년 총 수입 전망 .....	14
<표 II-6> 2013년 총지출 전망 .....	14
<표 II-7> 2013년 지자체 분야별 세입·세출 현황 .....	15
<표 II-8> 지역별 예산 현황 .....	16
<표 II-9> '13 ~ '14년도 복지예산 .....	18
<표 II-10>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	26
<표 III-1> 독일의 공동세 배분 비율 .....	31
<표 III-2> 독일의 세입과 세목현황(2007년) .....	32
<표 III-3> 독일의 에너지세 내용 .....	33
<표 III-4> 일본의 세입 현황 .....	34
<표 III-5> 영국의 세입 현황 .....	36
<표 III-6> 영국의 소득세 세입구간 .....	37
<표 III-7> 미국의 세입구간 .....	38
<표 III-8> 미국의 법인세 세입구간 .....	39
<표 III-9> 미국의 기업조직 유형과 과세 장·단점 .....	40
<표 III-10> 스웨덴의 주요세목 현황 .....	41
<표 III-11> 스웨덴의 조세개혁 .....	41
<표 III-12>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 .....	42
<표 III-13>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	43
<표 III-14>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	44
<표 III-15>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	46
<표 III-16>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지방세포함) .....	47
<표 III-17> 기업별 실효법인세율 .....	48
<표 III-18>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단위 %) .....	49
<표 III-19> 주요국의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현황 .....	50
<표 III-20> 주요국의 세입 구조(2008년) .....	51
<표 III-21> OECD 주요국의 재정의 기능별 분류(2008년) .....	52

<표 III-22> 주요국의 GDP대비 총 지출 추이 .....	53
<표 III-23> 주요국의 국민 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	54
<표 III-24> ITC를 이용한 주요국의 국민 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	55
<표 IV-1> 고소득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	61
<표 IV-2>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에 따른 지니계수 .....	63
<표 IV-3>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 현황 .....	68
<표 IV-4> 조세 전략의 특성 .....	69
<표 IV-5> 소득세 개편방안 .....	70
<표 IV-6> OECD국가 규모별 소득세율 비교(%) .....	70
<표 IV-7> 2012년 실효 법인세율 현황 .....	71
<표 IV-8> OECD국가 규모별 법인세율 비교 .....	72
<표 IV-9> 명목법인세율과 부담률과의 관계 .....	73
<표 IV-10> 법인세 세율 개편 방안(지방세 미포함) .....	74
<표 IV-11>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 방안 .....	75
<표 IV-12> 2013년 기준 에너지세 도입 .....	77
<표 IV-13> 전기법인세 증감률과의 상관관계 .....	80
<표 IV-14> 조세제도의 적용을 통한 세수파악 .....	83
<표 V-1> 정부소비지출의 산업부문별 배분구조 .....	89
<표 V-2>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	90
<표 V-3> 주요 재정지출대비 지출비중과 고용유발 승수 .....	91
<표 V-4>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직접지원 현황 .....	92
<표 V-5> 재정지출의 변화방안 .....	95
<표 V-6>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과 고용유발 정도 .....	96
<표 V-7> 복지의 유형과 한국의 나아갈 길 .....	100
<표 V-8> 신 성장동력을 위한 한국의 조세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	101
<표 VI-1> 충청남도의 입장 .....	103
<표 VI-2> 충청남도의 세입과 세출 .....	104
<표 VI-3> 충청남도의 재정력 강화방안 .....	105
<표 VI-4> 충청남도의 투명성 강화방안 .....	105
<표 VI-5> 충청남도의 교육복지 및 의료복지 방안 .....	107
<표 VI-6> 충청남도의 입장과 발전방향 .....	107

## 그림 목 차

<그림 II-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	8
<그림 II-2>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	11
<그림 II-3> 중앙정부의 재정체계 .....	12
<그림 II-4> 재정지출과 조세부담 그리고 복지지출간의 관계 .....	17
<그림 II-5> 지방재원 조정안 .....	19
<그림 II-6> 지역별 자립도 .....	20
<그림 II-7> 지자체의 세입구조 및 세부구성 .....	21
<그림 II-8> 지방보통세 중 취득세 구성비 (2011년 기준) .....	22
<그림 II-9> 주요국의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 (2011년 기준) .....	23
<그림 II-10> 주택 전세 가격지수 .....	24
<그림 II-11>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전세수급지수 .....	25
<그림 II-12>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에 대한 시민 조사 .....	27
<그림III-1> 국가별 GDP대비 소득세 .....	45
<그림III-2> 국가별 총 세수대비 소득세부담(%) .....	46
<그림III-3> 국가별 과세구간 개수 .....	47
<그림IV-1> 조세제도의 역할과 한계점 .....	61
<그림IV-2> 조세제도의 방법론 도출 과정 .....	65
<그림IV-3> 조세전략과 재정전략 .....	65
<그림IV-4> 증세론 도입방안 .....	67
<그림IV-5> 2012 주요 국가별 법인세 현황(지방세포함) .....	72
<그림IV-6> 비과세와 감면액의 문제 .....	75
<그림IV-7> 관광수입 예측 및 관광세 적용이후 수입예측 .....	79
<그림 V-1> 정부의 기능별 지출에 따른 OECD 평균 비교 .....	88
<그림 V-2>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	90
<그림 V-3> 경제성장률과 직접지원 현황 .....	93
<그림 V-4> 핵심생산인구와 노인인구 .....	94
<그림 V-5> 신성장동력을 위한 장기 로드맵 .....	99
<그림 V-6>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 .....	100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현재 한국 경제는 침체의 위기에 빠져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경제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 특히 재정, 조세의 역할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이는 단순히 복지재원 마련이나 납세자간 형평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차원이다.

역대 정부와 현 정부는 모두 경제성장과 복지확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 왔지만, 그 핵심수단인 재정-조세 정책은 아직 뚜렷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중이며 혼란을 빚어오고 있다.

따라서 조세, 재정 문제를 새로운 성장모델 창출과 저성장,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는 전략적인 차원에서 이해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균형발전과 충청남도의 성장전략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의 조세, 재정 정책에 대한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충청남도의 앞으로의 성장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 2. 연구의 목적

본보고서는 한국 경제의 저성장 극복과 저출산고령화 대비, 다양한 복지수요 확충을 위해 재정, 조세 부문이 담당해야 할 역할을 검토하고, 그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위해 우리나라의 재정, 조세 현황과 구조를 살펴보는 한편, 그와 관련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며, 선진국들의 경험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략과 정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의 범위

### 1) 시간적 범위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우리나라의 조세·재정기간인 2007년 ~ 2013년으로 설정하였다.

## 2) 내용적 범위

본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조세와 재정과 해외 주요국의 조세와 재정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대한민국의 신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조세제도 및 재정정책의 발굴과 적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 동안 조세 및 재정에 관한 다양한 전문가 및 기관들의 많은 연구가 있었지만, 성장을 강조하는 입장과 복지를 강조하는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은 많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복지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이전의 연구들은 선진국들의 경험 및 경제학 이론에 근거하여 재정 및 조세정책의 원론적인 개혁방안만을 제시하는 경향이 많았으며, 재정과 조세가 각각 분리되어 분석되면서 재정지출과 조세수입을 연계시킨 개혁방안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리고 조세·재정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제정책의 목표와 사회복지 및 사회정책의 목표를 결합시킨 연구가 충분하지 못하였다.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면서 조세 및 재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들이 제시하는 재정·조세개혁 방안은 양극화 해소 및 저출산고령화 대응 등 복지와 연계한 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위의 복지재정과 관련한 세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는 첫째, 보수주의가 주로 선택하는 감세론, 둘째 부유층 증세론(민주당, 참여연대), 셋째, 보편적 증세론(오건호), 넷째 조세대체론(남기업, 2010)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 논의는 주로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개혁과 재정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장 전략과 구체적으로 연계한 연구결과물은 그리 많지 않음이 밝혀졌다. 특히, 지방분권이 확대됨에 따라 복지재정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증대하고 있으나 지방정부 복지재정 지출의 현황 및 평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본보고서는 그 동안의 연구에서 간과한 복지확대와 성장전략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조세와 재정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시도하고자 하며 이를 기초로 충청남도 광역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조세수입과 재정지출에 관한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 제2장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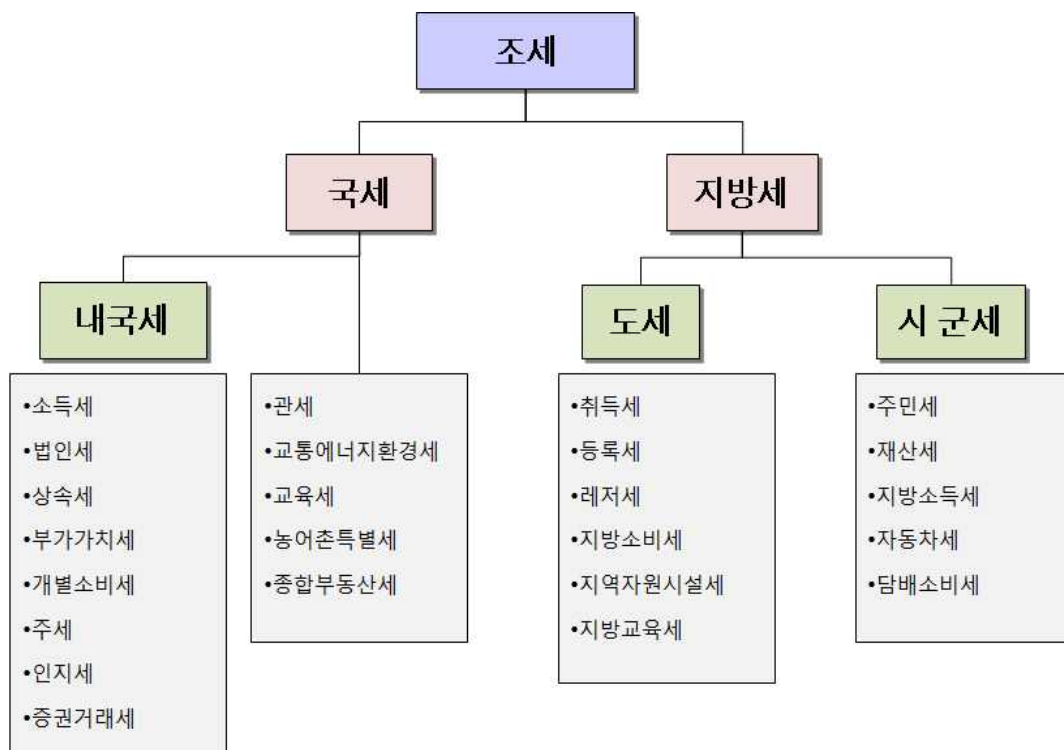
### 1.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현황

#### 1)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 (1) 총 세입과 총 세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14개)와 지방세(11개)로 나눌 수 있으며 2010년 1월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소비세가 신설되고 균등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 재산 분(재산할 사업소세)을 통합하여 주민세가 되었다.

〈그림 II-1〉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2012년 세입과 세출의 현황은 총 세입 282.3조원이며 총 세출은 274.8조원이며 중앙정부의 총 세입 중 52.2%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의존하고 있고 세출은 공공행정(18.6%) 교육(16.7%) 국방(12.1%) 순서로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II-1〉 중앙정부의 기능별 세입과 세출현황

단위 : 백만원

세입		세출	
구분	금액	구분	금액
총 세입	282,370,425	총 세출	274,761,147
국세	203,014,926	1. 일반 공공행정	51,012,726
내국세	169,771,344	2. 공공질서 및 안전	15,041,379
소득세	45,766,953	3. 외교·통일	2,333,371
법인세	45,931,750	4. 국방	33,153,800
상속세	4,020,523	5. 교육	45,537,048
부가가치세	55,667,635	6. 문화 및 관광	2,625,061
개별소비세	5,335,516	7. 환경	7,881,444
증권거래세	3,680,579	8. 사회복지	24,822,732
인지세	601,439	9. 보건	6,031,092
기타내국세	5,768,027	10. 농림수산	20,735,317
관세	9,815,744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9,741,737
방위세	364	12. 교통 및 물류	33,086,219
교통에너지환경세	13,809,143	13. 통신	7,551,802
교육세	4,635,879	14. 국토 및 지역개발	9,750,872
농어촌특별세	3,851,346	15. 과학기술	5,087,504
종합부동산	1,131,106	16. 예비비	369,042
세외수입	79,335,498		

자료 : 2012년 회계연도 결산개요 통계 편 참고

지방의 총 수입은 223.0조원 지출은 191.9조원으로 세입의 비중 중 보조금(28.5%), 세외수입(26.6%), 지방세입(23.5%) 순으로 크며 총 수입에서의 지방세입이 차지하는 부분이 작은 것과 보조금의 비중이 큰 것은 지방의 자립도가 낮다고 볼 수 있고,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총 지출 중 특별광역시도의 지출이 52.1%를 차지하며, 시군 자치도 순으로 내려오면서 지출의 비중이 낮아지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은 취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II-2〉 지방세의 세입 및 세출

		단위:백만원, %			
총 세입		총 세출		191,923,934	비율
1	지방세 수입	52,300,144	총계 Total	합 계	191,923,934 100.0
	보통세	45,787,231		일 반 회 계	159,270,452 100.0
	취득세	13,849,322		공기업특별회계	13,281,493 100.0
	등록면허세	1,269,703		기타 특별 회계	19,371,988 100.0
	주민세	318,291	특별· 광역시· 도	합 계	100,025,254 52.1
	재산세	7,618,777		일 반 회 계	78,553,726 49.3
	자동차세	6,489,170		공기업특별회계	7,595,533 57.2
	레저세	1,072,226		기타 특별 회계	13,875,995 71.6
	담배소비세	2,785,028	시	합 계	48,492,039 25.3
	지방소비세	2,960,700		일 반 회 계	40,345,737 25.3
	지방소득세	9,420,020		공기업특별회계	4,955,165 37.3
	주행세	-		기타 특별 회계	3,191,137 16.5
	도축세	3,992	군	합 계	25,358,570 13.2
	소멸세입목	-		일 반 회 계	22,933,800 14.4
	목적세	5,781,668		공기업특별회계	730,795 5.5
	지역자원시설세	813,088		기타 특별 회계	1,693,975 8.7
	지방교육세	4,966,647	자치구	합 계	18,048,071 9.4
	도시계획세	1,932		일 반 회 계	17,437,189 10.9
	소멸세입목	-		공기업특별회계	- -
	지난년도수입	731,246			
2	세외수입	59,415,307			
3	지방교부세	31,937,666			
4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422,594			
5	보조금	63,494,896		기타 특별 회계	610,882 3.2
6	지방채 및 예치금회수	8,402,0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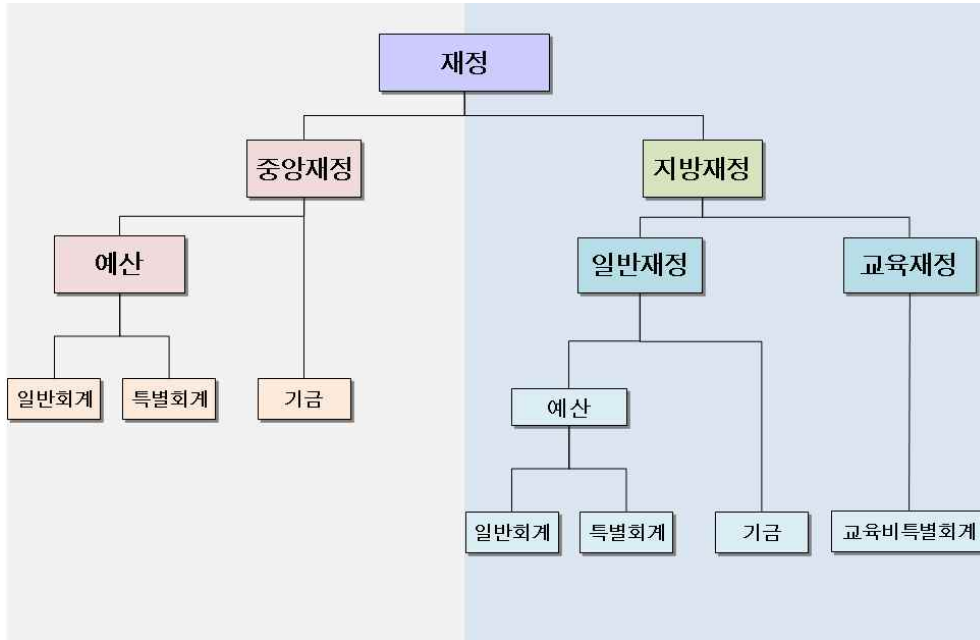
자료 : 지방재정연감 2011

## 2) 우리나라의 재정 체계

### (1)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재정 현황

우리나라의 재정은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재정활동의 수입과 지출은 세입과 세출로 나누어진다. 또한 재정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포함된다.

〈그림 II-2〉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자료 :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 참고

2013년 중앙정부재정의 구조는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18개) 및 기금(64개)으로 구성 2013년의 일반회계의 추경 총계규모는 240.7조원이며 소득세, 법인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별회계는 추경총계규모가 63.2조원으로서 특별한 사업 또는 특정자금 운용을 위해 구분되는 회계이다.

〈그림 II-3〉 중앙정부의 재정체계



자료 : 2013년도 대한민국 재정 참고

2013년 중앙정부재정의 규모는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제외한 총수입 360.8조 원, 총지출 349.0조 원으로써 2013년도 본예산 총수입은 11.8조원 감소한 360.8조 원으로 확정 되었는데 이는 성장을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분(6조 원)과 산업은행·기업은행 지분매각 지연 등에 따른 세외수입(6조 원) 감소분 등을 경정한 것이다.

〈표 II-3〉 2013년 중앙정부재정 규모

(단위 : 조원)

	2012년 예산	2013년 예산	2013 추경	
			정부안	확정
총수입	343.5	372.6	360.8	360.8
예산	234.0	253.3	341.5	241.5
국세	205.8	216.4	210.4	210.4
세외수입	28.3	36.9	31.1	31.1
기금	109.5	119.3	119.3	119.3
총지출	325.4	342.0	349.0	349.0
예산	228.1	243.6	247.7	247.6
기금	97.3	98.3	101.3	101.4

자료 : 기획재정부

2013년 통합재정수지는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 보장성기금<sup>29)</sup> 수지 흑자분을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2012년 예산 기준 14.3조 원 적자(GDP대비 -1.1%)에서 2013년 23.4조 원 적자(GDP대비 -1.8%)가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표 II-4〉 2013년 중앙정부재정 규모

단위: 조 원, %

	2011 결산	2012		2013		증감(B-A)
		예산(A)	결산	당초예산	추경예산(B)	
통합재정수지 (GDP대비)	18.6 (1.5)	18.1 (1.4)	18.5 (1.5)	30.6 (2.2)	11.8 (0.9)	-6.7 (-0.5p)
관리대상수지 (GDP대비)	-13.5 (-1.1)	-14.3 (-1.1)	-17.4 (-1.4)	-4.7 (-0.3)	-23.4 (-1.8)	-9.1 (-0.7p)

자료 : 기획재정부

예산과 기금을 합한 2013년 중앙정부의 총수입은 2012년 예산 대비 5.0% 증가한 360.8조원 수

29) 사회보장성기금에는 국민연금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보험기금, 사립학교교직원기금등이 포함됨

준으로 이는 기존의 2013년 예산안 보다 11.8조원 감소(성장률하락에 따른 세입감소 및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의 지분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감소분 반영)하였으며,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수입이 215.4조, 특별회계 수입이 26.1조원으로 전망되며, 기금수입은 8.9%증가한 119.3조로 예상되고 있다.

〈표 II-5〉 2013년 총 수입 전망

단위 : 조 원

	2012 예산 (A)	2013 예산		증감	
		본 예산	추경(B)	B-A	(B-A)/A
총수입	343.5	372.6	360.8	17.2	5.0
예산수입	234.0	253.3	241.5	7.5	3.2
국세	205.8	216.4	210.4	4.6	2.3
일반회계	209.3	227.2	215.4	6.1	2.9
(국세)	(197.3)	(208.9)	(202.9)	(5.6)	(2.8)
(세외수입)	(12.0)	(18.3)	(12.5)	(0.5)	(4.2)
특별회계	24.7	26.2	26.1	1.4	5.5
(국세)	(8.5)	(7.6)	(7.5)	(-1.0)	(-11.5)
(자체세입)	(16.3)	(18.6)	(18.6)	(2.3)	(14.3)
기금수입	109.5	119.3	119.3	9.8	8.9
사회보장기여금	40.5	46.4	46.4	5.9	14.5
융자금 회수	23.0	23.7	23.7	0.7	3.3
이자수입 등 기타	46.0	49.2	49.2	3.2	6.8
사회보장성 기금	59.4	63.9	63.9	4.5	7.6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3.5)

정부는 2012년 10월 342조 원 규모의 201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경기침체국면의 지속과 서민생활안정, 일자리확충을 위해 17조 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표 II-6〉 2013년 총지출 전망

단위 : 조 원

	2012 예산(A)	2013 예산		증감	
		본예산	추경(B)	B-A	(B-A)/A
총지출	325.4	342.0	349.0	23.6	7.3
예산지출	228.1	243.6	247.6	19.5	8.5
기금지출	97.3	98.3	101.4	4.1	4.2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2013.5)

## (2)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현황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156.9조 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이 58.2%라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독립성의 부족함을 보여준다. 지방세는 34.2%이며 최근 취·등록세 감면 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자체의 세출은 사회복지에 35조 원(22.3%), SOC에는 27.7조 원(17.7%)을 지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II-7〉 2013년 지자체 분야별 세입·세출 현황

단위 : 조원 %

	당초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세입순계	156.9	100	세출합계	156.9	100
			사회복지	35	22.3
자체재원	91.3	58.2	국토 및 지역개발	12.2	7.8
			SOC 수송 및 교통	15.5	9.9
지방세	53.7	34.2	소계	27.7	17.7
세외수입	33.4	21.3	환경보호	15.8	10.1
			일반공공행정	12.8	8.2
			농림해양수산	10.9	6.9
지방채	4.1	2.6	교육	10	6.4
			문화 및 관광	7.8	5
의존재원	65.6	41.8	산업·중소기업	3.2	2.1
지방교부세	31.5	20.1	예비비	3.2	2.1
국고보조금	34.2	21.8	공공질서 및 안전	2.9	1.8
			보건	2.3	1.5
			과학기술	0.6	0.4
			기타(행정운영경비)	24.6	15.7

자료 :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역별 예산은 경기도가 29.4조 원으로 가장 많고 서울특별시가 23.5조 원을 차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 세종시가 새롭게 생겨나 0.6조 원을 지역 예산으로 할당받았다.

〈표 II-8〉 지역별 예산 현황

지역	2013년 예산	단위 : 억원 %
		비율
총합계	1,568,887	100
서울	234,835	15.0
부산	88,758	5.7
대구	62,365	4.0
인천	77,170	4.9
광주	35,632	2.3
대전	35,924	2.3
울산	29,301	1.9
세종	5,670	0.4
경기	294,192	18.8
강원	77,646	4.9
충북	63,250	4.0
충남	87,045	5.5
전북	85,111	5.4
전남	104,741	6.7
경북	132,730	8.5
경남	123,212	7.9
제주	31,305	2.0

주: 시도별 예산규모는 「시도 본청예산 + 시군구 예산」임.

자료: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2.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문제점

### 1) 조세 및 재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

#### (1) 복지예산 및 증세

##### 저부담 저복지 국가, 한국의 복지요구 확대

대한민국은 과거 25년간 실질 GDP 증가율 세계 4위(중국, 아일랜드, 인도 순서)로 최빈곤 국가인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중고소득 국가인 “지원을 하는 국가”로 변모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국가가 성장하고 경제수준이 높아진 만큼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국가수준에 발맞춰 높아졌다. 그러자 국민들은 국가에 선진국형 복지를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한국은 재정지출규모도 낮고



복지 및 조세부담률도 낮은 저복지 저부담의 매우 작은 정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요구가 계속 되면서 2013년 대선에서 복지정책이 큰 논쟁거리가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가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그림 11-4〉 재정지출과 조세부담 그리고 복지지출간의 관계

<b>[조세부담]</b>				
<b>초고부담</b> (40%대)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탈리아
<b>고부담</b> (평균이상 30%대) OECD평균 (34.2%)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델란드 슬로베니아 독일, 체코 영국	아이슬란드
<b>중부담</b> (평균이하 30%대)		에스토니아 뉴질랜드 캐나다	폴란드 이스라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b>저부담</b> (20%대)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한국 터키, 칠레 멕시코	일본 미국		아일랜드
	<b>매우작은정부</b> (30%대)	<b>작은정부</b> (평균이하 40%대)	<b>OECD 평균</b> (43.6%)	<b>큰정부</b> (평균이상 40%대)
				<b>매우큰정부</b> (50%대)
				<b>[재정규모]</b>
<b>[공공사회지출]</b>				
<b>초고복지</b> (25-30%)			독일	프랑스,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오스트리아 핀란드, 이탈리아
<b>고복지</b> (20-24%) OECD 평균 (19.5%)		룩셈부르크	헝가리, 포르투갈 노르웨이, 슬로베니아 폴란드, 영국 네델란드, 스페인	그리스
<b>중복지</b> (15-20%)	스위스 슬로바키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미국	체코 이스라엘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b>저복지</b> (15%미만)	터키 한국 멕시코	에스토니아		
	<b>매우작은정부</b> (30%대)	<b>작은정부</b> (평균이하 40%대)	<b>OECD 평균</b> (43.6%)	<b>큰정부</b> (평균이상 40%대)
				<b>매우큰정부</b> (50%대)
				<b>[재정규모]</b>

자료 : 윤영진(2013)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개혁방안 pp.12.인용

### 최근 정부의 복지 분야 공약과 시행상태

최근 들어 정부는 다양한 복지정책을 시행하기로 약속했으며 현재까지 복지 분야에 대한 공약과 시행상태는 아래의 <표 11-9>와 같다.

아래의 <표 II-9>에서 13년도 본예산과 추경 그리고 14년도 예산을 통해서 다양한 복지의 시행으로 인해 세금 중 복지예산의 비중이 커지는 단계인 것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재원 부족을 이유로 주요 복지 공약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고 복지공약이 수정되었다.

또한, 정부는 2014년도 예산 중 복지예산이 100조 원에 육박하게 된다고 예측하고 있으며, 각 연구기관은 이에 따른 세수의 부족현상이 심화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표 II-9> '13 ~ '14년도 복지예산

단위 : 억원

구분	'13년도 예산		'14안	비고
	본예산	추경		
▪ 기초생활보장	85,604	87,761	88,234	▪ 의료급여(42,478→44,366)
▪ 공적연금	331,382	331,382	364,034	▪ 국민연금 급여(128,303 → 145,814)
▪ 보육·가족·여성	45,200	45,431	53,105	▪ 보육·양육수당(34,754→41,973)
▪ 노동	138,906	140,362	144,875	▪ 구직급여(35,375→38,602)
▪ 보훈	43,152	43,152	44,133	▪ 보훈보상금(22,806→23,435)
▪ 주택	174,733	187,679	182,623	▪ 구입전세자금(76,500→93,643)
▪ 노인·장애인 등	67,736	68,946	90,580	▪ 기초노령연금(32,097→52,002)
▪ 보건	87,315	88,212	91,141	▪ 건강보험가입자 지원(58,283→63,221)
합 계	974,029	992,927	1,058,726	8.7% 증가

#### 복지 예산 중 노인 부분의 기초노령연금의 논란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는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부는 세수부족 등의 이유를 들어 65세 이상 노인들 가운데 소득기준 상위 30%를 제외한 나머지 70%에게 매달 10~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이러한 수정사항이 발생하는 것은 복지예산의 부족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존 기초노령연금과의 현재 가치화(지급증가율이 차이를 보임)에서 문제점이 드러난다고 2013년 유시민 전 장관이 주장하였다. 게다가 기존에는 반대를 분명히 했던,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의 연계를 제시하면서 논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 증세와 복지축소의 논란

증세 논란은 대선공약인 “증세 없는 복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하고 국민들에게 증세와 복지축소에 대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정부는 재정상의 한계를 들어 기초노령연금 등 대선 공약을 대폭 축소하거나 수정했고, 국민연금과의 연계까지 주장함으로써 논란을 증폭시켰다. 특히 MB 정부

때 낮췄던 법인세를 다시 올리자는 의견과 감세를 유지하자는 의견이 충돌되고 있다. 야당은 이명박 정부 당시 이른바 낙수효과를 주장하며 감세정책을 시행했지만 실제 낙수효과는 일어나지 않고 기업들의 이익유보만 증가 했다는 이유를 들어 법인세를 되돌리고 부자 증세를 도입하는 등 증세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에 여당은 비과세 정비 및 지하경제 양성화 등 기존의 재원마련 노력을 통하여 증세 없이 복지를 하고 증세 이전에 재원마련 후 안 되면 증세를 하자는 2단계 증세론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야당이 부자 감세(각종 대기업을 위한 비과세)를 철회하자고 강력히 주장하면서 여야가 크게 대립하고 있다.

이러한 의견들이 충돌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도 복지예산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 지자체와 복지예산의 논란

정부는 애초 영·유아 무상보육확대로 인한 지방재정악화를 막기 위해 연간 5조 원 규모의 재정을 중앙정부가 확충해주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결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커짐에 따라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지방소비세의 전환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14년 예산안에서 밝혔다.

〈그림 II-5〉 지방재원 조정안

지방세제 개편	예산 지원	기능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소비세 전환율 단계적 6%p 확대 '13년 5% → '14년 8% → '15년 이후 11%</li> <li>■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개편</li> <li>■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신장 효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영유아 보육료 (국고보조율 10%p 인상)</li> <li>■ 분권교부세 3개 사업 (장애인, 정신, 양로시설) → 국고보조사업 환원('15년)</li> <li>■ 예비비 지원 ('14년 한시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방사무 성격의 국가사업 → 지방이양</li> <li>■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 광특회계 이관(포괄보조방식 전환)</li> </ul>

자료: 2013 국가재정운용계획

### (2) 지방분권화와 지방세

#### 지역불균형의 심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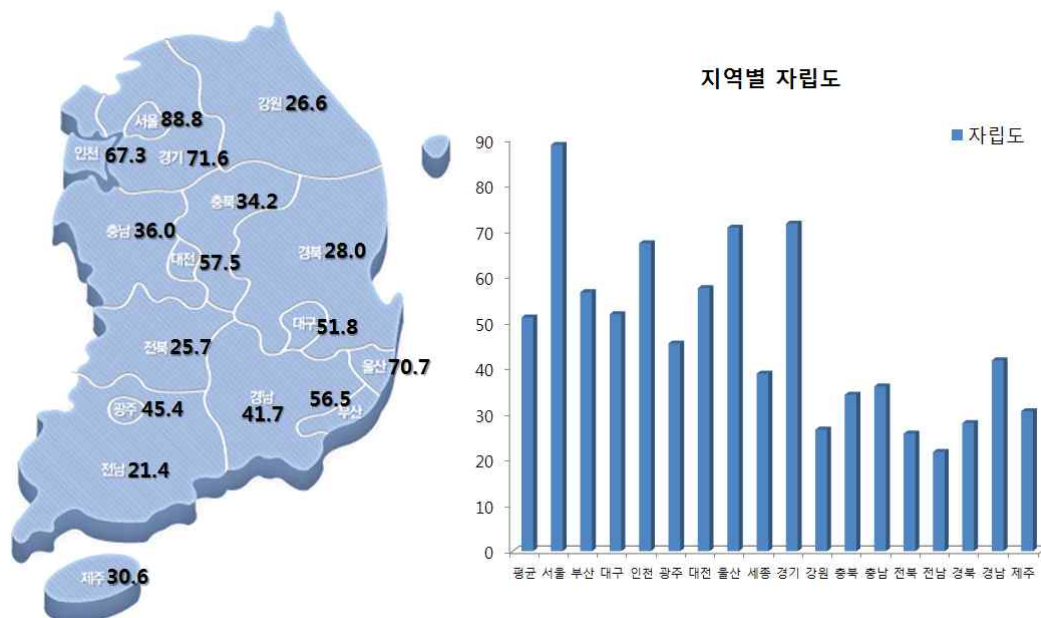
노무현 정부 이후 지방분권화는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에 비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낮은 곳이 많고 수준도 제각각이다. 이러한 행태는 결국 지역이 불균형하게 발전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수준을 보면 지역불균형이 매우 심한 상태라는 점을 알 수가 있다.

현재,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는 8:2의 비율을 보이고 있으나 지출구조는 4:6으로 오히려 지방의 세출이 더 많은 아이러니한 상황이며, 지방 정부들은 해당 지출을 의존 재원에 의존하면서 자립도가 낮아지는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거 성장 위주의 전략으로 인해 지역적, 산업적으로 불균형 발전을 이루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는 균형발전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판단 아래 지방분권화를 실시하였으나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기는 매우 어려웠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아래 <그림 II-6>에서 드러나고 있으며, 시간이 갈수록 지역 불균형 현상이 더욱 심화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지역 불균형은 재정뿐만 아닌 복지, 교육 등의 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림 II-6> 지역별 자립도



자료 : 안전행정부, e-나라지표

###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지방자치단체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구조는 자체적인 지방 세입에 비해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그림 II-7>이다.

<그림 II-7>에서는 국고보조금이 34.2조 원으로 지방재정의 21.8%를 차지하고 있으며, 또한 의존재원의 비율이 41.8%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은 91.3조 원으로 전체 세입 156.9조 원의 58.2%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지자체가 자체수입보다 중앙정부의 보조금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지금 당장 지

방재원의 부족현상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서 정부의 보조금은 좋은 임시방편일 수는 있지만, 근본적 해결안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림 II-7〉 지자체의 세입구조 및 세부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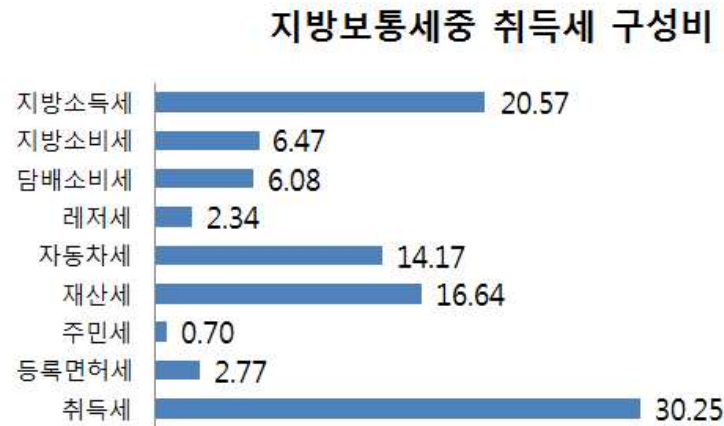
자료 :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취·등록세의 큰 세수 비중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인가? 아래의 <그림 II-8>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중 취·등록세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 중 취·등록세가 차지하는 부분은 약 40%대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취·등록세의 증감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취·등록세의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취·등록세의 세수수입은 부동산 관련 세제이며 부동산 시장의 악화 시 지방의 세수가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현재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인 취·등록세 감면은 지방 재정 악화에 큰 영향을 미치며, 예상 세수손실액이 2조 3807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다.(출처: 한국 지방세연구원)

〈그림 II-8〉 지방보통세 중 취득세 구성비 (2011년 기준)



자료: 지방재정연감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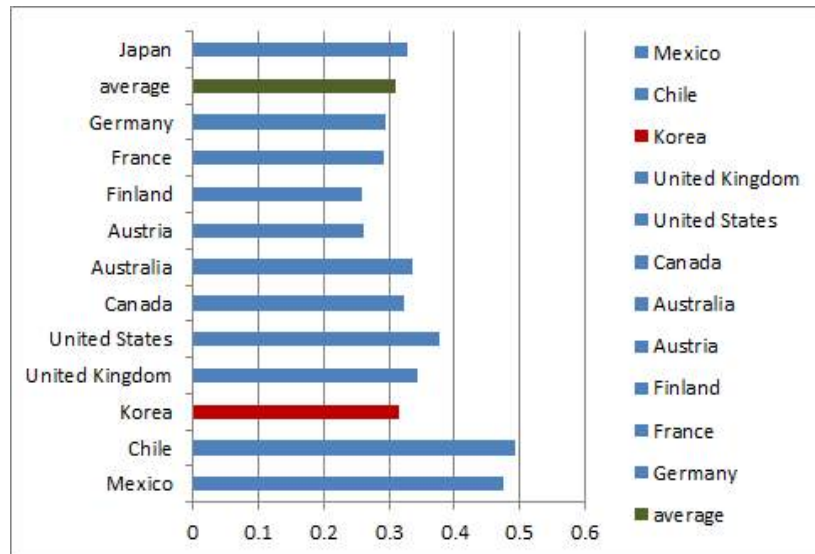
### (3) 소득세와 소득의 재분배 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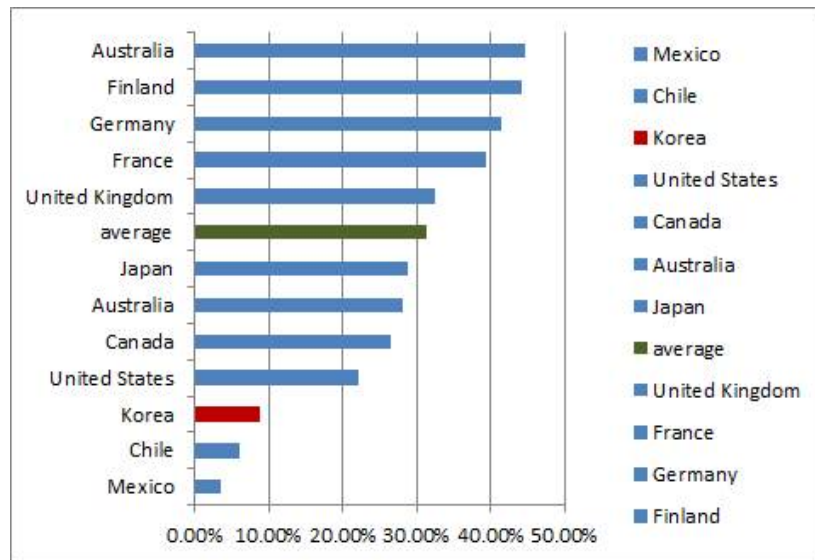
#### 소득세의 낮은 소득재분배 기능

현재 우리나라의 세전 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평균 31.3%를 크게 밑도는 수준으로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가 매우 취약하다. 이는 높은 면세점 및 공제 감면제도가 전체 국세감면액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소득 대비 각종 소득공제 비중 역시 52.9%로 OECD 평균 25.2%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점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최근 발의된 세법개정안 시행 시, 세후감소율이 9.23%로 전보다 더 감소한다고 밝히지만, 아래의 <그림 II-9>를 참고해보면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좀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9> 주요국의 지니계수와 세후 지니계수 (2011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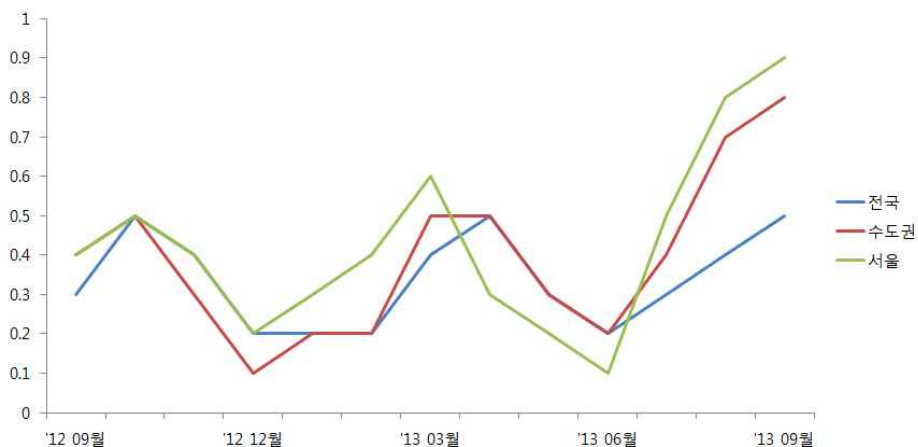
자료: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새정부 조세재정 정책의 주요과제』 참고, 2010 OECD Statistics 참고

#### (4) 부동산 관련 조세와 전·월세 대란

##### 현실과 괴리가 발생하는 전세법안

최근 정부가 내놓은 대표적인 전세 법안으로 ‘목돈 안 드는 전세’가 있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목돈 안 드는 전세”의 경우 현실과의 동떨어진 복잡함과 세입자의 입장에서만 고려했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일명 ‘강통전세’를 막기 위한 전세 보증금반환 보증 제도는 임차인에게 지급해야 할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이지만 실적이 없으며, 이 제도도 “목돈 안 드는 전세”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이를 반증이라도 하듯 전세금은 13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법안이 제대로 그 효력을 발휘하지 못해 정책당국에 대한 불신감만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그림 II-10〉 주택 전세 가격지수





자료: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e나라지표

### 무분별한 완화정책과 지방세수 부족현상

최근의 정부정책은 지방세수 부족현상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하향조정은 부동산거래의 활성화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지방의 세수가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최근의 부동산 거래증가는 취득세 감면기간이 2013년 12월 31일까지라서 마지막 취득세감면 효과를 얻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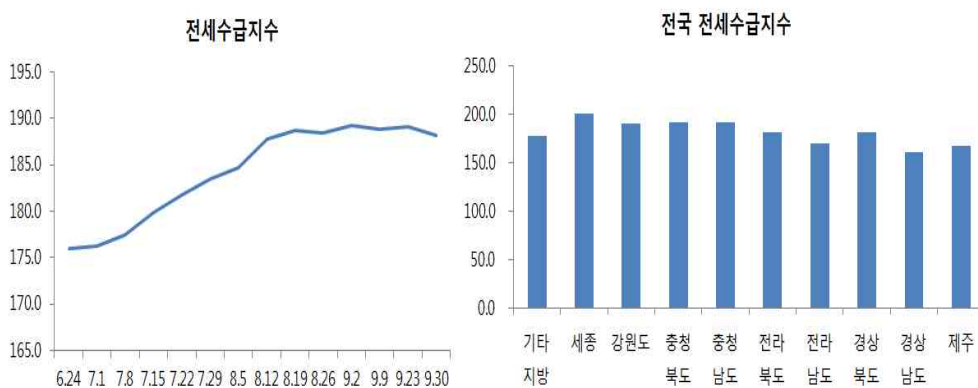
지금까지 이어져 온 3년간 지방세수 감소로 인하여 지방은 7조 904억 원에 이르는 지방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 세수감소는 각종 복지사업에 지출이 많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불러오고 있다.

### 전세가격의 폭등현상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전세금이 서민들과 중산층을 위협하면서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불안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10월 2일 기준 수도권 평균 전세가가 2억 원을 돌파하였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분양 아파트 전세전환을 제시했으나, 이 방법은 임시방편이지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전세가격이 폭등하는 근본 원인은 전세 물건의 공급부족이 가장 크며, 이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전세 공급자들이 월세로 돌아서기 때문이다. 현재의 전세수급지수는 거의 200(KB전세수급지수는 100이 넘어서면 공급부족을 나타냄)을 향해 상승 중이다.

〈그림 II-11〉 2013년 9월 30일까지의 전세수급지수



자료: KB부동산 Reasy

### (5) 늘어나는 국가 부채

### 국가부채의 상승



1997년 IMF경제위기 이래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있었다. 이후 감세정책과 4대강 사업으로 대표되는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는 대표적인 선 성장 후 분배 이론으로 약 5년간(2008~2012) 시행되어 왔지만, 대기업에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나머지 중소기업에는 확실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대규모 토목공사로 인한 국가 재정 건전성의 악화현상을 가져왔다고 평가된다.

현재 국가 부채는 2012년 기준 902조 원으로 GDP 대비 70.9%를 기록하고 있으며, 국가 채무의 (443조) 약 2배가량이다. 국가부채란 국가채무에 발생가능채무를 더한 것인데, 2012년의 국가부채는 전년도인 2011년의 국가부채 773.5조 원보다 16.6% 상승하였으며, 2013년 추가경정을 생각하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 국가부채와 국가신용도

국가의 신용등급은 해외 투자 유치 및 해당국가 내 채권발행기관의 신용등급 판정의 기준이 되므로 때문에 중요하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2-8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상승해온 한국의 국가신용도는 국민소득과 높은 상관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국가 채무의 총량은 신용등급의 하락 시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리고 부채의 증가속도가 지나치게 빠르게 되면 국가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국가부채와 공공기관의 부채증가

국가재정의 건전성 관리와 관련하여 공공기관 부채가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대두하고 있다. 최근 일반시민을 기준으로 한 조사에서 52%가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대답하였고, 34%가 공공기관 재정의 방만함에 대해 지적을 하였다. 이를 통해 국가부채 및 공기업부채에 관련된 문제는 국민들에게도 더 이상 관심 밖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로는 공공기관의 유동성 위기가 발생했을 시, 정부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부채는 관련 법령상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현재 국가채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공공기관의 총 부채합계가 500조 원에 육박하고 있다.

〈표 II-10〉 연도별 공공기관 부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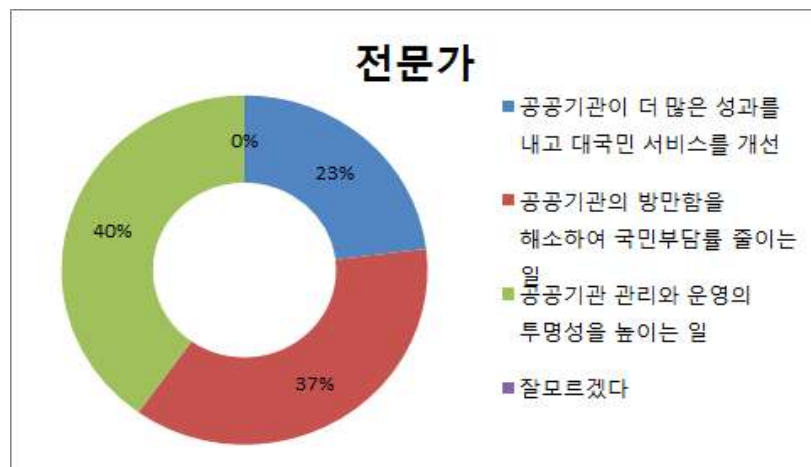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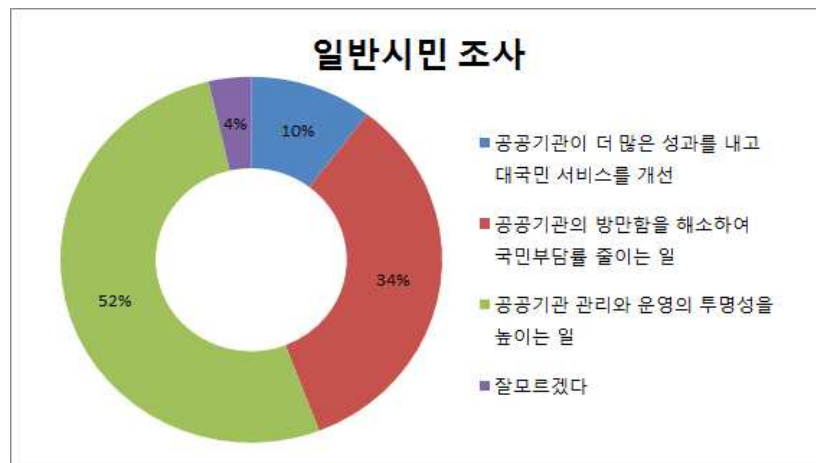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증감액	증감률
합 계	290.0	336.8	397.0	459.0	493.4	203.4	70.1
· 공기업	200.8	238.7	292.0	329.1	353.6	152.8	76.1
· 준정부기관	81.0	88.8	96.1	120.2	129.6	48.6	60
· 기타공공기관	8.2	9.3	8.9	9.7	10.2	2	24.4

주: 상기 증감액, 증감률은 2008년 대비 2012년 수치임.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13.4.30)

〈그림 II-12〉 박근혜정부의 공공기관 합리화에 대한 시민 조사



자료: 한국조세연구원(2013) 『신정부의 공공기관 정책방향』 참고, 재구성

#### (6) 저성장과 조세·재정 정책

### 국가주도의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고 있었던 조세·재정

과거 우리나라는 경제개발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대기업 위주의 조세정책을 폈다. 이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부담체계는 재벌 대기업에게 각종 세제상의 특혜를 안겨주었고 재벌 대기업은 이를 발판으로 국가 발전을 주도했다. 재정지출 역시 경제발전사업에 과잉투자되고, 사회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불균형적으로 발전해왔고, 이는 현재 대한민국 저성장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진행과 우리나라 조세와 재정지출의 문제점으로 인한 소득구조의 양극화가 저성장시대의 원인이라고 하겠다.

## 3. 소결

현재 우리나라의 2013년 추경 총 예산 규모는 예산 수입 360조 원과 지출 349조 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중앙과 지방의 세입구조는 8:2를 구성하고 있으며 지출구조는 4:6으로 구성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이런 현실에서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의 문제점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지목되고 있다. 우선 본격적인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복지재원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하였고, 급기야 증세론이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현 상황에서는 증세 없는 복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지방정부의 재정문제이다. 지방재정의 자립도가 낮고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셋째는 한국의 소득세가 소득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며, 이에 따른 양극화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는 현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이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는 전·월세 대란으로 표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늘어나는 국가부채의 문제는 국가의 신용도와 국민소득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 제2장 해외사례 연구

### 1. 국외 조세제도 및 재정 현황

#### 1) 독일

##### (1) 독일의 조세 제도

독일의 조세제도는 과세주체를 기준으로 공동세, 연방세, 주세와 기초자치단체세로 나뉘볼 수 있다. 여기서 공동세의 의미는 우리나라에는 없는 특이한 개념이다. 공동세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공동으로 세입이 되는 세수로서 독일연방헌법 제106조 제3항 제2문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수 각각 반반을 연방과 16개의 주가 나누어 가짐’ 이라고 밝히고 있다. 독일의 경우 공동세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있으며, 소득세는 근로소득 원천징수, 연말정산분, 분리과세분, 이자 원천징수분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또한, 독일은 지방 배분에서 ‘주의 재정력지수’ (주 소속인 게마인테의 부가세, 소득세 배분 몫, 부동산세, 영업세)와 ‘조정지수<sup>30)</sup>’ 를 사용하여 조정지수가 재정력 지수보다 높은 주의 경우 재정력지수가 조정지수보다 높은 주에게 지원을 받는 형태로 지방배분이 되고 있다.

〈표 III-1〉 독일의 공동세 배분 비율

단위 : %

	연방	주	게마인테	EU
소득세	42.5	42.5	15.0	-
법인세	50.0	50.0	-	-
부가가치세	43.1	43.4	2.0	11.5
소득세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44.0	44.0	12.0	-

자료: 김유찬, 이유향(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독일의 세입은 공동세의 비중이 높는데, 공동세를 연방과 지방(주, 게마인테)에 따라 일정 비율로 배분해서 부과한다. 연방세에는 연대세가 있는데, 이는 통일세의 개념으로 법인세와 소득세에 부과하는 세수이며 위헌 신청의 논란이 있었으나, 최근 합헌이 된 세제이다. 또한, 연방세 속에 있는 에너

30) 조정 지수 =  $\left( \frac{\text{주의 소득세} + \text{법인세} + \text{그 외 자원}}{\text{가중치 부여된 국민수}} \right) * \text{각 주의 주민 수} + \text{주 소속 게마인테의 소득세 배분 몫} + \text{부동산세} + \text{영업세 등}$

지세가 총 세수의 7.24%를 차지하고 있는데, 독일은 에너지세를 통해서 친환경국가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선두주자가 되기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표Ⅲ-2〉 독일의 세입과 세목현황(2007년)

			단위 : 억 유로		
공동세	세수	비중	주세	세수	비중
소득세(근로소득원천징수)	1317.7	24.48%	재산세	0.1	0.00%
소득세(연말정산분)	250.3	4.65%	자동차세	89	1.65%
소득세(분리과세분)	137.9	2.56%	맥주세	7.6	0.14%
소득세(이자원천징수)	111.8	2.08%	부동산취득세	69.5	1.29%
법인세	229.3	4.26%	경주복권세	17	0.32%
부가가치세	1275.2	23.69%	상속증여세	42	0.78%
수입부가가치세	421.1	7.82%	소방세	3.2	0.06%
연방세	세수	비중	기초자치단체세	세수	비중
연대세	123.5	2.29%	영업세	401.2	7.45%
담배세	142.5	2.65%	부동산세	107.1	1.99%
커피세	10.9	0.20%	부동산취득세	0	0.00%
코냑세	19.6	0.36%	기타자치단체세	5.7	0.11%
에너지세	389.6	7.24%			
보험세	103.3	1.92%			
알콜함유음료수세	0	0.00%			
삼폐인세	3.7	0.07%			
중간생산물세	0.3	0.01%			
전기세	63.6	1.18%			
기타연방세	0	0.00%			
관세	39.8			0.74%	
계	5382.4			100.00%	

자료: 김유찬, 이유향(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독일)」

## (2) 독일의 특이한 세제

### 환경세(에너지세)

유럽연합(EU)에서 에너지 소비가 가장 많던 독일은 1999년 4월부터 에너지세를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2000년 3월에 재생에너지법(EEG)을 발효하여 세계 최초 재생에너지 육성을 시작하여 독일 내 에너지 산업의 다변화를 구상했다. 에너지세는 탄소세와 달리 에너지의 발열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에너지세를 통해서 다양한 에너지를 발굴하고, 기업의 환

경오염을 줄이고, 생태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세의 발열량 기준은 조세로서 개인들에게 능력에 맞게 적절히 분배할 수 있는 기능과 사회 에너지 자원의 적정 분배기능을 동시에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다.

〈표Ⅲ-3〉 독일의 에너지세 내용

납세의무자	에너지원을 에너지원저장소에서 유출할 때 납세의무 발생 납세의무자는 저장소의 소유자
세율	중유 1,000리터당 654.50유로 가스오일 1,000리터당 납 성분에 10mg/kg 이상 485.70, 10mg/kg 이하 470.40 난방유 1,000kg당 130.10유로 1,000kg 액화가스당 다른 에너지원과 안 섞이면 409.00유로 기타의 다른 경우 1,217.00유로 MW(메가와트)당 20.50유로 등등
과세절차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에 대해 15일까지 신고 및 스스로 계산 전기세는 매년신고와 매월신고 중 선택가능
비과세 감면	재생 가능한 에너지원으로부터 획득된 전기 전기 생산에 투입되는 전기 2Mw 이하의 단위로 생산, 자가 소비되는 소규모 전기 생산 비상시에 대비한 전력시설로부터의 전기 비행기나 선박에서 생산되어 그곳에서 소비되는 전기 개별 에너지 생산에 대해 몇 가지 감면 존재

자료 : 주요국의조세제도 독일편 김유찬 이유향

## 2) 일본

### (1) 일본의 조세 제도

일본은 세출 비중이 한국과 흡사한 국가라(지방세 6 중앙 4) 볼 수 있으나, 일본은 최근 세계개혁을 통해서 국세 6, 지방세 4의 세입구조를 만들었다. 세입구조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모습은 한국의 그것과 흡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97년 4월부터 지방소비세가 창설되면서 당시 한국의 소비세와는 달리 지방에서도 소비세를 부과하는 모습을 보였다(한국은 2010년 지방소비세를 창설하고 부가가치세액을 과세표준으로서 지방소비세를 매겼다). 또 다른 일본의 특징적인 조세제도 중 하나는 시정촌세 중 하나인 고정자산세가 있다. 이것은 한국의 재산세의 성격과 흡사하다고 보이고 있으나, 포괄적인 범위(토지, 가옥, 상각자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본 내 시정촌세의 40%를 담당하고 있다.

이 외에도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사업을 충당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이 있는 일본의 시정

촌에서만 부과하는 세목으로 목적세의 성격을 보이며, 토지와 가옥을 대상으로 하는 면에서 지방으로의 재정 이전이 잘되어졌다고 보인다.

〈표Ⅲ-4〉 일본의 세입 현황

단위 : 조 엔 %

국세	55.1조엔	지방세	40.4조엔	시정촌세	21.6조엔
소득세	20.5	도부현세	18.8조엔	보통세	92.4
법인세	30.3	보통세	92.6	시정촌민세	47.1
상속증여세	2.8	도부현민세	33.7	고정자산세	40.7
지가세	0	사업세	32.1	경자동차세	0.8
소비세	19.4	지방소비세	13.4	시정촌담배세	3.8
주세	2.8	부동산취득세	2.5	광산세	0
인지수입	2.2	도부현담배세	1.4	특별토지보유세	0
담배세	1.6	골프장이용세	0.3	법정외보통세	0
휘발유세	3.8	자동차세	9.1	목적세	7.2
석유가스세	0	광구세	0	입탕세	0.1
항공기연료세	0.2	고정자산세(특레)	0.1	사업소세	1.5
석유석탄세	0.9	법정외보통세	0	도시계획세	5.6
자동차중량세	1.3	목적세	7.4	수리지역세	0
관세톤세	1.7	자동차거래세	2.1	국유재산소세	
특정재원	2.7	경유인수세	5.3	시정촌교부금	0.4
		수렵세	0		

자료 : 국중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일본)」 pp.31. 자료 인용

## (2) 일본의 특이한 세제

### 일본의 입탕세와 골프장이용세

일본의 경우 한국과는 다르게 입탕세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조세는 나라의 특색이 반영된 세제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골프장이용세의 경우도 입탕세와 마찬가지로 관광세의 일환으로써 활용되고 있는 세제이며, 일본의 관광 사업을 관광에서만 끝내지 않고 세수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세이다.

나아가서 입탕세는 광천욕장을 이용하는 자에 한하는 세제이며, 세수는 환경위생시설과 광천원의 보호 관리시설, 소방시설 및 관광 진흥을 위해 쓰이고 있기에 관광사업과 지방세수확보의 차원에서 유용한 세제이다.

## 3) 영국

### (1) 영국의 조세 제도

영국의 조세제도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다는 것이 특징이며, 소득세와 사회보험세(국민연금)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주된 수입원이다. 이중 카운슬세는 지방정부의 주세원이고 단일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세입규모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으나, 취약한 세입규모 대신 중앙의 이전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정부가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연료세는 총 조세수입의 4%를 담당하며, 쓰레기 매립세와 에너지환경세와 함께 환경보전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험 프리미엄세와 항공 여객세 콘크리트 골제세 등 한국에는 없는 다양한 세원을 바탕으로 한 세제가 존재하고 있다.

2008년 5월, 금융위기가 한창일 때, 영국은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해서 기본공제액을 인상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영국의 조세제도와 한국 조세제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사회보험세에 있다. 사회보험세란 제2차 대전 후 영국 노동당 정부가 시행한 것으로 노령, 실업 등 빈곤유발에 대한 추가적 지출이 필요한 모든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현금급여를 하는 국민보험제도이다. 또한, 사회보험세는 한국의 국민연금과는 달리 조세로서 국민들에게 사회보험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6개의 각기 다른 기준(Class)을 만들어서 근로형태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표 III-5〉 영국의 세입 현황

세목	2008	
	단위 : 십억파운드	단위 : %
소득세	155	28.65%
사회보험세	104.6	19.33%
부가가치세	83.8	15.49%
법인세	51.3	9.48%
연료세	25.7	4.75%
카운슬세	24.9	4.60%
사업세율	23.7	4.38%
기타세	15.7	2.90%
인지세	13.5	2.49%
담배세	7.6	1.40%
자동차세	6.1	1.13%
자본이득세	5	0.92%
맥주세	3.4	0.63%
상속세	3.2	0.59%
와인세	2.9	0.54%
관세	2.5	0.46%
보험프리미엄세	2.4	0.44%
주세	2.3	0.43%
항공여객세	2.1	0.39%
석유세	1.7	0.31%
도박세	1.5	0.28%
쓰레기매립세	1.1	0.20%
에너지환경세	0.7	0.13%
콘크리트골제세	0.4	0.07%



자료 : 박정수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pp.29. 자료추출

## (2) 영국의 특이한 세제

### 영국의 소득세와 Finance Act

영국의 소득세는 정부수입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비중이 높은 세수이며 전통이 깊으며 다양한 공제혜택을 주고 있다. 이는 최저세율구간을 폐지한 것을 반영한 것이며 한국과는 달리 직접세를 매년 Finance Act를 통해 과세나 공제범위의 조정을 탄력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표Ⅲ-6〉 영국의 소득세 세입구간

단위 : %, 파운드				
세율 (2008~2009)	배당소득	저축소득	기타소득 (자영업자소득포함)	구간 (개인공제 이상)
기본 세율(basic)	10	20	20	0~34,800
높은 세율(high)	32.5	40	40	34,800

자료 : 박정수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영국)」 pp.31. 자료인용

## 4) 미국

### (1) 미국의 조세 제도

미국의 조세체계는 연방세와 지방세로 나뉘어져 있으며, 소득세가 연방세와 일반세수의 60.7%를 구성하고 있다. 사회보장세가 873.4십 억 달러로 구성되어있으며, 일반적인 연금형태의 기금과 의료보험이 세입의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대부분의 공기업 잉여는 영업 손실을 기록하는 중이다(2007년 22억 달러 손실).<sup>31)</sup> 미국 지방의 경우 지방이전수입보다 지방의 총세입이 더 많으며 총세입에는 판매세와 재산세 그리고 개인세가 주를 이루고 있다. 주마다 소득세가 다 다르며(미주리 0.5 ~ 뉴욕 8%), 관광세의 개념으로 호텔숙박세가 존재하고 있다.

〈표Ⅲ-7〉 미국의 세입구간

단위 : 십억달러			
연방세	2007	지방세	
일반세수	1,925.50	총수입	1961.5
소득세	1,168.80	자산이전수입	58.7
법인세	342.10	재정수입	1902.8

31)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 pp.84 발췌

사회보장세	873.40	총세입	1304.1
소비세	57.10	개인세	325.4
사회보장세	873.40	소득세	298.3
고용및일반연금	823.70	기타	27.1
노령자및 생존자	542.10	판매세	436.5
장애	92.00	재산세	390.9
의료보험	185.20	판 매 기	90.3
철도연금	2.40	법 인 소	60.9
실업보험	45.00	득세	
기타연금	4.70	사회보장기여	22.8
연방공무원연금	4.70	자산소득	100.3
소비세	57.10	이전수입	481.3
연방기금	3.10	연방정부	376.3
주류	8.60	사업자	40.9
담배	7.60	개인	64.1
전화	-11.60		
오존파괴물질	0.00		
교통연료	-3.00		
기금	53.90		
도로	39.70		
공항	11.40		
폐병	0.60		
내국운하	0.10		
유해물질	1.00		
석유누출부담금	0.20		
수산자원	0.50		
백신평해보상	0.20		

자료 : 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미국1)」 pp.29. 자료추출

## (2) 미국의 특이한 세제

### 미국의 법인세와 호텔숙박세

미국의 법인세는 한국의 과세구간에 비해 다양한 과세구간을 가지고 있으며, 회사의 유형이나 소득에 유형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미국은 다양한 유형의 법인이 존재하고 있으며(개인사업체, 파트너쉽, 일반주식회사, S주식회사), 다양한 유형의 법인조직들은 과세 상에 있어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호텔세의 경우 지방정부의 주요세원 중 하나가 되며, 여행세 및 관광세의 개념으로서 일본과 비슷하게 관광자원에 대해서 세수의 대상으로 본다.

〈표Ⅲ-8〉 미국의 법인세 세입구간

과세소득구간	한계세율
~50,000	15.00
50,000~75,000	25.00
75,000~100,000	34.00
100,000~335,000	39.00
335,000~10,000,000	34.00
10,000,000~15,000,000	35.00
15,000,000~18,333,333	38.00
18,333,333이상	35.00

자료: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1) pp.448 자료 발췌

〈표Ⅲ-9〉 미국의 기업조직 유형과 과세 장·단점

기업형태	장·단점
개인사업체	기업이 아닌 사업주 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제) 기업투자는 과세상 사업주 자산으로 간주(회사에 유보된 이윤도 과세)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가능(수동적 손실 제외) 사업주는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세 부과
파트너쉽	파트너쉽 소득은 파트너 차원에서 개인소득과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제) 회사로부터 현금 등 자산 투입이나 환수가 제한적으로 가능(비과세) 손실은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제한적으로 공제 가능 파트너쉽 소유지분이 회사소득 지분만큼 증가 : 지분의 양도소득에 영향 사업주는 피용인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자영업자세 부과 기업과 대주주의 과세연도 동일, 보험료 등 일부 부가급부 과세 유한책임 파트너 가능
일반 주식회사	회사소득은 법인차원에서 15~39%로 과세 배당은 주주차원에서 과세 (이중과세: 배당은 기업수익이 충분한 경우) 유보된 소득은 주주의 소득세에서 비과세(이윤적립세 등은 예외) 회사에 고용된 주주는 피용인 대우, 부가급부 비과세 과세연도 선택가능 (개인서비스 회사 제외) 5년 이상 보유주식 양도소득은 50% 비과세 양도손실은 소득과 상쇄되지 않고 이월되어 다른 양도소득과 상쇄 순 영업손실은 다른연도 소득과 상쇄 법인 양도소득은 일반법인세율로 과세(15% 우대세율 부재)
S주식회사	회사소득은 주주차원에서 개인소득세로 과세(이중과세 부제) 손실은 주주차원에서 다른 개인소득으로부터 공제(수동적 손실 제외) 양도차익은 개인소득세에서 우대세율(20%)적용, 다른 양도손실과 상쇄 현금 등 자산을 투자하거나 배분받으면 지분 한도내에서 비과세 파트너쉽 소유지분이 회사소득 지분만큼 증가 : 주식양도소득에 영향 배당과 관계없이 회사소득 과세 주주인 피용인에 대한 부가급부 과세(회사 차원에서 공제) 일반 역년이 과세연도(사업상의 이유가 없는 경우)

자료:주요국의 조세제도(미국1) pp.448 자료 발췌

## 5) 북유럽

### (1) 스웨덴의 조세 제도

북유럽 국가 중 복지국가로 손꼽히는 스웨덴의 조세는 소비세, 소득세, 사회보장기여금 순으로 세입이 구성되어 있으며, OECD 평균에 비해 소비세율이 높고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또한 매우 높다. 북유럽국가 중 스웨덴은 조세개혁 이후, 소비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연료세에 과세를 강화하면서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담을 조금 줄였다고 볼 수 있다.

스웨덴의 소득세는 노동자의 85%가 약 31% 세율의 지방소득세만 납부하고 기준소득을 넘는 15% 상위계층에게만 지방소득세+중앙소득세 20%를 더해 51% 한계세율을 적용한다.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수익이 주주이윤이 아닌 기업에 재투자되도록 다양한 재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공제하고, 소득에 대해서는 고세율을 취하고 있다. 이로써 법인세를 통해 기업투자의 확대를 유도해 세금과 성장의 선순환을 이루려 하고 있다.

〈표Ⅲ-10〉 스웨덴의 주요세목 현황

(단위: GDP %, 2010년)

	소득세	법인세	자산세	소비세	기타*	사회보장기여금				조세 부담률	국민 부담률
						고용주	피고용자	기타**	계		
스웨덴(a)	12.7	3.5	1.1	13.4	2.4	8.7	2.7		11.4	34.1	45.5
OECD	8.4	2.9	1.8	11.0	0.5	5.3	3.2	0.6	9.1	24.6	33.8
한국(b)	3.6	3.5	2.9	8.5	0.8	2.5	2.4	0.8	5.7	19.3	25.1
차(a-b)	9.1	0.0	-1.8	4.9	1.6	6.2	0.3	-0.8	5.7	14.8	20.4

출처: OECD(2012), Revenue Statistics 1965-2011

OECD 조세 분류 중 규모가 크지 않은 고용세와 기타 세금을 '기타\*'로, 기타\*\*에는 자영자, 국가 몫 등이 포함

〈표Ⅲ-11〉 스웨덴의 조세개혁

분류	항목	내용	효과
소득세	중앙소득세	적용대상 축소, 최고 한계세율 73%→ 51%	감세
	자본소득	임금소득과 분리과세. 모든 자본소득에 30% 세율	증세
	기업 복리후생	실제 시장가치를 과표소득에 반영	증세
법인세	법인세율	최고 한계세율 57%→ 30%	감세
소비세	부가가치세	면세 혹은 저세율→ 과세 대상 확대(서비스상품 등)	증세
	연료세	과세 강화	증세

출처: Ministry of Finance(2010), "History of the Swedish tax system" 등 재구성. 오건호, 2013

## (2) 북유럽의 조세 제도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북유럽의 대표적인 국가들이며 고복지 국가로 알려져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다른 북유럽국가들에 비해 법인소득세가 높게 구성되어 있으며, 핀란드와 스웨덴은 사회보험료나 개인소득세, 소비세 면에서 다소 높게 구성돼있다.

북유럽 3국들은 1985년도에 소비세와 사회보험료 그리고 급여세를 올리는 대신 개인소득세의 비중을 낮추었다.

〈표Ⅲ-12〉 북유럽 국가들의 조세구조

주: 1) 한국의 경우 OECD 기준으로 개인소득세와 법인소득세로 분류하기 어려운 1985년의 주민세

	1985				2010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OECD 평균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OECD 평균
개인소득세 <sup>1)</sup>	37	23	39	30	30	24	28	24
법인소득세	3	17	3	8	6	24	8	9
사회보험료	22	21	25	22	30	22	25	26
급여세	0	0	4	1	0	0	7	1
재산세	3	2	2	5	3	3	2	5
소비세	34	38	27	32	31	27	29	31
- 일반소비세 <sup>3)</sup>	18	18	14	16	20	19	21	20
- 특별소비세	16	19	13	16	11	8	8	11
기타	0	0	0	2	0	0	0	3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는 금액이 상대적으로 작아 개인소득세로 포함

2) 지방세인 사업소세임

3) 한국의 경우 일반소비세는 부가가치세(VAT)만 존재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1965-2011, 2012

### (3) 북유럽의 특별한 조세 제도

#### 북유럽의 특별조세 제도

스웨덴의 근로소득 공제제도의 경우 65세 이상 납세자에게 추가감세로 퇴직연령 이후에도 개인에게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작용을 하고 있다. 네덜란드의 경우, 62세 이후 계속 근로하는 종업원에 대해 3,000유로까지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책 또한 노령인구 자원의 활용을 꾀하는 북유럽 모습을 볼 수 있다.

## 2.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비교

### 1) 우리나라 조세와 외국 조세의 세목별 비교

#### (1) 소득세

소득세 과세단위 설정 방식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영국과 일본은 개인단위로 과세를 하나 미국과 독일의 경우 선택적 이분이승제로 부부가 개별적으로 소득신고를 할 수가 있고, 또한 공동으로도 할 수 있다. 최근 OECD 국가들은 과표구간과 소득세 명목 최고세율을 줄여나가는 추세인데, 금융위기 이후 2010년부터 최고세율을 올린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 이스라엘, 덴마크 등이 있다. 세율에서는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이 OECD 평균과 비슷한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낮은 소득세율을 가진 국가는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으로 이들 국가는 상대적으로 지방세율이 높다.

아래의 표 III-2는 중앙정부기준이며 지방세를 포함하게 되면 OECD 평균을 밑돌게 된다 (2013년 기준 한국 38.5% OECD 평균 41.5).

〈표 III-13〉 주요국의 소득세 과세단위

국가	과세단위
한국	개인단위 과세
미국	선택적 이분이승제(임의적 선택에 따라 부부가 각각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 가능)
영국	개인단위 과세
일본	개인단위 과세
독일	선택적 이분이승제(임의적 선택에 따라 부부가 각각 별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 가능)
프랑스	세대단위 과세

출처 : 국회 예산정책처 알기쉬운조세제도 2012.5 인용

〈표 III-14〉 중앙정부기준 소득세 명목최고세율

구분	단위 : %										
	1981	1990	2000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호주	60	47	47	47	47	45	45	45	45	45	45
오스트리아	62	50	50	50	50	50	50	50	50	50	50
벨기에	67.5	55	55	50	50	50	50	50	50	50	50
캐나다	43	29	29	29	29	29	29	29	29	29	29
칠레			45	40	40	40	40	40	40	40	40

체코			32	32	32	32	15	15	15	15	15
덴마크	40	40	28	26.5	26.5	26.5	26.5	26	18.7	18.6	19.7
에스토니아			26	24	23	22	21	21	21	21	21
핀란드	51	43	37.5	33.5	32.5	32	31.5	30.5	30	30	29.8
프랑스	60	56.8	53.3	48.1	48.1	40	40	40	40	41	45
독일	56	53	51	42	42	45	45	45	45	45	45
그리스	60	50	45	40	40	40	40	40	45	45	45
헝가리		50	40	38	36	36	36	36	32	16	16
아이슬랜드			33.4	26.8	23.8	22.8	22.8	24.1	33	31.8	31.8
아일랜드	60	53	44	42	42	41	41	41	41	41	41
이스라엘			50	49	49	48	47	46	45	45	48
이탈리아	72	50	45	43	43	43	43	43	43	43	43
일본	75	50	37	37	37	40	40	40	40	40	40
한국	62	50	40	35	35	35	35	35	35	35	38
룩셈부르크	57	56	46	38	38	38	38	38	38	39	39
멕시코	55	35	40	30	29	28	28	28	30	30	30
네덜란드	72	60	60	52	52	52	52	52	52	52	52
뉴질랜드	60	33	39	39	39	39	39	38	35.5	33	33
노르웨이	38	17	29.9	27.3	23.8	24.6	25.3	24.6	24.6	26.1	25.8
폴란드			40	40	40	40	40	32	32	32	32
포르투갈	84.4	40	40	40	42	42	42	42	45.9	46.5	46.5
슬로바키아			42	19	19	19	19	19	19	19	19
슬로베니아			50	50	50	41	41	41	41	41	41
스페인	65.1	56	39.6	29.2	29.2	27.1	27.1	27.1	27.1	23.5	30.5
스웨덴	87	35	25	25	25	25	25	25	25	25	25
스위스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1.5	13.2	13.2	13.2
터키			40	35	35	35	35	35	35	35	35
영국	60	40	40	40	40	40	40	40	50	50	50
미국	70	28	39.6	35	35	35	35	35	35	35	35
OECD평균	59.5	43.5	40.3	36.6	36.5	35.7	35.2	34.8	35.3	34.8	35.3

자료: OECD Tax Database

### GDP 및 총 세수 대비 소득세 부담 추이

한국의 명목 최고세율은 OECD 평균과 근접한 수준이었으나, GDP 대비 소득세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한국의 소득세의 비중은 OECD 평균 및 다른 국가들에 비해 크게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OECD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한국은 낮은 소득세에 의한 낮은 조세부담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차트를 통해보면 유럽형 국가들 및 영미권 국가들이 GDP 대비 소득세 부담이 높게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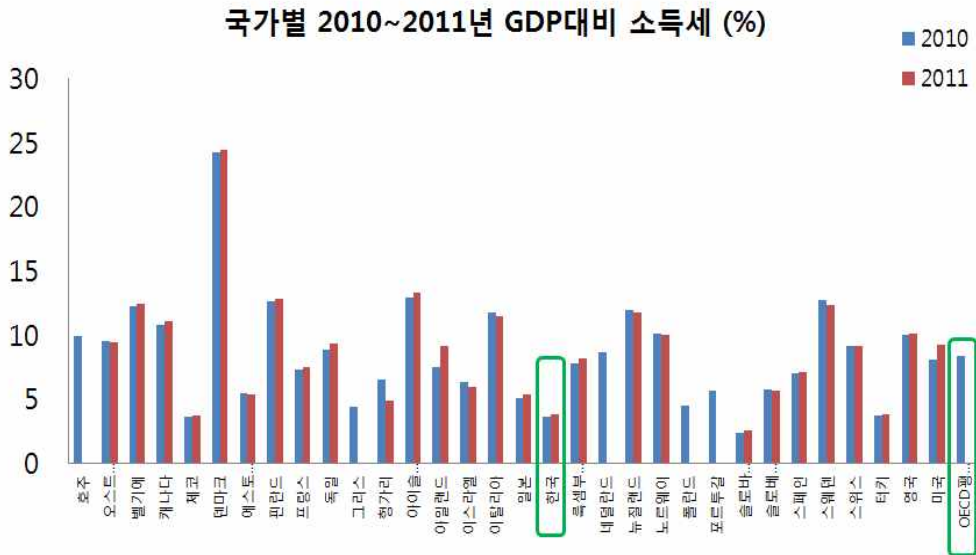
최근 재정위기의 대표적인 국가인 PIIGS 중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그리스, 포르투



갈, 스페인은 소득세가 낮은 걸 알 수 있다. 총 세수로 비교해 본 소득세에서는 GDP 수준 보다 소득세 부담이 낮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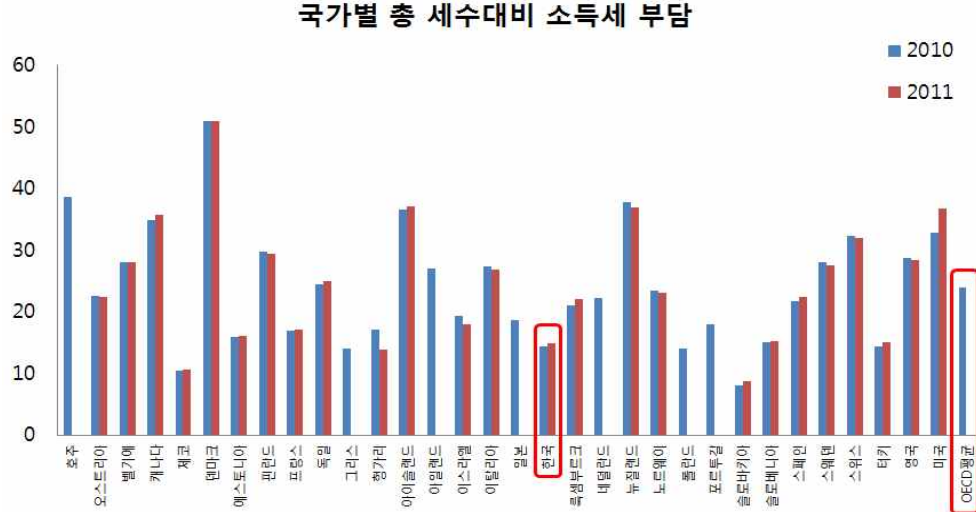
우리나라와 비슷한 경제구조를 가진 이스라엘과 터키, 일본 등과 비교해보면, 국가별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터키를 제외하곤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Ⅲ-1〉 국가별 GDP대비 소득세



자료 : OECD tax database 및 조세의 이해와 쟁점

〈그림Ⅲ-2〉 국가별 총 세수대비 소득세부담(%)



자료 : OECD tax database 및 조세의 이해와 쟁점

(2) 법인세

한국은 GDP 기준과 총 조세기준으로 비교해봤을 때, OECD 평균을 웃도는 수준이며, 한국의 법인세의 비중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다는 것을 의미 하나 이는 법인세율이 높다는 것은 아니며 각종 비과세와 감면혜택은 실효세율을 낮춰서 한국의 법인세율이 높지 않다는 것을 알려준다.

다르게 말하면 OECD의 다른 국가들 보다 소득세 및 각종 세율의 GDP나 총 조세에 대한 비중 그 리고 실효법인세율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Ⅲ-15〉 주요국의 법인세 비중 비교

		단위 : %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OECD	한국
GDP 기준	2007	3.0	4.8	3.4	2.2	3.0	3.8	4.0
	2010	2.7	2.8	3.1	1.5	2.1	2.8*	3.5
	증감	(-0.3)	(-1.9)	(-0.3)	(-0.3)	(-0.9)	(-0.9)	(-0.5)
총조세 기준	2007	10.8	16.8	9.4	6.1	6.8	10.6	15.1
	2010	10.9	17.8	8.7	4.2	5.0	8.4*	13.9
	증감	(0.1)	(1.0)	(-0.7)	(-1.9)	(-1.9)	(-2.2)	(-1.2)

주 : \*은 2009년 평균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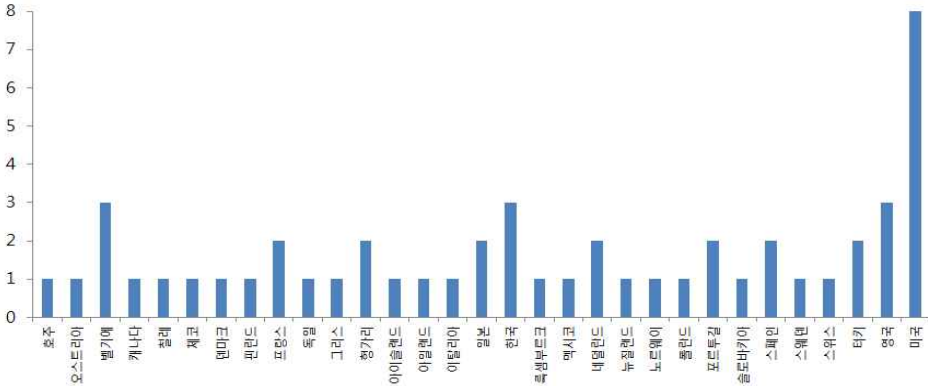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 알기쉬운 조세제도(2012) 인용 (109p)

우리나라의 경우 법인세 과세구간이 3개로 다른 국가들과는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과세구간이 1개인 단일세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미국밖에 없으며, 같은 3개의 과세구간을 가진 국가는 벨기에와 영국밖에 없다. 한편,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8단계의 누진세율을(15~35%) 가지고 있다.

최근 다른 국가들은 법인세를 서서히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의 총 세수에 대한 비중을 줄여 왔으나, 한국의 경우 법인세의 비중이 크게 줄지 않았다.

〈그림Ⅲ-3〉 국가별 과세구간 개수

국가별 과세구간의 개수



〈표 III-16〉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지방세포함)

세율	국가	국가수
34%이상	미국(39.1%), 일본(35.0%), 프랑스(34.4%), 벨기에(34.0%)	4
27.5~31.5%	포르투갈(31.5%), 독일(30.2%), 멕시코·스페인·호주(30.0%), 룩셈부르크(29.2%), 뉴질랜드·노르웨이(28.0%), 이탈리아(27.5%)	9
23.0~26.1%	캐나다(26.1%), 네덜란드·덴마크·오스트리아·이스라엘(25.0%), 핀란드(24.5%), 한국(24.2%), 영국(23.0%), 슬로바키아(23.0%)	9
19.0~22.0%	스웨덴(22.0%), 스위스(21.2%), 에스토니아(21.0%), 그리스·아이슬란드·터키·칠레(20.0%), 헝가리·폴란드·체코(19.0%)	10
17.0% 이하	슬로베니아(17.0%), 아일랜드(12.5%)	2

주: 2011년 기준으로 지방세를 포함한 중앙정부 부과 법정 최고세율임  
 자료: OECD Tax Database, 한국 조세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리

#### 주요국의 소득세, 법인세 및 총 실효세부담률 비교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나 총 실효세부담률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한국의 총 실효세부담률은 29.8%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세의 실효법인세율이 낮은 것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표 III-17〉 기업별 실효법인세율

(단위: 억원, %)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잠정)
과세표준(A)	281,034	139,236	123,593	298,950	266,542
공제감면액(B)	17,788	12,102	13,671	26,808	24,190
총부담세액(C)	52,600	22,726	14,070	39,010	34,634
공제전 법인세액(B+C)	70,388	34,828	27,741	65,818	58,824
실효법인세율(상위10대 기업)	18.7	16.3	11.4	13.1	13.0
실효법인세율(전체기업)	20.5	19.6	16.6	16.6	-
(대기업)	21.6	21.0	17.7	17.6	-
(중소기업)	17.2	15.3	13.1	13.2	-
법인세 공제비율[B/(B+C)]	25.3	34.7	49.3	40.7	41.1

주: 실효법인세율 = (총부담세액/과세표준)\*100. 해당연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을 기준으로 함. 총부담세액은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산출세액과 가산세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한 금액임. 공제감면세액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최재성 의원실, 보도자료, 2013년 10월 6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강병구(2013)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세제 및 법인세 개편방안 pp.46. 인용

〈표 III-18〉 OECD회원국의 법인세율(단위 %)

	개인소득세(2012년)			법인세(2011년)			
	개인 소득세	근로자 사회 보장세	고용주 사회보장세	총실효세 부담률	법인세율a)	사회 보장세	기타 세율
한국	17.1	5.4	6.3	29.8	15.2	13.2	1.4
일본	15.2	13.1	13.8	50.0	26.9	17.4	5.6
미국	18.7	7.3	7.7	46.7	27.6	10.0	9.0
영국	24.1	7.3	12.2	35.5	22.2	10.2	3.1
스웨덴	36.3	0.0	31.4	53.0	15.7	35.5	1.9
덴마크	42.1	0.2	0.4	27.7	20.0	3.6	4.0
독일	28.3	15.5	14.8	46.8	18.9	21.9	5.9
프랑스	20.0	22.0	41.0	65.7	8.2	51.7	5.7
그리스	30.0	16.5	28.6	44.6	11.0	32.2	1.3
이탈리아	35.6	9.6	17.0	68.3	22.9	43.4	2.0
OECD평균	26.0	8.3	16.7	42.5	15.7	23.1	3.7

주 1) 개인소득세의 실효세율은 조세감면 전 과세대상소득 대비 개인소득세의 비율로써 개인소득이 USD 10만 달러인 무자녀 독신자를 기준으로 산출  
 2) 실효법인세율은 IFC와 세계은행에서 조사한 중견기업(medium-sized firm)의 실효세율이며, 총 실효부담률은 기업이윤 대비 조세와 각종 강제기여금의 비율.  
 자료: KPMG(2012), IFC and The World Bank(2013) 강병구(2013) 공평과세를 위한 소득세제 및 법인세 개편방안 pp.45. 인용

### (3) 소비세

최근 OECD 국가들의 부가가치세는 세율인상의 바람이 불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인상하여 복지세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OECD 국가와 한국의 인상안은 재정적자 해소와 복지재원의 확보가 주된 이유이다.

각국은 소비세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는데, 먼저 영국의 경우 경기부양책으로 부가가치세율을 인하한 이후, 이를 회복하기 위해 상승시켰다. 그리고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재정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세율을 인상했다. 또한, 일본의 경우는 사회보장비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해 세율을 인상했는데, 이는 재정 건전성의 확보에도 영향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한국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1977년부터 부가가치세율 10%를 단일세로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OECD 평균인 18%에 미치지 못하며 복지세원 확보에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표Ⅲ-19〉 주요국의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세율변화 현황

국가	대상세목	대상기간	세율변화		상태
			전	후	
아일랜드	부가가치세	2013.1.1.~	21%	22%	인상
		2014.1.1.~	22%	23%	인상
포르투갈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1%	23%	인상

영국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4.~	17.50%	20%	인상
이탈리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9.1.~	20%	21%	인상
스페인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0.7.1.~	16%	18%	인상
스위스	부가가치세(표준세율)		7.60%	8%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2011.1.1.~	2.40%	2.50%	인상
	부가가치세(특별세율)		3.60%	3.80%	인상
슬로바키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19%	20%	인상
폴란드	부가가치세(초경감세율)		0%,3%	5%	인상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2%	23%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7%	8%	인상
라트비아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21%	22%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10%	12%	인상
그리스	부가가치세(최저세율)	2011.1.1.~	5.50%	6.50%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11%	13%	인상
리히텐슈타인	부가가치세(표준세율)	2011.1.1.~	7.60%	8%	인상
	부가가치세(경감세율)		2.40%	2.50%	인상
	부가가치세 (숙박시설에 대한 특별세율)		3.60%	3.80%	인상
일본	소비세(부가가치세)	2014.4.1.~	5%	8%	인상예정
		2015.10.1.~	8%	10%	인상예정

주) 일본의 소비세는 법정세목 명칭이며, 구조상 부가가치세와 동일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주요국의 조세동향』, 2011.6. 참조 조세의 이해와 쟁점 p122

## 2) 주요국가간 세입 세출 비교

### 주요국가와 대한민국의 세입 구조 비교

한국의 세입구조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봤을 때, 총소득 대비 개인 소득세의 비중이 법인세의 비중보다 높고 사회보장기여금의 비중이 낮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세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는 사회보장기여금과 간접세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표 III-20〉 주요국의 세입 구조(2008년)

단위 : %

		한국	일본	미국	독일	스웨덴	OECD평균
총세입		26.5(100)	28.2(100)	26.1(100)	37.0(100)	46.3(100)	34.8(100)
직접세	총부담	8.2(30.9)	9.5(33.7)	11.8(45.2)	11.5(31.1)	16.8(36.3)	12.4(35.6)
	개인	4.0(15.1)	5.6(19.9)	9.9(37.9)	9.6(26.0)	13.8(29.8)	9.0(25.9)

	법인	4.2(15.8)	3.9(13.8)	1.8(6.9)	1.9(5.1)	3.0(6.5)	3.5(10.1)
간접세	총부담	8.4(31.7)	5.1(18.1)	4.6(17.6)	10.6(28.6)	12.8(27.6)	10.8(31.0)
사회보장기여금	총부담	5.8(21.9)	10.9(38.7)	6.5(24.9)	13.9(37.6)	11.5(24.8)	9.0(25.9)
	개인	2.4(9.1)	4.8(17.0)	2.9(11.1)	6.1(16.5)	2.7(5.8)	3.3(9.5)
	법인	2.8(9.8)	5.0(17.7)	3.3(12.6)	6.5(17.6)	8.7(18.8)	5.2(14.9)
	자영업자	0.9(3.4)	1.0(3.5)	0.4(1.5)	1.2(3.2)	0.2(0.4)	1.0(2.9)
기타	총부담	4.1(15.5)	2.7(9.6)	3.2(12.3)	1.0(2.7)	5.2(11.2)	2.6(7.5)

주 : ( )는 총세입에 대한 비중임

자료 : OECD Revenue Statistics: 최성은(2003: 74)에서 발췌

### OECD 주요국의 재정의 기능별 분류

OECD 주요국의 각각의 재정기능을 통해 세출의 정도와 정부의 역할을 가늠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재정의 기능은 경제사업, 교육, 국방에 치중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경제사업의 경우 21.8%의 비중으로 아이슬란드에 이어 OECD국가 중 두 번째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사회복지 부분의 재정지출에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하며, 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재정지출의 구조가 유사한 국가로는 이스라엘과 아이슬란드가 있으며, 이스라엘의 경우 국방분야와 교육분야의 지출이 높은 점에서 유사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이슬란드의 경우 경제분야에 대한 지출이 큰 것이 유사점이라 볼 수 있다.

반면, 한국의 SOC 및 경제부분과 국방분야에 꾸준히 지출하는 모습에 비해 유럽 선진국들(독일, 프랑스, 스웨덴, 덴마크 등)은 사회복지 분야에 재정의 절반가량을 쏟아 붓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최근 낙수효과(대기업 법인세 감면을 통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 및 비과세했으나, 투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업의 이익유보율이 늘었다. 따라서 ‘스웨덴의 역설’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표Ⅲ-21〉 OECD 주요국의 재정의 기능별 분류(2008년)

(단위 : %)

	일반행정	국방	경제사업	교육	보건	사회복지
독일	13.6	2.4	7.6	9.3	14.3	45.1
덴마크	13.1	2.9	5.2	13.4	14.9	43.3
룩셈부르크	10.8	0.7	11.4	11.8	12	42.1
프랑스	13.6	3.3	5.4	11.1	14.8	41.4
핀란드	13.4	3	9.5	12	14.3	41.3
오스트리아	13.1	2	10	10.9	15.9	40.9
스웨덴	14.8	2.8	8.2	13.2	13.3	40.7
스위스	12	2.6	12.8	17.1	5.4	40.7

이태리	18.3	2.9	7.8	9.3	14.6	38.5
노르웨이	10.8	3.9	9.2	13	16.9	38.2
그리스	19.8	6.2	11.4	8.3	11.4	36.5
헝가리	18.8	1.8	12	10.7	10	36.2
폴란드	12.6	3.2	11.5	13.3	11.7	36.1
포르투갈	16.1	2.8	6.5	14.3	14.4	35.9
슬로베니아	11.6	3.2	10.7	13.8	13.8	35.9
벨기에	16.9	2.2	10.8	11.9	14.7	35.6
네덜란드	16.1	2.9	10.7	11.6	12.7	35.2
일본	12.8	2.5	10	10.5	20.1	35
스페인	11.3	2.5	12.6	11.2	14.7	33.9
영국	9.5	5.4	10.2	13.5	15.8	33.5
아일랜드	7.9	1.2	13.8	12.6	18.3	32.3
호주	10.1	4.2	11.4	14.1	18.1	30.8
체코	10.4	2.6	16.8	10.9	16.8	30
에스토니아	7.3	4.4	12.1	16.9	13.1	29.4
슬로바키아	10.5	3.8	14.4	9.9	19.7	29
뉴질랜드	13.3	2.6	10.5	18.6	16.6	25.8
이스라엘	12.7	16.4	6.1	16.7	12.4	25.5
캐나다	18.6	2.6	8.6	18.3	18.7	23.4
미국	12.7	11.9	10.6	16.6	20.5	19.4
아이슬란드	11.3	0.1	33.8	14.5	13.7	15.5
한국	14.1	8.9	21.8	16.3	13	12.4
OECD평균	13.1	3.8	11.4	13.1	14.7	33.5

주1) 기능중 공공질서와 안전, 환경보호, 주택및지역개발, 여가·문화·종교 분야는 생략

주2) 칠레, 멕시코, 터키 자료 없음. 캐나다는 2006년, 뉴질랜드는 2005년 자료임

주3) 국가별 순서는 사회복지(social protection)규모 순위

자료 : OECD. Government at a Glance 2011,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윤영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개혁 방안」 pp.33. 발췌

### 3) 주요 국가별 재정제도 비교

GDP 대비 총지출 추이로 봤을 때, 우리나라는 OECD 평균치를 밑돌며 작은 정부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 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보다 낮은 모습을 보이며, 복지 강국인 북유럽권과는 2배가량 차이가 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과 비교했을 때는 비슷한 모습을 볼 수 있다.

〈표Ⅲ-22〉 주요국의 GDP대비 총 지출 추이

단위: %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한국	28.7	30.4	33.1	30.1	30.2	30.2	31.1
미국	36.9	39.1	42.8	42.7	41.6	40.3	39.1
영국	43.7	47.6	50.7	50.3	48.5	48.5	48.4
프랑스	52.6	53.3	56.8	56.6	56.1	56.9	57.1
독일	43.4	44.1	48.2	47.8	45.4	45	45.5
일본	35.8	36.9	41.9	40.7	42	43.2	42.8
스웨덴	51	51.7	54.9	52.3	51.2	52	52.8
노르웨이	40.3	39.8	46.2	45.2	43.9	43.2	44.2
핀란드	47.4	49.3	56.2	55.8	55.1	56	56.7
덴마크	50.8	51.5	58.1	57.7	57.6	59.5	58.4
OECD평균	39.1	41	44.5	44	43	42.7	42

주: Total disbursements, general government, as a percentage of GDP

자료: Economic Outlook No 93 - June 2013 - OECD Annual Projections 2013대한민국 재정 인  
용

### 주요국의 재정 변화와 조세부담률

미국의 섯다운(shut down),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양적 완화 축소가능성 등 미국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소득세 인상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유로 존은 대체로 안정적인 국면으로 변했으며 미국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많이 받는 형태로, 현재 시행 중인 긴축재정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재정안정을 위해서 소비세에서 증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최근 재정 건전성 안정을 목표로 소비세를 과감하게 증세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III-23〉 주요국의 국민 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단위 : %						
한국	24 (18.9)	25 (19.7)	26.5 (21.0)	26.5 (20.7)	25.5 (19.7)	25.1 (19.3)	25.9 (19.8)
미국	27.1 (20.5)	27.9 (21.3)	27.9 (21.4)	26.3 (19.7)	24.2 (17.7)	24.8 (18.5)	25.1 (19.4)
영국	35.4 (28.8)	36.3 (29.6)	35.8 (29.2)	35.8 (29.0)	34.2 (27.4)	34.9 (28.2)	35.5 (28.8)
프랑스	44.1 (27.8)	44.4 (28.0)	43.7 (27.5)	43.5 (27.3)	42.5 (25.8)	42.9 (26.3)	44.2 (27.5)
독일	35.0 (21.0)	35.7 (22.0)	36.1 (22.9)	36.5 (23.1)	37.3 (22.9)	36.1 (22.0)	37.1 (22.8)
일본	27.3 (17.2)	28.1 (17.8)	28.5 (18.1)	28.5 (17.4)	27 (15.9)	27.6 (16.3)	- -
스웨덴	48.9 (35.8)	48.3 (36.0)	47.4 (35.0)	46.4 (34.9)	46.6 (35.2)	45.5 (34.1)	44.5 (34.3)
노르웨이	43.2 (34.4)	43.5 (34.8)	42.9 (34.0)	42.1 (33.3)	42.4 (32.5)	42.9 (33.3)	43.2 (33.6)
핀란드	43.9 (31.9)	43.8 (31.6)	43.0 (31.1)	42.9 (30.9)	42.8 (30.1)	42.5 (29.8)	43.4 (30.9)
덴마크	50.8	49.6	48.9	47.8	47.7	47.6	48.1



	(49.7)	(48.6)	(47.9)	(46.8)	(46.7)	(46.6)	(47.1)
	34.9	35.0	35.1	34.5	33.7	33.8	-
OECD평균	(26.1)	(26.3)	(26.3)	(25.6)	(24.5)	(24.6)	-

주: 1. 각국의 첫 번째 줄은 국민부담률. Total tax revenue as percentage of GDP

2. 각국의 두 번째 줄은 조세부담률. Total tax revenue(excluding social security) as percentage of GDP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 2013. 6 2013 대한민국 재정 인용 P448

#### 4) ITC 지수를 이용한 주요 국가별 재정제도 비교

국제조세비교 지수란 일국의 조세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는 다양한 변인들로 예측한 조세부담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치의 상대적 비율을 의미한다. ITC(international tax comparison index)를 활용하면 국제적 정상치보다 높은지 낮은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본 보고서에서는 ITC를 김성욱(2013)의 논문의 자료 및 결과를 참고하여 비교 분석을 하였다.

##### ITC 지수를 통한 국민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측정

ITC 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과 부담, 100보다 낮으면 저 부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적으로 다른 국가들은 저 부담 상태에 있으며 스웨덴은 모델 1과 모델 2에서는 국민부담률이 적정 조세부담 수준이 되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는 국민부담률과 조세부담률이 각각 100 미만의 저 부담 상태로 부담률이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의 세수 인상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24〉 ITC를 이용한 주요국의 국민 부담률 및 조세부담률

	국민부담률					조세부담률				
	실제치	모델1		모델2		실제치	모델4		모델5	
		예측치	ITC	예측치	ITC		예측치	ITC	예측치	ITC
덴마크	47.6	45.6	104.5	45.9	103.6	46.6	36.6	127.2	36.6	127.1
독일	36.1	41.5	86.8	41.4	87.1	22.0	26.4	83.3	26.4	83.2
일본	27.6	25.0	110.3	24.7	109.4	16.3	16.2	100.2	16.2	98.3
한국	25.1	25.8	97.3	26.5	94.7	19.3	20.0	96.8	19.9	97.0
스웨덴	45.5	45.3	100.5	45.4	100.2	34.1	36.5	93.5	36.5	93.5
영국	34.9	30.3	114.9	31.0	112.4	28.2	24.8	113.7	24.9	113.4
미국	24.8	29.4	84.5	28.8	86.4	18.5	23.2	79.6	23.2	79.6
평균	35.4	36.3	97.7	37.0	96.5	25.9	26.6	97.3	27.1	97.1

주) 일본의 모델2와 모델5는 2009년값임

자료: 김성욱(2013)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pp.100.발췌 및 인용

### 3. 소결

국가마다 특이한 조세제도를 가지고 있다. 독일의 경우 환경세와 연방세에 있어 다른 국가와의 차별점을 가지고 있으며, 환경세는 신재생에너지산업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는 세제이다. 영국의 경우 소득세에서 어느 정도는 유사하나 Finance Act를 통한 매년 탄력적인 세제의 조정은 영국만의 고유한 세제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한국의 재정 구조와 유사한 모습을 보이거나 관광세 분야(입탕세와 골프장 이용세)에 있어서 한국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법인세와 호텔숙박세에서 타 국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 기업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조세의 감면 혜택 등이 존재하고 있다.

#### 세목 간의 차이점

소득세의 명목 세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나 GDP 비중 소득세의 비중은 낮다고 판단되고 있다. 게다가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3개의 과세구간을 가지고 있으며(일반적으로는 1개의 단일세 구성, 미국은 8개의 과세구간) 세율은 OECD 평균을 웃돌고 있다.

소비세는 지속해서 10%에 고정되어 있으며,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부담이 적다고 밝혀지면서 복지재정 확충에 매력적인 세제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다.

#### 국가 간의 비교

한국정부의 세입과 세출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규모가 작은 국가라는 점을 알 수 있다. 그 중 조세부담률에서도 고복지 국가인 스웨덴에 비해 2배가량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추가로 ITC를 이용한 조세부담 측정에서는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세수를 확장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제4장 조세정책의 기본전략

### 1. 기본전략

#### 1) 조세정책의 역할과 한계점

##### (1) 조세의 역할

조세의 한계점을 알기 위해서는 조세의 기본적인 역할부터 알아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조세의 역할에 대해서는 크게 4가지로(국가 및 지자체의 수입원, 경기조절기능, 소득분배의 기능, 복지재정의 확대) 구분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복지재정의 확대와 소득분배의 역할이다. 이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복지정책 시행과 양극화 문제로 인해 복지재정의 역할과 소득분배의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 국가와 지자체의 주 수입원 역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조세는 그들이 필요한 일반 경비 및 특정 목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강제적 수단이 된다. 특히, 민간에서 할 수 없는 공공재 및 국가의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

##### 경기 조절의 기능

조세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세율을 통해서 경기를 조절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가 불황일 때 세율을 낮추면 소비가 촉진되고 생산과 고용이 증가한다. 이러한 조세의 기능을 이용하여 국가는 경기조절을 수행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탄력적으로 조절함으로써 외부에서 지방으로의 투자를 촉진시키는 등 지방 자체적인 경기조절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

##### 소득분배의 기능

현재의 대한민국 사회는 함께 성장하지 않으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없는 단계에 봉착했다. 이러한 성장의 벽을 뛰어넘는 해결책으로써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강조되는데,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란 개인의 소득수준에 맞춰서 과세하여 자연스럽게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부족한 사람을 도와 줄 수 있는 조세의 한 기능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형평성을 신장시키고 다양한 복지시스템으로 이어져 함께 성장하는 사회로 발전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는 양극화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어 조세의 소득분배 및 양극화 해소 역할이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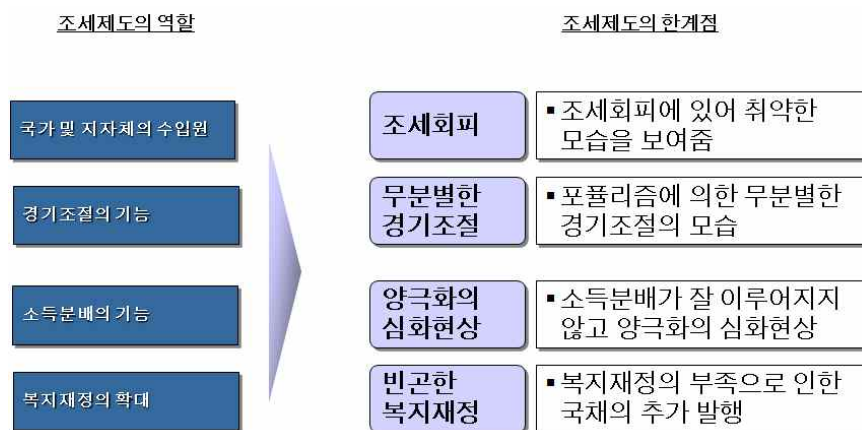
### 복지재정의 확대

현재 우리나라는 다채로운 방향으로 복지제도를 신설 및 확대해나가고 있으며,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재원으로서 국민의 세금이 이용되고 있다. 국민들의 복지에 대한 요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이 돈을 세금에서 충당하게 되는데, 이를 복지재정이라 부를 수 있다. 늘어나는 국민의 복지 요구는 조세정책에 있어서 복지재정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 (2) 조세의 한계점

조세제도의 한계점은 조세의 역할에 대응해서 각각 하나씩 살펴볼 수 있으며, 다음의 내용은 조세의 기능에 대한 한계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최근 조세제도의 한계점으로 거론되는 “조세제도의 어려움”은 국민들이 조세제도를 쉽게 이해하는 것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작용하며, 앞으로 조세제도의 단순화와 조세기능의 고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IV-1〉 조세제도의 역할과 한계점



### 조세회피의 한계

조세회피란 위법을 하지 않고 조세를 회피하는 합법적 조세회피와 탈세를 포함하는 비합법적인 조세회피 모두를 일컫고 있다(김상호, 김석범, 2004; 이은경, 2000). 그 중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기획 세무조사의 결과는 전문직의 경우 탈루율이 36.5% 현금수입업종의 경우 탈루율이 60.6%, 기타업종은 48.8%를 보여주고 있으며, 탈루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이천현 2010).

〈표 IV-1〉 고소득자 기획 세무조사 결과

단위 : 억 원, 명, %

차수	조사착수일	조사대상 인원	탈루액		추징액		평균소득 탈루율
			탈루소득	1인당평균	추징세액	1인당평균	
1차	2005.12.22	422	3,016	7.1	1,094	2.6	56.9
2차	2006.03.20	319	3,185	10	1,065	3.3	57.7
3차	2006.08.16	362	7,527	20.8	2,454	6.8	48.7
4차	2006.11.06	312	5,134	16.5	2,096	6.7	47.1
5차	2007.02.26	315	5,253	16.7	2,147	6.8	47.5
6차	2007.06.21	259	3,635	14	1,581	6.1	46.2
7차	2008.01.10	199	3,017	15.2	1,271	6.4	45.1
8차	2008.08.21	136	1,818	13.4	843	6.2	44.6
9차	2008.11.28	147	1,244	8.5	905	6.2	43.3
10차	2009.05.06	130	2,112	16.2	883	6.8	40.9

자료 : 국세청, 보도자료(2006~2009), 이천현 2010 p58 인용

### 무분별한 경기조절

정책당국자들은 효과적으로 경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세 및 재정을 이용한다. 예를 들어, 경기가 과열될 시에는 세율을 높여 경기를 안정적으로 만들고 침체할 시 세율을 낮추어 경기를 부양한다.

그러나 Barro의 조세 평탄화 가설(The tax smoothing hypothesis) 등의 내용에서는 조세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라고 하며, 케인지안(Keynesian)의 입장과 조화시켜보면 적어도 경기순환과 반대방향으로 움직이거나 중립적 입장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경기 안정화를 위한 재정의 역할과 예산배분의 추이 2004).

일례로 부동산 조세정책의 경우, 한때는 투기억제를 과다하게 해 수급불균형이 생겼으며, 2012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목표로 했던 투자활성화에 실패했다(손정식 2012). 또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경기조절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김학수 2009).

이상의 예시들만 봐도 현재의 조세제도는 경기조절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양극화의 심화현상

양극화는 집단 간 갈등의 직접적 척도이며 개인의 차원에서는 범죄와 노동공급행위를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경제적 개념이다(신동균 2010).

현재의 한국은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졌으며, 다른 OECD 국가들보다

양극화의 상대적 진전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신동균 2010). 한국의 가구단위소득분포를 시장 소득으로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 LIS 주요국 평균을 상회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가처분소득으로 놓고 보자면 평균 정도의 수준인 것을 보아 우리나라의 재분배 정책이 다소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장지연·이병희 2013).

〈표Ⅳ-2〉 다양한 층위의 소득정의에 따른 지니계수

	개인단위소득		가구단위소득	
	임금소득	근로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Australia	0.35273	0.37362	0.48384	0.3132
Austria	0.3622	0.38491	0.46523	0.26845
Belgium	0.29135	0.37401	0.55697	0.31724
Canada	0.48892	0.49897	0.4802	0.3191
Denmark	0.39148	0.39593	0.45174	0.22894
Finland	0.41941	0.42683	0.48156	0.26081
France	0.3675	0.38018	0.49144	0.28187
Germany	0.43793	0.44905	0.5217	0.29746
Greece	0.32271	0.37252	0.47334	0.32949
Italy	0.26391	0.35153	0.51552	0.34558
Netherlands	0.42711	0.44167	0.46398	0.26059
Norway	0.43303	0.43206	0.4769	0.28208
SouthKorea	0.47919	0.45232	0.36835	0.31065
Spain	0.33572	0.34926	0.45439	0.32071
Sweden	0.41812	0.41976	0.47401	0.23802
UnitedKingdom	0.42329	0.43904	0.55028	0.35214
UnitedStates	0.48258	0.4883	0.5059	0.37737
LIS주요국평균	0.39183	0.41146	0.48739	0.30738

출처 : 장지연 이병희 2013 소득불평등 심화의 메커니즘과 정책 선택 인용

## 빈곤한 복지재정

2012년의 복지지출의 규모는 GDP 대비 10.6%, 145.5조 원이며 복지 재원 중 조세 부담률은 2009년 기준으로 19.73% 이다(최성은 2013).

최근 부동산 경기조절을 위해 정부가 시행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그리고 다양한 비과세 혜택은 복지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이에 부합하지 못하는 우리나라 복지재정의 빈곤함을 드러내고 있으며 또한 지방 재정의 위기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2) 조세정책의 기본방향

기존의 조세제도는 각 기능에 따라 다양한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는 비단 조세제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재정정책과의 조화 그리고 다양한 정책 노선 상의 혼재 속에서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기존의 조세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였던 소득의 불평등해소 기능의 취약함은 조세제도의 개혁에 앞서 근로장려세제와 가족복지 등의 복지 기능 향상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쳐질 수 있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도미향·윤지영·이명숙 2010, 임병인 2009).

지방재정의 경우 다양한 복지제도의 시행으로 인해 지방재정의 무리가 온다는 의견이 속출하고 있으며(김필현 외 2013), 추가로 부동산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감면, 비과세 제도는 지방재정의 악화를 야기할 수 있다(임상수·박지혜 2012). 지방세와 국세의 비중 또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국세와 지방세의 세입 비중에서 8:2 세입비중과 4:6의 지출의 비중은 수직적 불균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방의 자주재원확보가 중요시된다는 점에는 공감하고 있다(김홍환 2012, 최병대 2013, 한영은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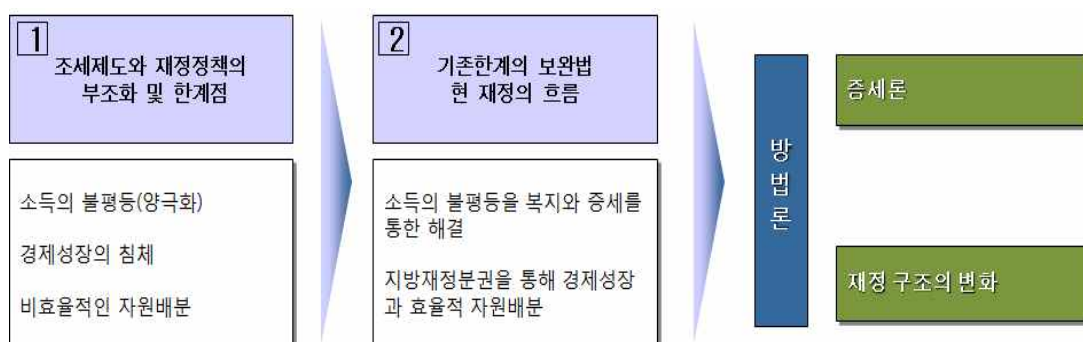
### 다양한 시각에서의 방향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정부가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고 있으나, 복지의 시행에 있어 중요한 것은 복지의 재원 마련의 부분이다.

최근 세수를 늘리지 않고 복지를 시행하겠다는 방법이 지방의 복지지출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향후 지방의 복지 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김필현 외 2013).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는 복지재원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소득의 불평등 해소 및 사회안전망의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며, 조세정책을 통해 복지재원의 확충방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림 IV-2〉 조세제도의 방법론 도출 과정



### 조세와 재정정책의 기본방향

복지는 수혜자가 생기게 되면 줄이는 것이 힘들다. 현재 복지정책은 국가의 경제수준에 비해서는 낮은 편이나, 재정수준 또는 지방재정자립도 수준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재정과 복지의 수준이 선진국의 수준으로 상향되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선진국 수준의 재정과 복지를 갖추려면 현 조세율은 다소 낮다고 평가된다. 조세정책의 기본방향은 크게 증세론과 증세 없는 재원마련의 방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림 IV-3〉 조세전략과 재정전략



### 3) 조세정책의 전략

#### 형평성을 바탕으로 한 증세론

현재 시행 중인 감세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는 기업의 투자유발을 위해서 시행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시행 중이다. 이론상으론 당연히 조세혜택이 기업의 투자를 증가시켜야 하지만 감세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인하기는 힘들다고 판단된다(박종국·이계원·홍영은 2009). 일례로 예전의 감세정책 때를 생각해 보면, 결과적으로 대기업들은 유보가 많았고 투자가 적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감세정책이 기업의 투자를 견인한다고 확인하기가 힘든 것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의 세전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각종 소득공제 비중 등을 따져보면 감세율은 OECD 기준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향상할 수 있는 다양한 복지의 시행을 위해서 증세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게 되었다(이동진 2007).

증세를 위한 대표적인 전략으로는 법인세와 관광세, 환경세, 소비세 그리고 소득세 증세가 있으며, 환경세와 관광세는 세원의 확충을 주장하는 것이고 소득세와 법인세 그리고 소비세는 기존의 낮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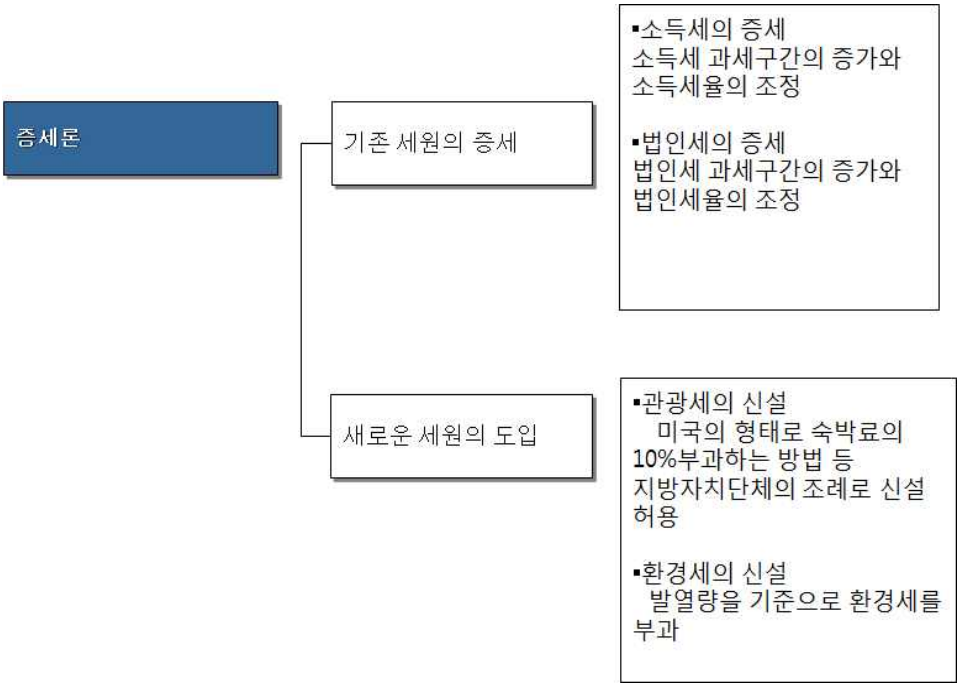
세율을 조정하자는 입장이다.

### 해외사례연구를 통한 조세전략

독일 및 여타 유럽의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는 환경세가 새로운 세목을 더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독일의 경우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발전시키고 환경을 지키는 생태산업 발전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한다. 그리고 공동세 제도를 통한 조세제도의 구조적 개혁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고르게 성장하는 포용적 성장을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영국의 Finance Act를 한국형 Finance Act로 발전시키는 전략과 공공기관 및 정부에 대한 신뢰도 향상 전략은 선진국으로의 그리고 새로운 성장으로의 발판이 될 것이며, 일본의 입탕세나 미국의 호텔, 숙박세 같은 한국형 관광세의 도입은 넓은 세원의 확보와 관광산업의 발전에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IV-4〉 증세론 도입방안



### ITC 지수<sup>32)</sup>를 이용한 조세제도 세부 조정 전략

기존의 연구와 해외사례를 통한 연구에서는 단순 비교와 분석을 통하여 조세제도를 분석했다. 이 단락에서는 ITC 지수를 이용한 분석으로 조세제도를 세부 분석해 볼 것이다. ITC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증세를 할 수 있는 부분과 감세를 시행해야 하는 부분을 구분해볼 수가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김성욱(2013)의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 현황’ 을 발췌하여 분석을 해보고 조정

32)  $ITC = (\text{추정치} / \text{실제치}) * 100$

해볼 세수에 대하여 알아본다.

우리나라의 재산세와 소비세의 경우 ITC가 100을 상회하면서 과 부담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TC분석에도 한계점은 존재한다. 최근의 분석은 ITC 지수분석에만 의존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김승래 김형준 이철인 2008).

따라서 ITC 지수뿐만 아닌 다양한 비교방법을 통해서 위의 다양한 세수를 조정할 전략을 설정해야 하며 사회보장 기여금 또한 조정해야 한다.

〈표 IV-3〉 우리나라의 세목별 ITC 현황

년도		개인소득세	법인세	재산세	소비세	사회보장기여금
2003		68.2	90.5	103.0	126.1	83.8
2004		75.7	76.5	93.7	119.6	86.0
2005		76.2	85.9	102.3	119.7	88.6
2006		93.3	77.2	117.5	121.0	91.6
2007		115.3	82.5	118.9	124.8	94.5
2008		108.4	79.3	112.1	119.0	101.3
2009		90.7	72.1	107.5	117.3	99.3
2010	실제	3.59	3.49	2.86	8.50	5.72
	예측	3.79	5.48	2.81	6.81	5.89
	ITC	94.8	63.7	101.6	124.8	97.1
1900년대		73.7	71.8	97.4	109.3	48.0
2000년대		85.1	77.9	105.8	122.1	87.4
전체		79.6	75.0	101.8	116.0	68.7

자료 : 김성욱 (2013) 적정조세부담률 추정을 통한 한국 복지국가 증세가능성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제 20집 제 3호 pp.105 발췌

### 현재 주장되고 있는 조세전략의 특성

보수진영에서는 조세의 전략으로 감세론을 주장하고 있으며, 감세론의 기본 이론적 배경은 낙수효과(Trickle down effect)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진보진영에서는 보수진영과는 달리 다양한 증세론이 존재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부유층 증세론, 보편적 증세론, 조세대체론이 있다.

우선 부유층 증세론의 경우 흔히 말하는 ‘부자세’로 볼 수 있으며, 최고세율 구간을 설정하여 부유층에게 일반재원을 많이 확충하여 소득의 재분배기능을 더 강화하자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보편적 증세론의 경우 과세대상을 부유층뿐만 아닌 중산층에게까지 확대하여 재원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마지막으로 조세대체론은 헨리조지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토지의 불로소득환수를 주장하는 전략으로서 토지부유세를 증세의 대상으로 삼아 토지문제와 자원확보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는 전략이다.

〈표Ⅳ-4〉 조세 전략의 특성

스펙트럼	전략 유형		과세대상자	소득재분배 기능	재원의 목적
보수	감세론		부유층-중산층	역진적	일반재원
진보	부유층 증세론	최고세율 구간설정	부유층	강함	일반재원
		부유세 도입	부유층	강함	일반재원
		사회복지세 도입	부유층	강함	목적세(복지)
	보편적 증세론		부유층-중산층	약함	일반재원
	조세대체론		부유층-중산층	강함	일반재원

자료: 윤영진 「복지재정확충을 위한 조세재정개혁방안」(2013)

## 2. 신성장동력을 위한 조세제도

### 1) 소득세의 세수 조정 방안

#### 소득세 세율조정의 근거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는 GDP 대비 세수가 적다는 점과 현 소득세의 소득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세전대비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은 8.7%로 OECD 평균 31.3%에 크게 밀도는 수준이며, 소득세율 뿐만 아닌 각종 소득공제의 비중이 52.9%로 OECD 평균인 25.2%의 배가 넘기에 과세구간을 넓히고 소득공제를 줄여나가야 한다.

따라서 OECD 국가들 평균에 근접하도록 GDP 대비 세수 비중을 높이는 일정정도의 세율 상승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소득세의 과세구간과 세율의 조정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5개의 세율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윤영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은 소득세율의 구간을 6단계 세율도 재조정하자고 밝히고 있는데 이는 세수입과 재분배역할을 위해서는 슈퍼부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려야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종합소득 5억 이상 9,558명, 1억 이상 연봉자 28만 명).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윤영진의 논문을 참고 및 인용, 수정하여 소득세의 과세구간과 과세표준

을 재설정하였다.

〈표Ⅳ-5〉 소득세 개편방안

현행		개편방안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이하	6%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1,200만 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4,6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35%	8,800만 원 초과~1억2천만 원 이하	33%
3억 원 초과	38%	1억2천만 원 초과~2억 원 이하	35%
		2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38%
		5억 원 초과	43%

자료 : 윤영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pp.27 인용 및 수정

〈표Ⅳ-6〉 OECD국가 규모별 소득세율 비교(%)

규모	2011	2012	국가
큰 규모	42.33333	43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간 규모	35.75	37.41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작은 규모	32.9	32.4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등
OECD단순평균	25.5	25.5	

## 2) 법인세의 세수 조정 방안

### 법인세 세율조정의 근거

현행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지난 정부가 시행한 이른 바 부자감세, 감세정책의 실패로 낙수효과는 없이 세수 부족만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감세정책의 논리인 저 세율을 유지하면 투자와 소비를 확충시켜 폭넓은 세원의 확보가 가능하리라는 주장이었으나, 실상은 기업이 투자 대신 이익유보를 많이 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지금 재정 상황만 악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

게다가 현행 법인세의 최고세율은 OECD 국가의 평균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제청의 ‘2013년 국제통계 조기공개’ 에서 밝힌 실효법인세는 16.80%에 불과,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복지재정이 빈곤해지고 국가의 부채가 많아지는 시점에 법인세를 지속해서 현행 세율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법인세의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

〈표Ⅳ-7〉 2012년 실효 법인세율 현황

국가	실효법인세율
미국	26%
독일	29.55%
영국	38%
일본	37%
한국	1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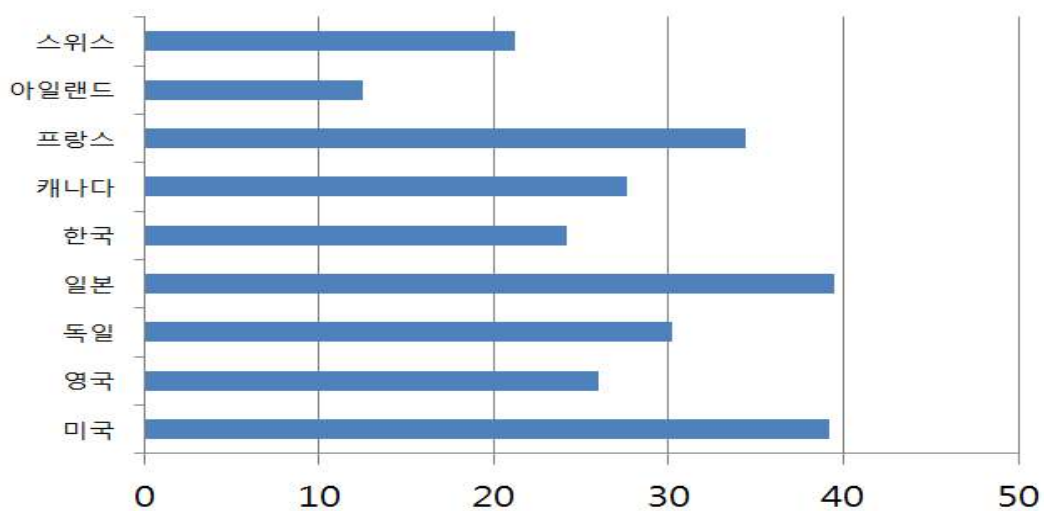
자료 : 2013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 법인세 세제의 조정

윤영진(2013)의 법인세율 개편방안은 과표구간을 1개 더 늘리고 각 구간의 법인세율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GDP 대비 법인세수의 경우 그 비중이 중요한 바, 현재보다는 비중을 더 높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은 아일랜드와 스위스를 제외하고 법인세의 세율이 낮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게다가 실효세율 또한 낮기에 세율의 조정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법인세는 일본과 영국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실효 법인세율과 높지 않은 명목 법인세율을 고려할 때 세율을 상승시킬 여력이 충분하다고 하겠다.

〈그림Ⅳ-5〉 2012 주요 국가별 법인세 현황(지방세포함)



자료 : 현진권 (2013) 한국경제연구원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추출 및 재구성

〈표Ⅳ-8〉 OECD국가 규모별 법인세율 비교

규모	2011	2012	국가
큰 규모	32.8	32.5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중간 규모	27.8	27.6	캐나다 스페인 한국 멕시코 호주 네덜란드
작은 규모	22.8	23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오스트리아 헝가리 등등
OECD 단순평균	25.5	25.5	

자료 : 현진권(2013) 한국경제연구원 「명목 법인세율을 사용한 국제비교평가의 오류」 추출 및 재구성

현진권(2013)은 국가별 명목 법인세율의 평균을 가지고는 비교할 수 없으며, 같은 규모별 비교 및 GDP 대비 법인세수와 비교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본 보고서에서는 명목 법인세율과 부담률 간의 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증해 봤는데, 명목 법인세율과 부담률은 상관관계분석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으며, 회귀분석에도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회귀방정식은  $R = 0.017 + 0.057 * (CT_{t-1})^{33}$ 로 도출되었지만 유의하지 않았다. 아래 분석을 통해서도 법인세율과 부담률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으며, 명목 법인세율을 높인다고 해서 부담률이 높아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명목 법인세율로 비교하는 것이 아닌 실질 법인세로 비교해야 하며 이를 비교해 봤을 시 법인세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9〉명목법인세율과 부담률과의 관계

모형 요약				
모형	R	R 제곱	수정된 R 제곱	추정값의 표준오차
1	.201a	.040	.002	1.8231

a. 예측값: (상수), 법인세율

분산분석b					
모형	제곱합	자유도	평균 제곱	F	유의확률
회귀 모형	3.489	1	3.489	1.050	.315a
1 잔차	83.092	25	3.324		
합계	86.581	26			

a. 예측값: (상수), 법인세율

b. 종속변수: 부담률

33) R은 부담률이며 CT는 법인세율이다.

		계수a			t	유의확률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B	표준오차	베타		
1	(상수)	1.693	1.340		1.263	.218
	법인세율	5.695	5.558	.201	1.025	.315

a. 종속변수: 부담률

각종 감면혜택으로 인하여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13%에 불과하며, 상장기업의 유효세율은 15.34%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실효세율을 올리는 방안으로 각종 감면제도를 폐지해야 하며 과세구간 추가 설정 및 최고세율을 평균인 27%까지 올리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윤영진(2013)이 주장한 법인세 세율 개편방안과 같이 법인세를 각각 상향 조정하고 구간을 1개 더 증가시키는 방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표Ⅳ-10〉 법인세 세율 개편 방안(지방세 미포함)

현행		개편방안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이하	10%
2억 원 초과~200억 원 이하	20%	2억 원 초과~100억 원 이하	22%
200억 원 초과	22%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25%
		1,000억 원 초과	27%

자료 : 윤영진 「복지재정 확충을 위한 조세·재정 개혁 방안」 pp.28 인용

### 법인세의 감면혜택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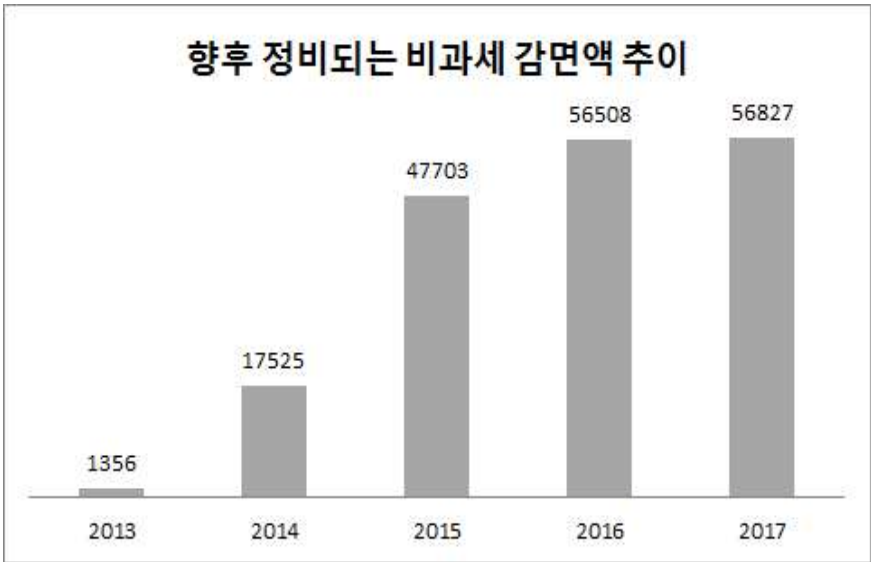
최근 기획재정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전환’을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서 2014년부터 5년간 3조 5000억 원의 세수효과가 발생한다고 비용추계를 한 바 있다.<sup>34)</sup> 이는 결국 일반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전가될 예정인데 이보다 먼저 법인세의 감면혜택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국세의 감면제도는 박원석(2013)에 의하면 서민·중산층에 51% 고소득층 및 대기업에 46% 귀착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법인세의 감면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억 원 이하 중소기업은 업체당 약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으나, 소득 5천억이 넘는 대기업의 경우 573억으로 그 차이는 매우 큰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최저한세의 상향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실제 법인세율은 최저한세에 못 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4개국 상위 3대 대기업 비교에서도 실효법인세율이 낮으며 편차가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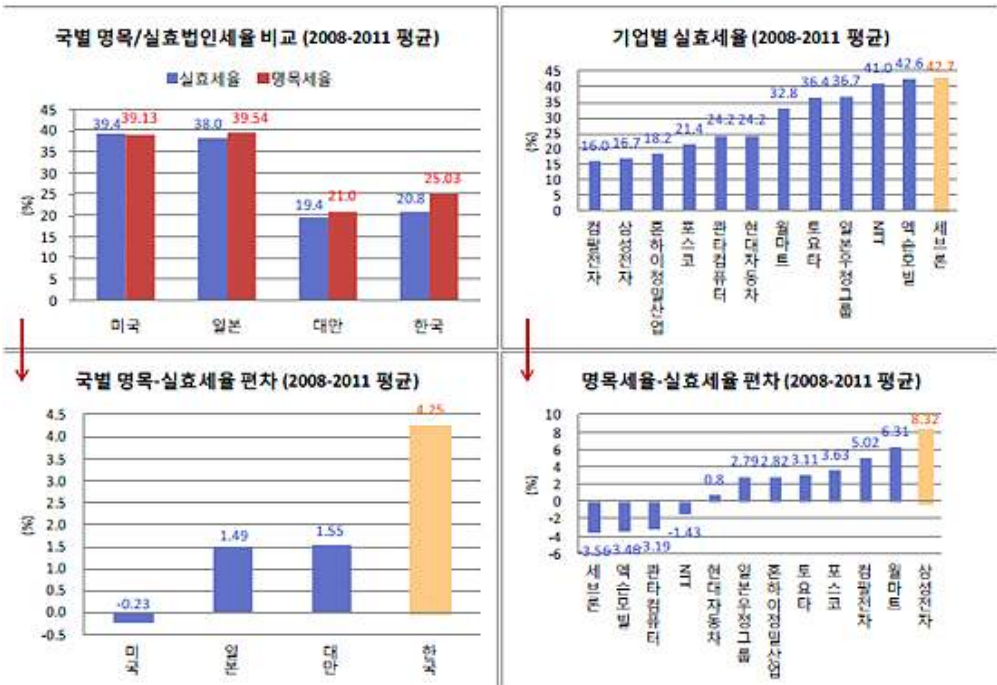
34) 기획재정부 2013년 08월 08일 보도자료

만약 감면혜택을 감소시킨다면 향후 4년간 법인세 6.5조 원을 걷을 수 있다는 분석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나왔다(국회 예산정책처 : 비과세 · 감면 현황과 정비방안). 따라서 법인세 감면제도의 재수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IV-6〉 비과세와 감면액의 문제



4 개국 상위 3 대 기업들의 실효법인세율 현황



자료 : 세계일보 2013.6.27. 『복지공약 재원 짜내기 부유층 비과세 대폭 축소』 재구성



### 3) 부가가치세의 세율 조정 방안

최근 OECD 국가들 사이에 재정적자 해소를 이유로 부가가치세 세율을 인상하는 바람이 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가 OECD 평균인 18%보다 낮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상승압박이 존재해왔다. 하지만 pp.68 <표Ⅳ-3>의 자료를 보면 현재의 부가가치세의 ITC 지수를 통한 분석은 100을 상회하며 국민들의 부담이 적정한 편이다. 하지만 ITC 지수가 절대적인 평가의 지표는 아니다. 상대적으로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OECD 평균에 비해서 너무나 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복지국가로 되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OECD 평균에 다가가야 한다. 게다가 현 한국의 복지재정을 생각하면 급작스럽게 18%대의 부가가치세 상승은 강한 조세저항을 이끌어 낼 수 있기에 부가가치세에 2% 정도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경우 지금의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보다 2% 정도의 세율을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이를 통해 추가로 11조 7753억 원의 추가세수가 걸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Ⅳ-11> 부가가치세 세율 개편 방안

2013년 기준 부가가치세 예상

단위 : 억 원

세율	10	11	12	13	14	15	18
세수	588768	647644.8	706521.6	765398.4	824275.2	883152	1059782
추가세수		58876.8	117753.6	176630.4	235507.2	294384	471014.4

### 4) 새로운 세수의 확보

#### (1) 환경세의 발견

한국의 환경세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으나 2년 후 일몰이 될 예정이고, 최근에는 저탄소 성장이 대두하면서 탄소세의 도입이 탄력을 받았으나 차일피일 미루어지며 아직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 주장하는 에너지세의 경우 독일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세제로 탄소세를 도입하면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량 등 탄소사용량을 줄일 수 있어, 그동안 경제개발을 위해서 탄소를 과도하게 사용해온 한국의 입장에는 더욱 맞는 세제가 될 수 있다.

기존에 주장이 있었던 탄소세와 달리 발열량을 기준으로 세수가 책정되기 때문에 탄소세보다 더 다양한 세원확보가 가능하며 독일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감면혜택을 주자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발

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만약 한국에 도입하게 된다면 앞으로의 생태 산업 및 신에너지 산업에 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한국에서 탄소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의 확보를 예측해보기 위해서 독일의 2007년 GDP 대비 에너지세 비중을 한국의 2007년 GDP에 단순 대입한 결과 GDP의 1.15% 비중인 약 19조 1977억 원의 세수가 충당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탄소세의 도입이 효율적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2013년 기준 교통에너지 환경세를 에너지세로 변경하여 단순산출해본 결과 1조 1200억이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표Ⅳ-12〉 2013년 기준 에너지세 도입

2013년 기준		2013년 에너지		단위 : 억 원
구분	금액			
국세	2164263	국세	2175463	
일반회계	2088685	일반회계	2099885	
-내국세	1790070	-내국세	1790070	
소득세	504916	소득세	504916	
법인세	480886	법인세	480886	
상속세	48400	상속세	48400	
부가가치세	588768	부가가치세	588768	
개별소비세	58728	개별소비세	58728	
증권거래세	45388	증권거래세	45388	
인지세	6539	인지세	6539	
기타내국세	56445	기타내국세	56445	
-관세	109888	→ -관세	109888	
-방위세	364	-방위세	364	
-교통에너지환경세	130005	-에너지세	141200	
-교육세	47772	-교육세	47772	
-종합부동산	10950	-종합부동산	10950	
-농어촌특별세	44735	-농어촌특별세	44735	

자료 :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

## (2) 관광세의 발견

현재 대한민국은 한류열풍 등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국가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으며, 외래객은 2013년 9월 한 달 기준 115만 6,913명이 방한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경우 호텔 숙박세와 입탕세, 골프장 이용세의 수입으로 지방재정의 확충을 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세수는 지방관광사업의 발전에 투자됨으로써 지방의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관광세의 경우 조세대상을 여유가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게다가 골프장이용세 및 호텔숙박세는 내국인들도 소득에 맞게 이용하면서 분배의 원칙에 더욱 충실한 세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세계 각국의 호텔숙박세의 경우 보편적으로 숙박료의 10~11%의 세율을 택하고 있다.

박경환(1997, 79)에 따르면 10%의 관광세가 부과되면 관광객의 숫자는 8%가 줄어들게 되며, 5%의 경우 4%가 줄어든다고 예측했는데, 단순 산출로 관광세를 10% 부과했을 시 관광수입의 10%인 14억 1762만 달러(약 1조 5천억 원)가 나오게 되며, 5%를 부과했을 시 7억 881만 달러(약 7514억 원)가 지방재정의 세수로 창출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다.<sup>35)</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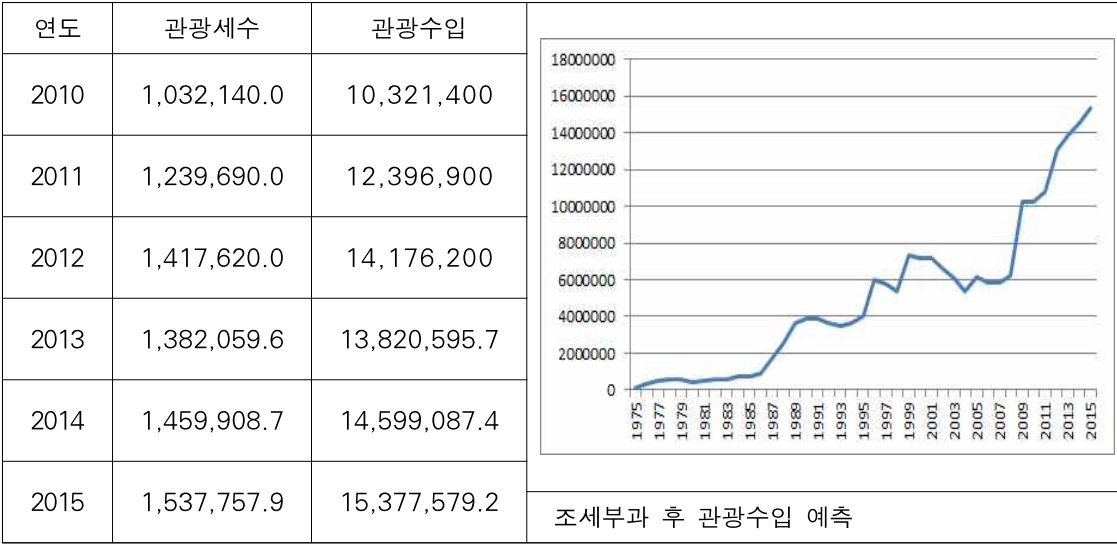
관광객들의 변화를 다음의 지수평활법으로 예측했을 때 다음의 식으로 산출될 수 있다.

$$y_{t+k} = 1(t) + 0.13(t)k$$

위의 지수평활법으로 예측해본 결과, 10%부과했을 시 2013년엔 약 13억 8천 달러 2014년에는 약 14억 6천 2015년에는 약 15억 4천 달러 정도의 세수가 기대되며, 이는 경기가 급변하지 않는다면 지방세수의 확충 및 관광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sup>36)</sup>

〈그림 IV-7〉 관광수입 예측 및 관광세 적용이후 수입예측

단위 : 달러



35) 2012년도 관광수입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달러당 1060원으로 임의 산출하였음

36) 본 보고서에서는 EViews 7 의 Exponential Smoothing 기법으로 1975년부터 2012년까지의 관광수입을 기준으로 2013, 2014, 2015년을 단순 예측한 지표임

단위 : 조원					
	당초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세입순계	208.9	100	세입순계	208.9	100
자채재원	97.4	46.6	자채재원	97.4	46.99
지방세	54.7	26.2	지방세	54.7	26.7*
세외수입	42.7	20.43	관광세	1.5	
			→ 세외수입	42.7	20.29
지방채	5.4	2.6	지방채	5.4	2.6
의존재원	106.1	50.81	의존재원	106.1	50.44
조정교부금	6.73	3.22	조정교부금	6.73	3.2
지방교부세	31.46	15.1	지방교부세	31.46	14.95
국고보조금	67.98	32.5	국고보조금	67.98	32.3

주) \*은 지방세와 관광세의 합을 비율로 계산함  
 자료 :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상)

### (3) 한국형 Finance Act의 활용

영국의 Finance Act는 매년 과세 또는 공제범위를 탄력적으로 정하는 법률로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한 법률이다.

한국의 경우 경제성장률, 주가상승률, 기준금리증가율과 전기 명목 법인세증감률과의 상관관계 분석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경제성장률에 맞게 조정되었다고 분석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주 바뀌는 법률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비효율성이 있어 보이나 현시점은 경제상황이 급속하게 변하는 시점으로 매년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만약 한국에 Finance Act가 시행된다면 공제범위의 탄력적 조정이 급선무이며, 이 공제범위를 통해 매년 세수를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그리고 조세정책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포퓰리즘적인 요소가 다수 반영될 수도 있는 점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시행한다면 한국의 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표Ⅳ-13〉 전기법인세 증감률과의 상관관계

		상관계수			
		경제성장률	법인세율전기	주가성장률	기준금리증가
경제성장률	Pearson 상관계수	1	-.267	-.440	.659*
	유의확률 (양쪽)		.401	.152	.020
	N	12	12	12	12
법인세율전기	Pearson 상관계수	-.267	1	-.252	-.327
	유의확률 (양쪽)	.401		.429	.299
	N	12	12	12	12
주가성장률	Pearson 상관계수	-.440	-.252	1	.093
	유의확률 (양쪽)	.152	.429		.775
	N	12	12	12	12
기준금리증가	Pearson 상관계수	.659*	-.327	.093	1
	유의확률 (양쪽)	.020	.299	.775	
	N	12	12	12	12
*. 상관계수는 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 3. 소결

#### 조세제도의 방향

현행 조세제도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을 노출함으로써 경기조절의 실패, 양극화, 조세회피, 복지재정의 부족이라는 한계를 내포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증세를 통해 소득의 재분배를 강화하거나, 복지재정의 확충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증세론의 방법에는 2가지의 방법이 존재하는데 먼저 기존 세원을 활용하여 증세하는 방안 그리고 새로운 세수의 발견 방안이 있다.

기존의 세원을 활용하는 방안은 소득세와 법인세의 조정이 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ITC 지수를 측정해봤을 시 적정부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적인 비교를 해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올려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세수를 찾는 방안에는 환경세(에너지세)와 관광세가 새로운 세수가 될 수 있다.

#### 기존의 세원을 활용하는 방안

소득세는 소득의 재분배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OECD 국가들 중 GDP 대비 소득세 비중이 낮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인세의 경우 회귀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서 경제성장률 등의 거시 변수와 상관성이 유의하지 않으며 법인세 부담률과의 관계 또한 유의하지 않게 나왔다. 게다가 법인세의 실효법인세율은 16.8%로 일본 36.8%에 비해 2배 가까이 실효세율이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추가적으로 ITC 지수를 이용한 분석을 해보면 2010년 기준 소득세의 ITC 지수는 94.3으로 소득세의 부담이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법인세의 경우 63.7로서 법인세 부담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법인세의 경우 장기적으로 중간규모 국가 수준까지 올리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며, 과세구간을 이전보다 더 추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소득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복지재정의 확충과 재분배 역할을 위해서는 슈퍼부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늘려야 하기에 5억 이상 소득자에게는 훨씬 많은 소득세를 부과해야 한다.

### **새로운 세목을 활용하는 방안**

본 보고서에서는 새로운 세수로 환경세(에너지세), 관광세를 추천하였으며, 각각의 세제가 견을 수 있는 조세를 산출해 보았다. 에너지세의 경우 생태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능력에 맞게 사용한 만큼 내는 조세로서 2년 뒤 일몰 예정인 환경에너지교통세의 뒤를 이을 세제로 주목할 수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독일의 2007년 환경세의 비중이 GDP 대비 1.15% 차지하는 것을 2013년 한국에 적용해본 결과 14조 1200억 원이 산출되었으며, 환경에너지교통세에 비해 세수도 더 크고 앞으로의 경제발전에 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세의 경우 관광수입에 10%를 배정하여 관광객이 감소하는 것을 고려하여 산출해본 결과 2013년 기준 약 13억 8천 달러, 2014년에는 약 14억 6천 달러, 2015년에는 약 15억 4천 달러 정도의 세수가 기대되었다.

### **탄력적 조세 조정제도 제언 Fiance Act**

경제상황이 급속하게 변하는 현재, 매년 조세 및 감면제도에 대한 탄력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Finance Act가 시행된다면, 먼저 공제범위에 대한 탄력적 조정이 급선무이며 투명성이 보장된 탄력적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이 제도를 통하여 조세정책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할 수 있다.

### **조세정책의 적용**

제언된 세수들을 산출하여 적용해본 결과 총 조세의 경우 31조 9677억 원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지방세의 경우 1.5조의 추가 세수가 발생하게 되었다. 2013년 기준 총 예산 360.8조에 31조 9677억이 추가로 합해져서 392조 7677억 원이 2013년 예산이 될 수 있으며, 추가

된 31.9조를 통한 복지산업 및 환경산업, 의료, 벤처 산업 등 고용창출을 위한 세수로서 사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판단되며, 복지 산업 등을 통한 고용창출의 효과는 앞으로의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것이고 추가적으로 조세의 수입이 더욱 창출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표Ⅳ-14〉 조세제도의 적용을 통한 세수파악

2013년 기준		단위 : 억원	2013년 신성장동력 조세 정책		
구분	금액				
국세	2164263		국세	2427006	
일반회계	2088685		일반회계	2382271	
-내국세	1790070		-내국세	2072096.7	
소득세	504916		소득세	571352.3	
법인세	480886		법인세	590178.3	
상속세	48400		상속세	48400	
부가가치세	588768		부가가치세	706521.6	
개별소비세	58728		개별소비세	58728	
증권거래세	45388	→	증권거래세	45388	
인지세	6539		인지세	6539	
기타내국세	56445		기타내국세	56445	
-관세	109888	→	-관세	109888	
-방위세	364		-방위세	364	
-교통에너지환경세	130005		-에너지세	141200	
-교육세	47772		-교육세	47772	
-종합부동산	10950		-종합부동산	10950	
-농어촌특별세	44735		-농어촌특별세	44735	
지방세			단위 : 조원		
	당초예산	구성비		당초예산	구성비
세입순계	208.9	100	세입순계	208.9	100
자체재원	97.4	46.6	자체재원	97.4	46.99
지방세	54.7	26.2	지방세	54.7	26.7*
세외수입	42.7	20.43	관광세	1.5	
		→	세외수입	42.7	20.29
지방채	5.4	2.6	지방채	5.4	2.6
의존재원	106.1	50.81	의존재원	106.1	50.44
조정교부금	6.73	3.22	조정교부금	6.73	3.2
지방교부세	31.46	15.1	지방교부세	31.46	14.95
국고보조금	67.98	32.5	국고보조금	67.98	32.3

## 제5장 재정정책의 기본 전략

### 1. 기본전략

#### 1) 재정정책의 기본 방향

##### (1) 재정의 역할

정부는 사경제 주체들과 달리 시민에게 부여받은 공권력을 바탕으로 세금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발전과 국민의 복지를 위해 경제활동을 한다. 정부의 역할은 크게 3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 가지의 역할은 효율적 자원배분의 실현, 공평하고 정당한 소득분배, 거시경제의 안전과 성장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정부는 때로 시장에 직접 개입하기도 한다(김홍래 2007).

##### 효율적 자원배분의 역할

민간 사경제에서는 제재할 수 없는 환경오염과 같은 부의 외부효과를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교육이나 질병예방과 같은 긍정적 외부효과는 장려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군대와 도로, 항만과 같은 사경제가 소비의 비배제성과 비경합성 때문에 제공할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를 정부가 생산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경제와 국민복지의 공익을 증진하는 역할이다.

##### 공평하고 정당한 소득분배의 역할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소득분배의 역할을 정부는 조세와 복지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다. 소득분배의 실패는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따라서 조세와 복지를 통해 사회적 약자로서 시장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는 이들에게 적당한 지원을 함으로써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사회로의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 거시경제의 안전과 성장

민간의 경우 경기의 변화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기가 힘들다. 하지만 정부는 경기과열, 인플레이션, 실업 등에 대해 재정을 이용하여 거시경제정책을 펼쳐서 국민경제의 안정과 성장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특히, 경기 침체나 저성장 또는 대공황과 같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경기부양정책(투자유인, 대규모 정부사업 등)을 이용한 거시 경제적 역할이 매우 중요시된다.

##### (2) 재정의 한계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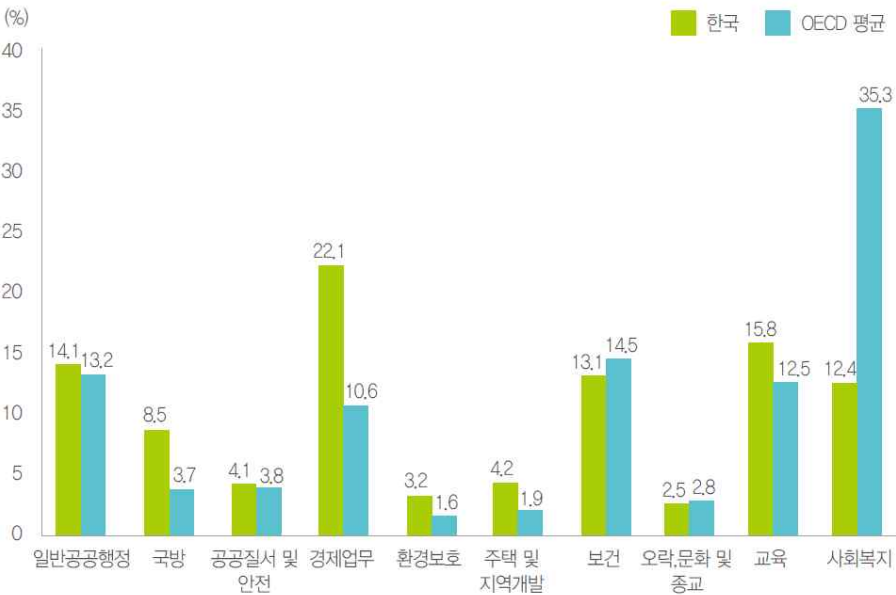
재정의 역할은 조세의 역할과 상당 부분 겹치는 모습을 보인다. 이는 조세가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되며 정부는 조세제도를 통해 재정정책을 시행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정의 한계점을 살펴보면, 공공재 생산에서 다소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여줌과 동시에 조세를 이용한 소득배분기능은 위의 조세의 한계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소득배분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경기조절의 기능 또한 다양한 가치관(복지정책을 통한 형평)의 대립으로 인하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 해외 비교를 통한 재정제도의 한계점

재정규모를 ‘일반정부 총지출’이라는 기준에서 볼 때(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 그리고 비영리 공공기관 일부도 포함한 재정규모) 대한민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은 2013년 GDP의 31.1%로 전망된다. 한편, OECD 회원국의 평균은 42%이다. 이는 대한민국의 재정지출이 낮으며 대표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이나 덴마크와 비교한다면 그 차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재정지출 비중이 작은 것은 아래의 <그림 V-1>에서 나타나듯이 복지 분야의 지출이 상당히 낮기 때문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V-1> 정부의 기능별 지출에 따른 OECD 평균 비교



자료 : OECD STAT 참고

### (3) 재정정책의 방향

재정정책은 앞에서 다룬 다양한 정책적 문제점들을(복지정책, 지방분권화, 소득의 재분배, 국가부채, 경제성장) 해결할 수 있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현재의 상황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고용정책 그리고 중산층의 회복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단기적인 플랜이 아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만들어져야 한다.

따라서 재정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과 방향에 맞는 플랜을 구성하고, 그 플랜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검토해봐야 한다. 그러므로 본 장은 앞으로의 장기적인 재정정책의 목표와 플랜을 제시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2025년까지의 고용 및 성장을 예상해보고자 한다.

## 2.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효과성 극대화 방안

### 1)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정책

#### 정부의 기존 산업별 지출 방향

정부의 지출을 소비지출과 투자지출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중 소비지출의 경우 교육 및 보건 부분에 사회복지 사업이 포함되고 있으며 비중이 상당히 낮은 모습을 볼 수 가 있다. 현재의 고령화 및 사회 복지수요가 많아지는 시점에서 낮은 사회복지 산업부문의 지출 비중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인다.

〈표 V-1〉 정부소비지출의 산업부문별 배분구조

		2007	2008	2009	2010	2011	평균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2.3	2.3	2.3	2.3	2.3	2.3
공공행정 및 국방		20.3	20.6	20.5	20.2	20.4	20.4
교육 및 보건	교 육	18.6	18.6	19.8	21.6	21.6	20.0
	의료 및 보건	18.6	18.6	19.8	21.6	21.6	20.0
	사회복지사업	1.5	1.5	1.4	1.4	1.3	1.4
위생서비스		1.2	1.3	1.2	1.1	1.1	1.2
사회 및 기타 서비스		1.0	1.1	1.1	1.1	1.1	1.1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자료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회예산처(2013)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 OECD 주요국의 복지지출 비중

아래의 〈표 V-2〉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의 GDP 대비 복지지출의 비중을 표로 나타낸 것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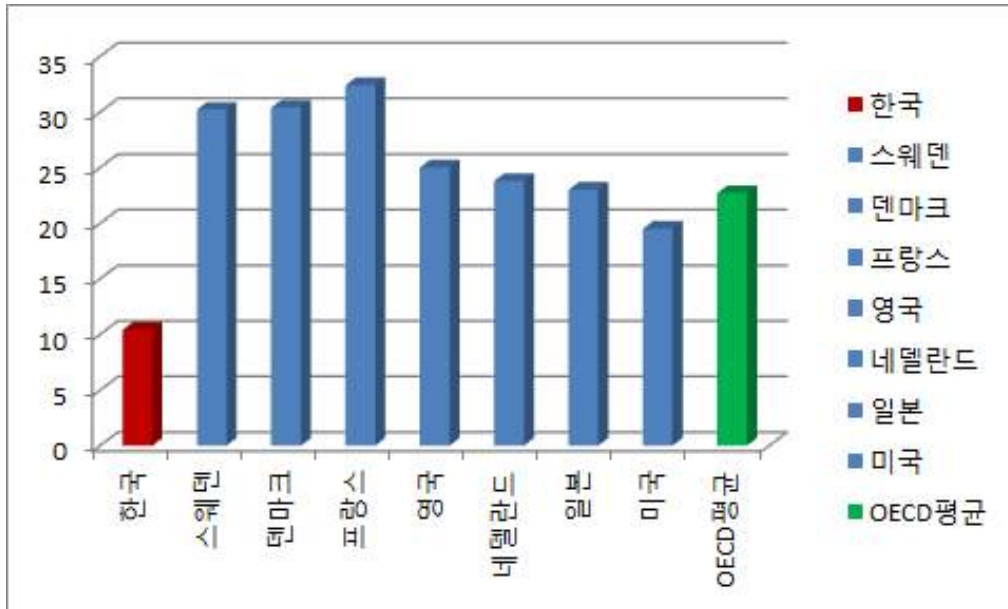
로 복지지출 비중의 감소, 유지, 증가로 나누어서 국가를 분류하였다. OECD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의 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과 미국의 비중을 보면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 또한 충분히 높아져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고 있다. 감소국으로 분류된 스웨덴 및 핀란드의 경우는 92년도 33%대에서 28%대로 감소한 경우이며 복지에 대한 지출 비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고 있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서 대체로 복지에 관련된 지출은 20%대로 올라야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표 V-2〉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2008	2009	2010	2011	2012
감소국	스웨덴	27.5	29.8	28.3	27.6	28.2
	핀란드	25.3	29.4	29.4	28.6	29
	네덜란드	20.9	23.2	23.5	23.7	24.3
	노르웨이	19.8	23.3	23	22.6	22.1
유지국	독일	25.2	27.8	27.1	26.2	26.3
	스페인	22.9	26	26.5	26	26.3
	영국	21.8	24.1	23.7	23.9	23.9
	미국	17	19.2	19.9	19.7	19.4
증가국	대한민국	8.4	9.6	9.2	9.2	9.3
	프랑스	29.8	32.1	32.2	32.1	32.1
	이탈리아	25.8	27.8	27.8	27.6	28.1
	그리스	22.2	23.9	23.3	23.5	23.1
	일본	19.9	22.4	..	..	..
	포르투갈	23.1	25.6	25.6	25.2	25
	OECD - Total	19.9	22.1	22	21.7	21.7

자료 : OECD Stat 참고, 최재성의원실 OECD 주요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변화 인용

〈그림 V-2〉 국가별 복지지출 비중



자료 : OECD(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Sep 2013) 보건복지부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지출의 변화

정부 부분의 지출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 해 나갈 수 있다. 최근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고용문제, 중산층 문제, 고령화 등의 사회복지 문제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데, 이는 사회복지의 지출을 늘리면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사회복지의 지출비중을 조정함에 따라 달라지는 고용의 차이를 다음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알아볼 것이다. <표 V-3>을 보면 대한민국은 토목 및 특수건설 그리고 공공행정 및 국방에 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의 비중을 늘리기 위해서는 조세수입과 재정의 조정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표 V-3〉 주요 재정지출대비 지출비중과 고용유발 승수

	재정지출대비 지출비중	고용유발승수
선철 및 조강	-0.1	0.01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0.1	0.04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0.1	0.06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0.2	0.01
컴퓨터 및 사무기기	0.3	0.01
가정용전기기기	0	0
정밀기기	0.1	0.03
자동차	0.2	0.02

선박	0.1	0.01
기타 수송 장비	0.2	0.01
건축건설	7.2	0.83
토목 및 특수건설	14.3	1.02
도소매	0.1	0.73
부동산	0.4	0.07
연구기관	1.7	0.29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1	0.27
공공행정 및 국방	40	3.26
교육서비스	15.7	2.46
의료 및 보건	16.5	1.38
사회복지사업	1	0.37
위생서비스	0.9	0.13
출판 및 문화서비스	0.9	0.14
합 계	10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제한된 기본증수모형의 시나리오별 산업별 취업유발효과 인용 및 재구성

## 2) 재정효율화 방안

### (1) 국가 예산 배분의 문제

국가예산 중 공공기관에 지출되는 예산은 2013년 기준 41.1조 원이다. 이는 정부 총지출의 11.8%를 차지하는 큰 부분이다. 이 중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직접 들어가는 예산은 공공기관 지출 예산의 56.2%인 23.1조 원이다. 준정부기관의 지출 비중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아래의 성장률과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특이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V-3>에서는 예산 증가율을 1기 이전 자료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2013년 예산계획을 세우기 위해 2012년의 GDP 자료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자료를 보면 정부는 성장률에 맞춰서 예산의 증감을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경제성장률보다 증가율이 다소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서 이와 같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의 예산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맞게 조정하여 2013년 예산안 조정을 시행하려 한다. 2004년부터의 누적경제성장률 33%를 이용하여 2005년도의 예산인 10.2조에서 33% 증가시킨 결과는 13.566조로 산출 됐다. 다음의 결과를 가감해본 결과 약 9.5조의 추가 예산이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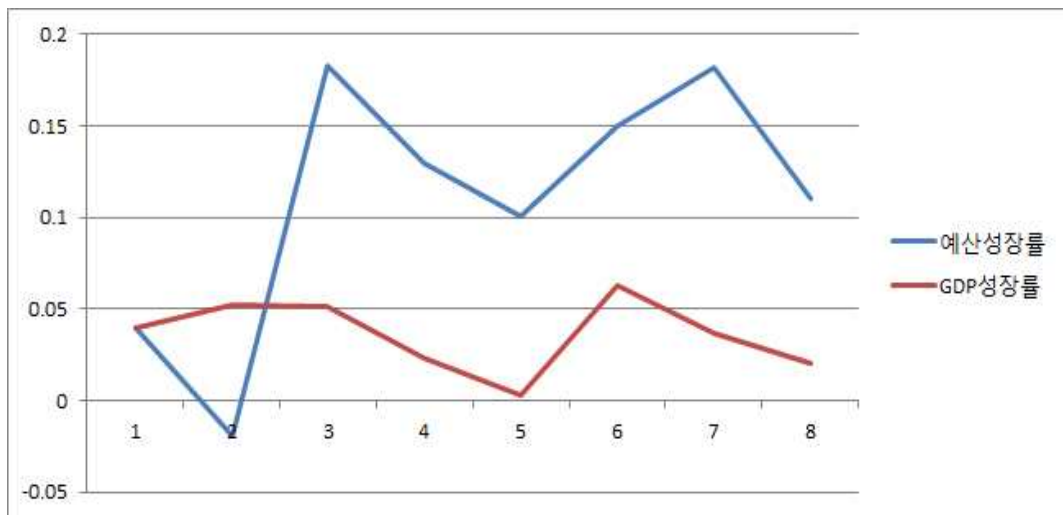
〈표 V-4〉 위탁집행형 준 정부기관 직접지원 현황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출연금	3.6	4.4	4.3	4.2	4.7	5.9	6.9	7.7	5.4	12.0
출자금	0.04	0.03	0.08	0.06	0.02	0.005	0.01	0.04	0.05	3.4
보조금	4.6	4.7	5.1	5.1	5.9	7.2	7.7	9.3	9.9	0.1
부담금 및 이전수입	0.8	0.9	1.1	1.0	1.7	0.8	0.6	0.6	1.2	7.6
합 계	9.1	10.2	10.6	10.4	12.3	13.9	15.3	17.6	20.8	23.1
증가율		12%	4%	-2%	18%	13%	10%	15%	18%	11%
경제성장률*	4.60%	4.00%	5.20%	5.10%	2.30%	0.30%	6.30%	3.70%	2.00%	
GDP	832.30	865.20	910.00	956.50	978.50	981.60	1,043.7	1,082.1	1,104.2	
누적성장률	예산성장률		126%		경제성장률		33%			

\* ECOS경제성장률 인용

자료 : ECOS, NABO 2004-2013년 자료 사용

〈그림 V-3〉 경제성장률과 직접지원 현황



자료 : ECOS, 국회예산처 2004~2013년도 자료

주) 예산증가율은 T-1기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음

### 3) 재정정책의 고려사항

#### 사회의 양극화 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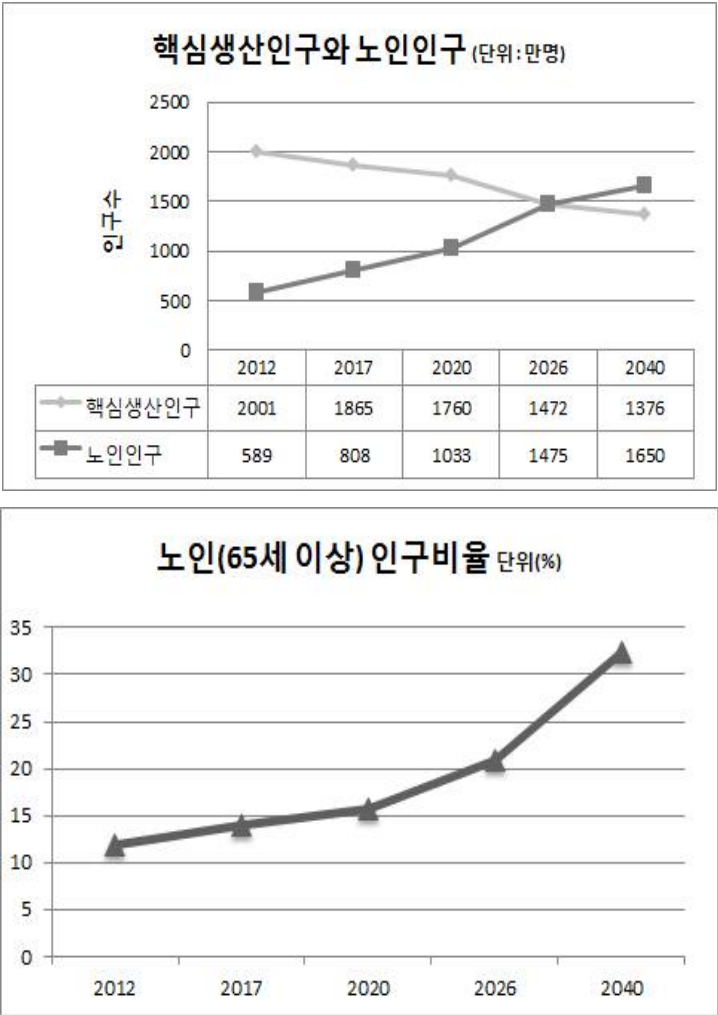
최근 대한민국은 사회적으로 양극화에 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조세제도와 함께 재정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재정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조세제도와 발맞춰서 재정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조세제도의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 조정으로 이를 수행했다면, 재정정책에서는 복지재원의 지출을 증대시켜서 중산층을 회복시키고 이를 통해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

### 인구의 고령화와 실업의 문제

한국사회의 산업구조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며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청년 실업이 맞물려 사회의 안전망이 약화되고 있다. 이에 맞춰서 한국 정부는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인구구조의 변화를 모색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다.

〈그림 V-4〉 핵심생산인구와 노인인구



주) 핵심생산인구(25세~49세)  
 자료 : 통계청

### 성장과파의 조화로운 재정정책

앞으로의 대한민국은 그동안의 성장방식으로는 저성장의 사이클(Cycle)에서 벗어나기가 힘들게

되었다. 즉, 포용·창조·생태·협력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전략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따라서 복지와 노동조건을 통한 성장, 환경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한 성장,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재정정책을 고려해야 한다.

### 사회복지사업비중 증대에 따른 지출비중 조정필요

본 보고서에서 다루었던 조세수입과 재정의 효율화로 창출될 수 있는 수입을 가감하여 새로운 재정 지출 변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아래의 <표 V-5>의 전체 349조에서 위의 재정효율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9.5조와 세수확충으로 얻을 수 있는 31.9조를 사회복지 부분 지출로 국한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재정지출에서 40%의 비중을 가지고 있던 공공행정 및 국방 부문에서 공공행정 부분을 조정하여 34.15%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복지부문의 지출은 고용승수에 가중치를 두어 각각 배분하였다. 그 결과 사회복지사업은 약 3조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하여 재정지출 대비 1.83%로 증가하였고, 의료 및 보건사업은 약 14조의 추가 지출로 인해 재정지출 대비 18.79%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교육서비스의 경우 24조의 추가지출로 기존 15.7%에서 20.68%로 상승하였다. 41.4조의 추가 재정지출이 발생하는 구조로 변모하게 되었다. 추가적으로 토목 및 특수건설이 기존 14%를 차지하던 것에 비해 13.1%로 감소하게 되었다.

<표 V-5> 재정지출의 변화방안

2013년 기준		단위 : %, 원	
지출 분야	재정지출	변경 사항	변화방안
선철 및 조강	-0.1		-0.09
일반목적용 기계 및 장비	0.1		0.09
특수목적용 기계 및 장비	0.1		0.09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0.2		0.18
컴퓨터 및 사무기기	0.3		0.27
가정용전기기기	0		0.00
정밀기기	0.1		0.09
자동차	0.2		0.18
선박	0.1		0.09
기타 수송 장비	0.2		0.18
건축건설	7.2		6.60
토목 및 특수건설	14.3		13.10
도소매	0.1		0.09
부동산	0.4		0.37
연구기관	1.7		1.56
사업관련전문서비스	0.1		0.09
공공행정 및 국방	40	9.5조	34.15
교육서비스	15.7	+24조	20.68
의료 및 보건	16.5	+14조	18.79



사회복지사업	1	+ 3조	1.83
위생서비스	0.9		0.82
출판 및 문화서비스	0.9		0.82
합 계	100		100

#### 4) 재정정책의 시뮬레이션

##### 조세와 재정정책 이후 추가되는 약 41조 원에 관련된 재정정책

본 장은 IV장과 V장에서 알아본 조세정책들과 재정정책들의 시행 이후 얻을 수 있는 약 41조 원과 관련된 재정정책을 기획하여 고용유발 효과를 알아보았다.

재정의 지출 방안은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구성하여 고용유발 효과를 알아보았다. 복지부문의 지출에 약 41조 지출하였을 경우 GDP 대비 복지 관련 지출이 12.1%가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에 지출하는 정도에 따른 고용 정도는 지출의 비중이 낮을수록 2014년 고용 정도는 높았으나(고용유발 승수의 차이 때문에) 이후 사회복지 사업의 GDP 비중이 낮다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공공행정 및 국방의 높은 고용승수로 인하여 다른 사업으로의 지출을 변화했을 때는 고용 정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중산층의 재건을 위한 지출을 하려면 복지 측면의 지출이 필요하다.

##### 시뮬레이션의 도출 과정

아래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고용이 산출되기 위해서

$\sum_{i=1}^k E_{iN}$ 의 식을 사용하였으며, 이 식에서  $i$ 는 정부가 지출하는 산업분야를 의미하며  $E$ 는 고용된 숫

자를 의미한다.  $N$ 은 연도를 뜻함 따라서  $\sum_{i=1}^k E_{iN}$ 의 의미는 정부가 지출한 사업이 K 개만큼 있을

때 사업별 고용수의 총합이라 볼 수 있다. 위의  $E_{iN}$ 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산출 될 수 있다.

$E_{iN} = GDP_N * \beta_{iN} * \gamma_i$  N년도 GDP와  $i$ 사업의 정부지출 비중  $\beta_i$ 를  $i$ 산업의 1원당 고용유발 승수인  $\gamma_i$ 로 곱해준 값이다. N년도 GDP를 전년도의 재정지출에만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고 다음의 식을 산출하였다.

$$GDP_N = GDP_{N-1} + (g_{n-1} * \tau) + (g_{n-1} * v)$$

전년 GDP  $GDP_{N-1}$ 에 전년도 재정지출  $g_{n-1}$ 과 재정지출 승수  $\tau$ 를 곱한 값과 전년도 재정지출에 조세수입승수  $v$ 를 곱한 값을 더해서 구하였다.

$$\sum_{i=1}^k E_{iN} \quad \langle \text{식 1} \rangle$$

$$E_{iN} = GDP_N^* \beta_{iN}^* \gamma_i \quad \langle \text{식 2} \rangle$$

$$GDP_N = GDP_{N-1} + (g_{n-1}^* \tau) + (g_{n-1}^* v) \quad \langle \text{식 3} \rangle$$

〈표 V-6〉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과 고용유발 정도

	사회복지관련 지출비중			
	100%	70%	50%	20%
2014년 고용정도	808,068명	824,999명	836,286명	853,217명
사회복지관련 추가고용	65,828명	41,498명	25,278명	948명
사회복지/GDP	12.1%	11.2%	10.5%	9.6%

사회복지관련 사업에 지출하고 남은 비중은 공공행정 및 국방으로 돌렸을 때의 상황임

#### 사회복지 지출비중

이상에서 IV장에서 알아본 조세정책들의 시행 이후 얻을 수 있는 41.467조와 관련된 재정정책을 기획하여 고용유발 효과를 알아보았다. 복지지출 비중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정책을 구성하여 고용유발 효과를 알아본 결과 100% 모두 사용하였을 때 사회복지 분야로 65,828명이 추가로 고용이 창출되는 모습을 알 수 있었다.

### 3. 재정정책 중장기 로드맵

#### 조세제도의 조정

IV장에서 알아본 조세정책 중 소득세와 법인세의 추가구간 신설 및 세율 조정으로 소득세 6조 6434.3억 원, 법인세 10조 9292억 원 그리고 부가가치세 11조 7753.6억 원의 추가 세수 발생이 예상된다. 거기에 에너지세와 관광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게 될 시에는 에너지세 1조 1200억 원, 관광세 1조 5000억 원이 예상되며, 2013년 기준 총 31조 9677억 원의 추가 세수가 예상된다.

이후 2016년에는 한국형 Finance Act 시행으로 더욱 투명한 조세정책으로 다가갈 수 있는 전략을 구상해야 하며, 2018년에는 통일세(공동세 및 연대세의 제도를 이용한 세제)의 도입을 논의해 볼 필요성이 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복지에 대한 시민적 의식의 변화에 맞춰 소득세의 비율과 법인세 비율의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2025년까지 안정적인 통일세의 구축과 재조

정의 안정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재정제도의 로드맵

추가적으로 발생한 세수 31.9조(2013년 기준)를 복지사업에다 전액 투입 시, 정부의 복지지출(교육, 의료, 보건, 사회복지를 합한 금액)이 150조 4078억 원(2014년 기준 예상액)으로 GDP 대비 복지 부분이 11.4%로 상승한다. 게다가 재정의 효율화 극대화 방안을 위해 조정한 9.5조를 복지지출로 조정할 시 복지지출 금액은 160조 730억 원으로(2014년 기준 예상액) GDP대비 복지 부분이 12.1%까지 상승한다.

위에서 발생한 약 41조의 추가예산은 경제가 성장하는 만큼 함께 성장하게 된다. 본 보고서의 시뮬레이션은 연간 약 2.05%씩 GDP가 성장한다고 산출되었으며, 재정지출 또한 2.05%씩 성장하는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 이는 박근혜정부가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작성한 공약가계부에서의 2017년까지의 134.8조 원보다 더 많은 재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가적으로 위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2015년부터는 토목사업의 축소 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지속적인 토목사업에 투자하였지만 성장의 성과가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잃어버린 20년’ 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무조건적으로 토목사업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이후 조세전략의 Finance Act에 발맞춰 비과세와 감세를 신중적으로 운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해야 하며, 국민과 소통을 할 수 있는 조세제도의 시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7년부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용 토목사업의 축소와 복지사업의 추가배정이 필요하며, 2020년에는 복지예산을 더욱 증대시켜 GDP 대비 14% 이상으로 올리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 고용의 창출 효과

로드맵 상의 고용창출 효과는 다음의 가정에서 산출 되었다.

우선 정부의 재정지출은 GDP 대비 일정한 재정지출을 하며, 재정지출 승수 0.49 와 재정수입 승수 -0.42로 매해 일률적이며, 각 사업별 고용승수가 각각 일정하게 유지될 때 다음과 같은 고용 수준이 산출되었다. 본 보고서에서 사용된 고용승수와 관련된 자료는 국회예산처(2013) 재정지출의 고용 효과 중 일반형을 사용하였으며, 재정 수입 및 지출의 승수는 조세연구원(2013) 재정지출과 거시경제정책의 승수를 인용하였다.

결과 정부의 재정지출에 따른 고용의 창출 효과는 808,068명(2014년 기준)이 예상되며 복지로 인한 추가적인 고용 효과는 고려하지 않았다.

〈그림 V -5〉 신성장동력을 위한 장기 로드맵

	신성장동력을 위한 장기 로드맵							
연도	‘14	‘15	‘16	‘17	‘18	‘19	‘20	‘25
<b>조세 전략</b>	소득세 및 법인세 개정 에너지세 및 관광세 및 재정 효율화 도입	-	Finance Act 시행	-	공동세와 연대세의 도입 (통일세)	조세제도의 선진국화	소득세 비율 법인세 비율 재조정	통일세의 안정화
<b>재정 전략</b>	복지사업에 추가세입+재정 효율화 방안 41.467조 추가 (2013년 기준)	토목사업 축소 검토	비과세와 감세 이용하여 안정적인 재정운영	토목사업의 축소 및 복지 사업 추가배정	연대세를 통한 통일재원확보	재정지출의 구조개편	복지예산의 증대 토목사업 및 경제업무 비중 감소	안정적인 통일재원확보
<b>장출 효과</b>	고용창출 808,066명 예상GDP ₩1321조	고용창출 824,655명 예상GDP ₩1346조	고용창출 841,582명 예상GDP ₩1376조	고용창출 858,857명 예상GDP ₩1404조	고용창출 876,486명 예상GDP ₩1433조	고용창출 894,477명 예상GDP ₩1463조	고용창출 912,837명 예상GDP ₩1493조	예상GDP ₩1652조 (일정한 비율로 재정지출 했을 시)
<b>특이 사항</b>	GDP대비 복지 (12.1%) 복지국가의 시발점	-	투명한 조세 재정 정책	(토목사업 10 조 조정 하면 0.8%상승)	통일준비	-	GDP대비 복지 15%까지 올려야함	보편적 복지 국가

## 4. 결론

### 신성장동력을 통한 성장을 위한 한국의 선택

신성장동력을 통한 좋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알맞은 재정제도가 필요하다. 그중 가장 적절한 재정제도는 복지지출이라 판단된다. 그 이유로는 복지지출을 통해서 현 사회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복지지출을 얼마나 해야 하는가?

일단 복지지출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복지지출에 따른 분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복지지출에 따른 분류로는 미국형과 북유럽형 그리고 중간국가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한국의 특성상 국민의 요구와 국가구조의 유사성을 따져봤을 때 장기적으로 미국정보단 북유럽형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하지만 스웨덴의 구조로 바로 바뀌기에는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중간국가형 모델(네덜란드, 영국)을 채택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으로 스웨덴과 같은 북유럽형 구조를 채택할 필요성이 있다.

복지지출에 따른 분류와는 별개로 퍼니스와 틸튼이 정의한 사회복지에 따른 국가의 유형을 보면 적극국가, 사회보장국가, 사회복지국가로 분류할 수 있다. 적극국가의 경우 자유와 경제적 효율을 중요한 가치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은 주로 경제정책을 통해 이루어진다. 반면 사회보장국가는 국민전체의 생활안정을 중요시하며 완전고용과 기회균등의 실현을 위해 국민 생활에 대한 최저수준을 보장해주는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국가는 스웨덴 처럼 평등과 국민화합을 기본방향으로 삼고 국민의 최저수준 이상의 복지를 보장하고 각종 공익사업

과 권력의 분산 그리고 시민참여의 확대를 추구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는 사회복지국가이고 현실에 맞는 목표는 사회보장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V-7〉 복지의 유형과 한국의 나아갈 길

복지 유형 (퍼니스 & 톨튼)	미국형 (적극적 국가)	중간형 (사회보장국가)	북유럽형 (사회복지국가)
대표적 국가	미국, 캐나다 등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주요국의 평균 고용률	71.9%	73.3	73.9%
복지의 유형	잔여주의 <sup>37)</sup>		보편주의 <sup>38)</sup>
공공부문 정부크기	소	중	대
사회복지와 경제, 산업 <sup>39)</sup>	복지와 산업 분리		복지와 산업 밀접관계

〈그림 V-6〉 미래한국의 국민부담과 복지수준

국민부담률<sup>40)</sup>

초고부담 (40%이상)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프랑스,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이태리		
고부담 (평균이상 30%대)		아이슬란드, 체코, 에스토니아	대한민국, 헝가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룩셈부르크, 영국	독일		
OECD평균 (33.8%)						
중부담 (평균이하 30%대)		이스라엘, 뉴질랜드 폴란드, 캐나다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저부담 (20%대)	멕시코, 터키, 칠레	스위스, 슬로바키아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아일랜드, 일본			
	저복지 (15%미만)	중복지 (15-22.1%)	OECD 평균 (22.1%)	고복지 (22.1-25%미 만)	초고복지 (25-30%)	GDP대비 복지지출

37) 잔여주의란 자산·소득만으로 대상자를 선별

38) 보편주의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기준에 따른 선별원칙

39) '미쉬라'는 복지국가를 복지과 산업의 관계에서 바라보았음

40) 국민부담률=조세부담률+사회보장부담률

조세부담률= (국세+지방세)/국민소득, 사회보장부담률 = 사회보장부담(의료보험 등등)/국민소득

### 신성장동력을 통한 성장을 위한 한국 조세·재정제도의 개선방안

균형성장, 동반성장, 고용창출성장 등을 위해서는 발전주의 국가에서 인권과 삶의 질을 중시하는 복지국가로의 도약이 필요하며, 적정부담 적정복지(네덜란드 또는 영국 수준)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성장 동력의 힘이 되어야 한다.

즉, 현재 대한민국은 산업과 분리된 복지를 산업과의 밀접한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조세와 재정정책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 시점에 알맞은 조세제도는 환경 부문을 강조하는 에너지세, 새로운 관광발전을 위한 관광세 도입, 그리고 소득의 불균형 해소와 동반성장을 위한 소득세와 법인세의 변경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재정제도에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재정의 효율화를 꾀하여 과다 지출을 줄이고 복지에 관련된 지출을 중간국가까지 천천히 올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에 그동안 주력해왔던 SOC사업(토목사업) 등 대규모 토건사업을 줄여야 한다.

〈표 V-8〉 신성장동력을 위한 한국의 조세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신성장동력을 위한 한국의 조세 재정제도의 개선방안			
목표수준	네덜란드, 영국 (중간국가형 모델)		신성장동력과 연관부문
	적정 부담, 적정 복지		
조세제도	소득세	소득구간 2개 증설 최대소득세율 43%	소득불평등완화 동반성장
	법인세	법인세구간 1개 증설 최대법인세율 27%	
	부가가치세	10% → 12%	
	관광세	골프장이용세 및 호텔숙박세 관광수입의 10%	관광산업 성장
	에너지세	발열량에 따른 과세	친환경성장
재정제도	재정효율화	공공기관지출 9.5조 감축	재정의 효율화
	복지비율	현행9% → 12% 이후 점차적으로 22% 까지	포용성장의 기 반
	SOC지출감소	체계적으로 줄여 나가야함	

## 제6장 맺음말 : 충청남도를 위한 제언

충청남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앞으로 대한민국에 새롭게 요구되는 신성장 동력을 충청남도 또한 함께 발굴하고 실천해야 한다. 국가가 적정복지의 수준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세수와 더 많은 세출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발맞춰 충청남도의 세수와 세출의 수준도 적정복지 수준으로 증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 세수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재정력(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천인 행정 부분의 혁신을 통한 세입과 세출의 투명성의 확보와 나아가서 누구나 일할 기회가 있는 땅 그리고 온 가족에 행복이 가득한 땅이 되기 위한 복지의 강화와 새로운 서해안 시대를 여는 지역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위와 같은 사항을 <표Ⅵ-1>에 제시해 보았다.

〈표Ⅵ-1〉 충청남도의 입장

충청남도의 입장	충청남도 재정력의 강화
	투명성의 확보
	복지제도의 강화
	지역개발

우선 다양한 복지나 지역개발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세수가 필요하게 된다. 세수 기반이 취약하다면 충청남도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고 지속적인 복지의 제공과 지역개발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즉, 충청남도의 재정 자립도를 이전 보다 높일 필요성이 있다.

<표Ⅵ-2>에서 충청남도의 지방세 수입은 1조 900억 원으로 일반회계 총 예산액 3조 9500억 원의 27.6% 구성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 기준으로 2,087억 원으로 5.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왔다. 보조금은 2조 687억 원의 수준으로 전체 예산의 52.4%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아 세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비중을 더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Ⅵ-2〉 충청남도의 세입과 세출

단위 :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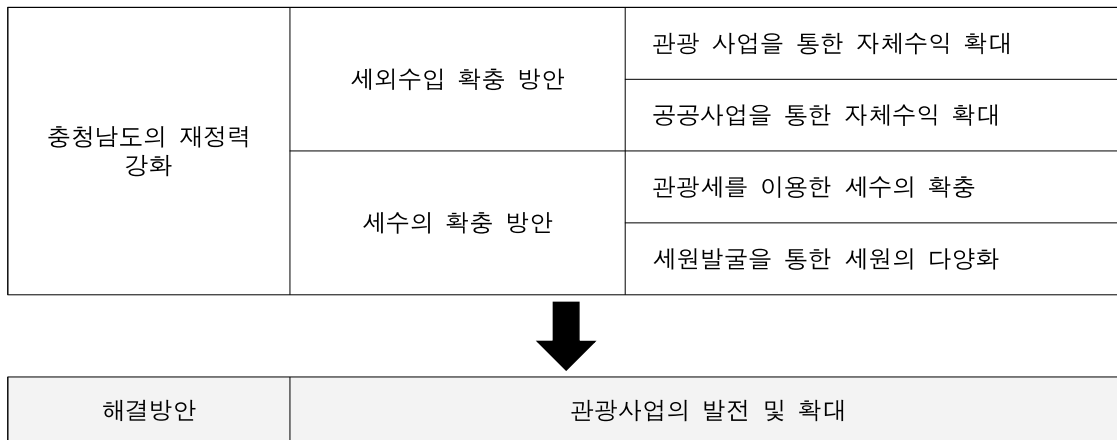
세입			세출	
자체수입	12,987		일반공공행정	3,423
	지방세	10,900	공공질서안전	2,469
	세외수입	2,087	교육	2,461
의존수입	26,513		문화 및 관광	1,405
	지방교부세	5,246	환경보호	3,438
	국고보조금	20,687	사회복지	9,363
	지방채	580	보건	748
			농림해양수산	7,860
			산업중소기업	707
			수송 및 교통	2,092
			국토지역개발	2,277
			과학기술	67
			예비비	473
			기타	2,717

자료 : 충남 넷

세외수입의 확충방안으로서는 관광사업 등의 자체 수익사업의 시행 또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수입 확대 등이 있다. 다음으로 지방세수입의 비중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세의 수입구조를 더욱 강화하는 방법과 그리고 다양화하는 방법이 있다. 최근 일어난 취득세 영구인하 발표는 충청남도의 지방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세원의 약화로 이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세원발굴을 통한 세원의 다양화를 모색해야 한다. 위의 해외사례에서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통해 관광세가 지방의 재정 건전성과 세수확보에 도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관광세가 해결방안으로 지목될 수 있는데 관광세가 많이 걷히기 위해서는 충청남도의 관광이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현재 충청남도의 경우 온천과 테마 마을 등이 잘 갖추어져 있다(예를 들어 아산 스파비스). 일본의 경우 온천에 입탕세 등을 부과하여 온천 또한 지방세의 세원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충청남도의 경우도 입탕세와 관련된 관광세를 도세로서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충청남도의 관광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확충한다면 재정력의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게다가 세외수입과 세수를 공통으로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 〈표Ⅵ-3〉 충청남도의 재정력 강화 방안





다음으로 충청남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다. 각 시·도는 투명성을 위해 행정의 개혁 및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게다가 2013년 6월 19일 대통령 주재 “정부 3.0 비전 선포식”에서는 정보 공개를 통한 도민의 참여와 소통의 폭을 넓힌다고 밝혔다. 본 보고서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Finance Act의 사례를 충청남도에 도입하여 세입과 세출 과정에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방세의 비과세, 감세에 대한 정책에 도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를 제시한다. 일반적인 행정 개혁에는 대부분 정보의 공개가 우선되고 있다. 그리고 간담회 정도가 추가적으로 들어간다. 사실 도의 입장에서 세입과 세출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이런 중요한 부분에 도민들이 감세와 비과세의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면서 도민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충청남도에 대한 이해의 증대가 행정의 투명성도 높이고 소통을 한층 강화 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표 VI-4〉 충청남도의 투명성 확보 방안

일반적인 행정 개혁	보고서의 제안	예상효과
정보공개 및 구조개편	정보공개 및 구조개편	투명성과 소통의 증대
간담회	충남의 Finance Act (감세 및 비과세에 도민참여)	

그리고 지방 재정의 강화가 선행되어야 복지제도가 강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후 교육과 의료분야로 복지제도를 확대 시행한다면 미래와 현재를 아우르는 복지제도가 정착될 수 있다고 본다.

우선 교육의 경우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의 우수성이 중요시 된다.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교로 각지의 인재들이 모여든다면 산업과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지역 대학교의 역할을 지역 경제사회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을 대표하는 대학인 도립 대학교인 청양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교육복지

를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안한다. 청양대학의 등록금이나 대학원의 연구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 최근에 국가의 지원으로 높은 평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UGIST, GIST, DGIST 와 같은 신흥우수대학의 반열에 올라 설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충청남도의 우수 인재 양성과 다른 지역으로의 우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미래를 기약할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의료 부분에 대한 지원은 2010년 충남교육청이 실시했던 장애 학생 교육-복지-의료-고용 연계강화 프로그램 같이 노령 인구의 의료복지 뿐만 아닌 장애학생 및 유년기 인구의 의료와 교육 그리고 취업이 연관된 프로그램이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위와 같은 프로그램은 충청남도가 누구나 살고 싶은 지역으로의 탄생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리라 생각된다.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노령화 단계는 “은퇴했는데 먹고살 방법이 없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은퇴 이후의 삶과 경제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충청남도의 경우 2013충남사회지표를 참고했을 때 도내 인구 성장률은 0.51%로 전국평균인 0.42%보다 0.09%p 높게 나왔다. 그리고 노령화 추이 계수는 3.78로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수치를 보았을 때 현재 노령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 없을 것으로 보이나 보다 건전한 성장을 위해서는 젊은 인구와 노령 인구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노령인구를 대상으로 의료-복지-고용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버자원을 이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이 충남의 경제에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실 지금까지 젊은 인구를 육성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은 다양하게 존재해 오고 있다. 하지만 노령인구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앞으로 충청남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령인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충청남도의 지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표 VI-5〉 충청남도의 교육복지 및 의료복지 방안

	교육복지	의료복지 연계방안
보고서 제안	청양대 등 재정지원 강화	장애학생 및 노령인구 대상으로 한 교육-의료-복지-취업 연계방안
세부내용	청양대 등에 대한 등록금 및 연구지원비 강화	노령인구 및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진출을 위한 교육과 의료 그리고 취업을 연계
예상파급효과	충남의 미래 인재 양성 및 우수 인재 유출 방지	충남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유효수요 신장

마지막으로 지역개발에서는 복지제도와 마찬가지로 지방재정의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서해안 시대로의 돌입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적절한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지에 대하여 도민들과의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협의를 통해서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표 VI-6〉 충청남도의 입장과 발전방향

분야	방향	방안
세입	다양한 세원 확보	관광세
행정	투명성 증대	충남의 Finance Act 시행
복지제도	복지제도의 강화	교육과 의료 연계 제도 강화
개발	지역개발	도민들과의 충분한 협의

## 참 고 문 헌

- Bos, F. (2008). The dutch fiscal framework: History, current practice and the role of the central planning bureau. *Oecd Journal on Budgeting*, 8(1), 7-48.
- Brennan, P., & Ireland. (2001). *Tax acts*. Dublin: Butterworths.
- Carlson, C., & Metcalf, G.E. (2008). Energy tax incentives and the alternative minimum tax. *National Tax Journal*, 61(3), 477-492.
- Foreign tax credit relief all the foreign tax will be allowable up to the amount of the UK tax on a gain.(2010). *Taxation*, -(4249), 2.
- OECD, *Revenue Statistics* (2012)
- OECD, *OECD Tax Database* (2012)
- Shin Dong-Gyun. (2008). 제10장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의 양극화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8(7-2), 227-289.
- Wheatcroft, G. S. A., Oliver, D., & Stary, E. (2000). *British tax review*. London: Sweet & Maxwell.
- 강철승. (2006). 소득양극화해소방안(所得兩極化解消方案)으로서 부유세제도입방안(富裕稅制導入方案). *한국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2006(-), 1-14.
- 고영선, 이재준, 강동수, 안상훈, & 유경준. (2012). *견실한 경제성장과 안정적 사회발전을 위한 정책제언*. 서울: KDI.
- 곽태원, 최명근, 현진권, 이영, 전영준, 조성진, et al. (2006). *저성장 시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06-02(-), 1-474.
- 국세청, *보도자료*(2006~2009)
- 국중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국회예산정책처 (2012.5). *알기쉬운조세제도*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예산정책처. (2013). *한눈에 보는 대한민국 재정 2013*. 국회예산정책처.
- 김유찬. (2012). 재정확보를 위한 숨은 세원 발굴 방안. *규제연구*, 21(2), 79-125.
- 김유찬, & 이유향.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김필현, 이상훈, 박지현, 김소린, & 김진하. (2013).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보고서*, 2013(1), 1-165.
- 김혜선, 황종률, & 한국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실 거시경제분석과. (2013). *재정지출의 고용창출효과*.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김홍환. (2012). 한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재정관계 분석: 재정통제와 자율재원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지방재정논집*, 17(1), 75-102.

- 나성린, & 이영. (2003). 한국의 적정 조세부담률. 공공경제, 8(1), 95-116.
- 박성배, 홍정화, & 김선구. (2007). 소득세율 체계와 과세표준 구간의 공평성에 대한 세무전문가집단의 인식도 연구. 회계연구, 12(2), 311-340.
- 박승준, 윤용중 (2013) 분야별 재정지출의 경제성장 및 소득재분배 효과 예상, 정책연구 제 2권 제 1호 pp.71-95
- 박영철, & 한국경제연구원. (2008). 한국의 외환위기 10년. 서울: 한국경제연구원.
- 박정민, 정민석, & 류상일. (2013). 지방정부 재정위기의 진단과 재정위기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위기관리논집, 9(8), 115-138.
- 박정수.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박종국, & 이권석. (2006). 부유세의 도입과 조세공평성. 세무와 회계저널, 7(1), 27-49.
- 자료 : 안전행정부(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오윤, & 전병욱. (2010). 골프장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조세연구, 10(3), 343-378.
- 옥동석. (2010). 지속성장을 위한 재정의 역할과 과제 요약.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2010(4), 79-141.
- 은민수. (2012). 복지국가의 조세정치: 영국과 스웨덴의 조세개혁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9(2), 125-155.
- 이동진. (2007). 복지지출과 소득불평등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분석.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07(-), 1-25.
- 이영숙, 박용주, 홍현선, 신항진, & 국회예산정책처.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이창근. (2000). 일본의 지방재정위기와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논집, 5(1), 87-112.
- 이천현. (2010). 특집 : 탈세의 현황과 대책. 刑事政策, 22(2), 47-74.
- 장근호. (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서울: 한국조세연구원.
- 최성은. (2013). 복지재정과 자원조달. 재정학연구, 6(1), 57-93.
- 한국. (2013). 조세의 이해와 쟁점. 서울: 국회예산정책처.
- 한국관광공사. (2012). 숫자로 보는 한국관광. 서울: 한국관광공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통계정보센터,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정책정보통계센터. (2013).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집 필 자 ■

연구진 정성훈 · 김수현 · 강선아

전략연구 2012-**숫자** · 한국 경제사회 발전에 따른 재정 및 조세 전략과 충남의 과제

글쓴이 · 정성훈 외 /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발전연구원

인쇄 · 2013년 12월 31일 / 발행 · 2013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금홍동 101 (314-140)

전화 · 041-840-1230(기획조정연구실)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39

ISBN · 978-89-6124-181-6 93350

<http://www.cdi.re.kr>

© 2012, 충남발전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